

연구보고서(수시) 2016-03

OECD 국가의 복지 수준 비교 연구



김상호 · 정해식 · 임성은 · 김성아

【책임연구자】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주요저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공동연구진】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고서(수시) 2016-03

**OECD 국가의 복지 수준
비교 연구**

발 행 일 2016년 12월 31일
저 자 김 상 호
발 행 인 김 상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법신사
가 격 5,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ISBN 978-89-6827-346-9 93330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공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사회·경제적 변동요인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에 따라 복지지출의 규모 역시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 복지지출 수준은 123조 4천억 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31.9%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으며 복지지출에 대한 요구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연금을 비롯한 복지에 대한 수요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복지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되고 증대되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에 대한 평가와 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 국가의 복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의 복지 수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하여 2011년 조선일보사와 공동으로 KIHASA-Chosun Welfare Index(KCWI) 2011을 개발하였다.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그간 한국의 복지국가 수준의 변화에 대해 새롭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KCWI 2011에는 2000년대 말 세계적 금융위기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맥락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현시점의 종합적인 복지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표체계 및 가중치를 개선한 KCWI 2016을 이용하여 OECD 회원국들의 복지 수준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별 복지 수준을 비교할 목적으로 경제활력, 재정지속, 복지수요, 복지충족, 국민행복의 5개 부문을 선정하였으며, 부문별 개별지표를 선별하여 부문별, 지표별 순위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종합한 종합지수를 통해 OECD 국가들의 복지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만, OECD 회원국 간 복지정책 및 사회·경제적 환경이 상이하므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부문별 지표를 통한 복지 수준의 평가가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음을 미리 밝힌다.

본 연구는 김상호 원장의 책임하에 본 원의 정해식 부연구위원, 임성은 전문연구원, 김성아 전문연구원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무엇보다 연구에 유익한 의견과 조언을 제시해 준 경기대학교 박능후 교수, 서울대학교 안상훈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병목 본부장, 본 원의 윤강재 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201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13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연구방법	15
제1절 이론적 배경	17
제2절 지표의 구성 및 자료원	23
제3절 지수 계산방법	40
제3장 복지지표 산정 결과	47
제1절 KCWI 2016 개별지표별 순위	49
제2절 KCWI 2016 부문별 순위	72
제3절 KCWI 2016 종합순위	77
제4장 복지 수준 평가	79
제1절 OECD 국가별 지표 간 균형 비교	82
제2절 복지 수준의 유형별 비교	116
제3절 한국의 복지 수준 변화 평가	119
제5장 시사점	125

참고문헌	129
------------	-----

부 록	131
-----------	-----

부록 1. 가중치 산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표	133
--------------------------------	-----

부록 2. KCWI 2016 원자료	135
---------------------------	-----

부록 3. KCWI 2011 지표체계 및 가중치를 활용한 복지 수준 평가	140
--	-----

표 목차

〈표 2-1〉 OECD의 사회지표 틀 제안	17
〈표 2-2〉 OECD Better Life Index 지표 구성	20
〈표 2-3〉 복지 수준 측정 부문의 이해(PSR 개념도)	23
〈표 2-4〉 KCWI 2016 지표구성 및 자료원	38
〈표 2-5〉 KCWI 2011과 KCWI 2016의 부문 및 지표구성 비교	39
〈표 2-6〉 KCWI 2016 지표 표준화 방식	41
〈표 2-7〉 KCWI 2016 전문가 델파이 조사 응답자 분야별 특성	42
〈표 2-8〉 KCWI 2016 지표별 가중치	43
〈표 2-9〉 KCWI 2011 지표별 가중치	44
〈표 3-1〉 국가별 고용률 순위	49
〈표 3-2〉 국가별 실질경제성장률 순위	50
〈표 3-3〉 국가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순위	51
〈표 3-4〉 국가별 1인당 GDP 순위	52
〈표 3-5〉 국가별 국가채무 비율 순위	53
〈표 3-6〉 국가별 재정수지 비율 순위	54
〈표 3-7〉 국가별 국민부담률 순위	55
〈표 3-8〉 국가별 총부양비 순위	56
〈표 3-9〉 국가별 지니계수 순위	57
〈표 3-10〉 국가별 상대빈곤율 순위	58
〈표 3-11〉 국가별 경제고통지수 순위	59
〈표 3-12〉 국가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순위	60
〈표 3-13〉 국가별 건강보험 가입률 순위	61
〈표 3-14〉 국가별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순위	62
〈표 3-15〉 국가별 영유아 1인당 보육 공공사회지출액 순위	63
〈표 3-16〉 국가별 인구 1인당 장애연금 지출액 순위	64
〈표 3-17〉 국가별 공공사회지출 비율 순위	65
〈표 3-18〉 국가별 자살률 순위	66
〈표 3-19〉 국가별 합계출산율 순위	67
〈표 3-20〉 국가별 출생 시 기대수명 순위	68

〈표 3-21〉 국가별 삶의 만족도 순위	69
〈표 3-22〉 국가별 여가시간 순위	70
〈표 3-23〉 국가별 국가투명도 순위	71
〈표 3-24〉 국가별 경제활력도 순위	72
〈표 3-25〉 국가별 재정지속도 순위	73
〈표 3-26〉 국가별 복지수요도 순위	74
〈표 3-27〉 국가별 복지충족도 순위	75
〈표 3-28〉 국가별 국민행복도 순위	76
〈표 3-29〉 KCWI 2016 종합순위	77
〈표 4-1〉 경제적 자원을 이용하여 분석한 군집의 특성	117
〈표 4-2〉 복지집행을 이용하여 분석한 군집의 특성	118
〈표 4-3〉 복지 수준을 이용하여 분석한 군집의 특성	119
〈표 4-4〉 한국의 복지 수준 변화	120
〈표 4-5〉 KCWI 2016 지표체계 및 가중치로 측정한 2016년 부문 및 종합 지수	122
〈표 4-6〉 KCWI 2016 지표체계 및 가중치로 측정한 2011년 부문 및 종합 지수	123

부표 목차

〈부표 2-1〉 경제활력도	135
〈부표 2-2〉 재정지속도	136
〈부표 2-3〉 복지수요도	137
〈부표 2-4〉 복지충족도	138
〈부표 2-5〉 국민행복도	139
〈부표 3-1〉 KCWI 2011 지표체계 및 가중치로 측정한 2011년 부문 및 종합 지수	141
〈부표 3-2〉 KCWI 2011 지표체계 및 가중치로 측정한 2016년 부문 및 종합 지수	142

그림 목차

[그림 2-1] OECD의 Well-being and Progress 측정 체계	20
[그림 4-1] 호주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82
[그림 4-2] 오스트리아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83
[그림 4-3] 벨기에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84
[그림 4-4] 캐나다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85
[그림 4-5] 칠레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86
[그림 4-6] 체코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87
[그림 4-7] 덴마크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88
[그림 4-8] 에스토니아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89
[그림 4-9] 핀란드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90
[그림 4-10] 프랑스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91
[그림 4-11] 독일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92
[그림 4-12] 그리스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93
[그림 4-13] 헝가리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94
[그림 4-14] 아이슬란드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95
[그림 4-15] 아일랜드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96
[그림 4-16] 이스라엘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97
[그림 4-17] 이탈리아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98
[그림 4-18] 일본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99
[그림 4-19]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100
[그림 4-20] 룩셈부르크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101
[그림 4-21] 멕시코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102
[그림 4-22] 네덜란드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103
[그림 4-23] 뉴질랜드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104
[그림 4-24] 노르웨이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105
[그림 4-25] 폴란드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106
[그림 4-26] 포르투갈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107
[그림 4-27] 슬로바키아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108
[그림 4-28] 슬로베니아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109

[그림 4-29] 스페인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110
[그림 4-30] 스웨덴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111
[그림 4-31] 스위스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112
[그림 4-32] 터키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113
[그림 4-33] 영국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114
[그림 4-34] 미국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115
[그림 4-35] 경제적 자원(경제활력, 재정지속)을 이용한 군집분석	116
[그림 4-36] 복지집행(복지수요, 복지충족, 국민행복)을 이용한 군집분석	117
[그림 4-37] OECD 국가의 복지 수준 군집분석	118
[그림 4-38] 한국의 복지 수준 변화	121

Measuring and Assessing Well-being in OECD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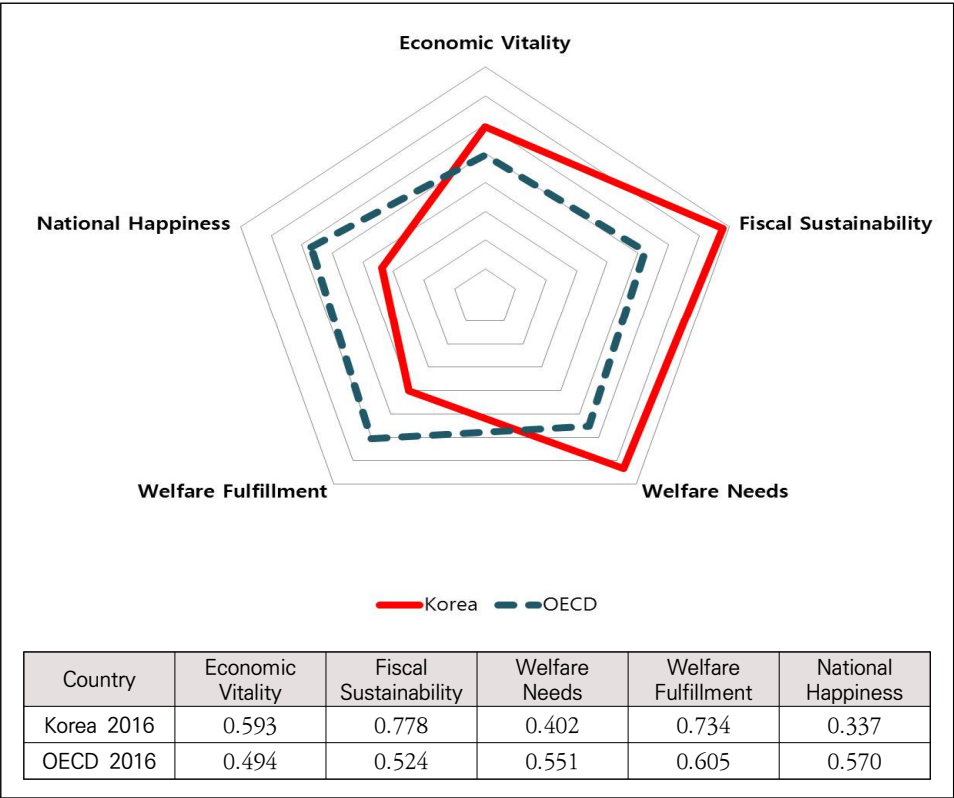
Global efforts to measure well-being and to integrate well-being indicators into the policy process became more significant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11,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developed the KIHASA-Chosun Welfare Index (KCWI) in order to examine the level of well-being across 30 OECD countries, in terms of economic, social, and demographic factors.

By applying the OECD Pressure-State-Response framework (2009) to the KCWI, the current study aims to explore the level of well-being among 34 OECD countries and to provide a broad view of well-being in Korea. The KCWI 2016 is classified into five areas: (1) economic vitality, (2) fiscal sustainability, (3) welfare needs, (4) welfare fulfillment, and (5) national happiness. A total of 23 indicators are used to measure and assess well-being across 34 OECD countries.

The results of the KCWI 2016 showed that Korea scored 0.593 for economic vitality, 0.778 for fiscal sustainability, 0.734 for welfare needs, 0.786 for welfare fulfillment, and 0.133 for national happiness. Korea's scores welfare fulfillment and national happiness are lower than the OECD average.

Figure 1 shows well-being scores for the five areas in Korea and in the OECD average.

Figure 1. Well-being scores in 5 Areas: Korea vs. OECD(KCWI 2016)



*Key word: level of well-being, economic vitality, fiscal sustainability, welfare needs, welfare fulfillment, and national happines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 국가의 복지 수준 및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국의 복지 수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1년 조선일보사와 공동으로 2000년대 말 세계적 금융위기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맥락을 반영하여 KIHASA-Chosun Welfare Index(KCWI) 2011(이하 KCWI 2011)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년이 지난 현 시점의 종합적인 복지 수준을 판단하고자 지표체계와 가중치를 개선한 KIHASA-Chosun Welfare Index(KCWI) 2016(이하 KCWI 2016)을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OECD 가입국들의 복지 수준을 비교하였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사회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욕구,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확보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자원의 정도를 이용해 복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OECD(2009)에서 제안한 PSR(Pressure-State-Response)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5개 부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경제활력'은 사회구성원이 현재 노동시장, 상품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다. 둘째, '복지수요'는 사회구성원 각각의 욕구의 총합으로서 가질 수 있는 욕구이다. 셋째, '재정지속'은 복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의 여력(餘力)이다. 넷째, '복지충족'은 국가가 구성원의 사회적 욕구에 실제 대응하는 정도이다. 다섯째, '국민행복'은 사회적 욕구와, 복지 노력을 통한 대응 간의 일치·불일치 정도에 대한 결과이다. 그리고 2011년에 제안한 KCWI 2011을 바탕으로 하여 영역 및 지표의 타당성, 국제비교 데이터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한 5개 부문, 총 23개 지표로 구성된 KCWI 2016을 제안하였다. KCWI 2011과 KCWI 2016의 부문 및 지표 구성은 다음과 같다.

4 OECD 국가의 복지 수준 비교 연구

〈요약표 1〉 KCWI 2011과 KCWI 2016의 부문 및 지표 구성 비교

KCWI 2011			KCWI 2016			
부문	지표 구성		부문	지표 구성		
경제 활력도	고용률		경제 활력도 (기간 평균)	고용률		
	실질경제성장률			실질경제성장률		
	생산성 증가율			노동생산성 증가율		
	1인당 GDP [미국 달러 기준, 구매력지수(PPPs) 기준]			1인당 GDP [미국 달러 기준, 구매력지수(PPPs) 기준]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 기준)			-		
재정 지속도	국가부채 비율		재정 지속도 (기간 평균)	국가채무 비율		
	재정적자율			재정수지 비율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기여금 제외)	
	사회보험 부담률				사회보장기여금	
복지 수요도	노인인구 비율		복지 수요도	충부양비 {(0~14세 인구+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상대빈곤율,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상대빈곤율, 가처분소득 기준)		
	실업률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 = 소비자물가지수+실업률		
	장애출현율(20~64세 인구대비)			-		
	산재발생률(인구 10만 명당)			-		
복지 충족도	공적연금 소득보장률		복지 충족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건강보장률	건강보험 가입률		건강보험 가입률(공공 및 민간)		
	실업급여 순 대체율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아동 및 보육지원율	0~2세 보육시설 등록률		영유아 1인당 보육 공공사회지출액		
		3~5세 보육시설 등록률				
		보육비 본인부담률				
	장애급여 수혜율			인구 1인당 장애연금 지출액		
	국가투명도			-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국민 행복도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국민 행복도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출생 시 기대수명			출생 시 기대수명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여가시간(연간)			여가시간(1일)		
	-			국가투명도		

주: 1) 밑줄 표시된 지표는 역기능 지표임.

2) KCWI 2011의 지표명은 원보고서 내용으로 인용하였음.

그리고 개별지표를 부문별 혹은 종합 지수와 결합시키기 위하여 국내의 경제, 사회, 보건, 복지, 인구 분야 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지표별 상대적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표별 표준화 및 가중치 부여를 통해 최종 5개 부문 및 종합 지수를 산출하였다. KCWI 2011을 도출하였던 김용하 등(2011)의 연구 시점에는 전 세계 각국이 금융위기의 파고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경제활력지표와 재정지속지표를 합산한 가중치가 39.3%에 이르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력 지표 및 재정지속지표에 대한 가중치 부여가 27.8%에 그쳤다. 반면에, 복지총족지표 및 국민행복지표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하였는데, 2011년에는 두 영역에 42.5%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52.3%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요약표 2〉 지표별 가중치

부문지표	비중	개별지표	지표 가중치	
1. 경제활력지표	16.8%	고용률	6.0%	35.8 %
		실질경제성장률	3.6%	21.5 %
		노동생산성 증가율	3.3%	19.4 %
		1인당 GDP	3.9%	23.4 %
2. 재정지속지표	11.0%	국가채무 비율	3.5%	31.4 %
		재정수지 비율	3.0%	27.5 %
		국민부담률	4.5%	41.2 %
3. 복지수요지표	19.9%	총부양비	4.4%	22.3 %
		지니계수	5.3%	26.7 %
		상대빈곤율	5.5%	27.5 %
		경제고통지수	4.7%	23.5 %
4. 복지총족지표	30.3%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8%	19.1 %
		건강보험 가입률(공공 및 민간)	5.1%	16.8 %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4.7%	15.4 %
		영유아 1인당 보육 공공사회지출액	4.3%	14.3 %
		인구 1인당 장애연금 지출액	3.4%	11.3 %
		공공사회지출 비율	7.0%	23.1 %
5. 국민행복지표	22.0%	자살률	3.5%	15.9 %
		합계출산율	3.5%	15.9 %
		출생 시 기대수명	3.2%	14.7 %
		삶의 만족도	4.7%	21.3 %
		여가시간	3.4%	15.5 %
		국가투명도	3.7%	16.7 %
계	100.0%	계	100.0%	

〈요약표 3〉 KCWI 2011 가중치

부문지표	비중	개별지표	지표 가중치	
1. 경제활력지표	20.5%	고용률	6.5%	31.5%
		실질경제성장률	4.0%	19.8%
		생산성 증가율	3.2%	15.5%
		물가상승률	3.8%	18.7%
		1인당 GDP	3.0%	14.5%
2. 재정지속지표	18.8%	국가부채 비율	3.8%	20.4%
		재정적자율	3.8%	20.4%
		조세부담률	5.6%	29.6%
		사회보험 부담률	5.6%	29.7%
3. 복지수요지표	18.2%	노인인구 비율	2.6%	14.2%
		지니계수	3.5%	19.5%
		빈곤율	4.6%	25.1%
		실업률	3.6%	20.0%
		장애인 비율	1.9%	10.2%
		산업재해 발생률	2.0%	11.0%
4. 복지충족지표	26.6%	공적연금 소득보장률	4.4%	16.3%
		건강보장률	4.4%	16.7%
		고용보장률	3.5%	13.3%
		아동 및 보육 지원율	4.0%	15.0%
		장애급여 보장률	2.7%	10.0%
		국가투명도	2.2%	8.4%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5.4%	20.3%
5. 국민행복지표	15.9%	자살률	3.0%	18.1%
		출산율	3.0%	19.2%
		평균수명	2.7%	17.0%
		삶의 만족도	4.0%	25.5%
		여가시간	3.2%	20.3%
계	100.0%	계	100.0%	

자료: 김용하 등(2011). p.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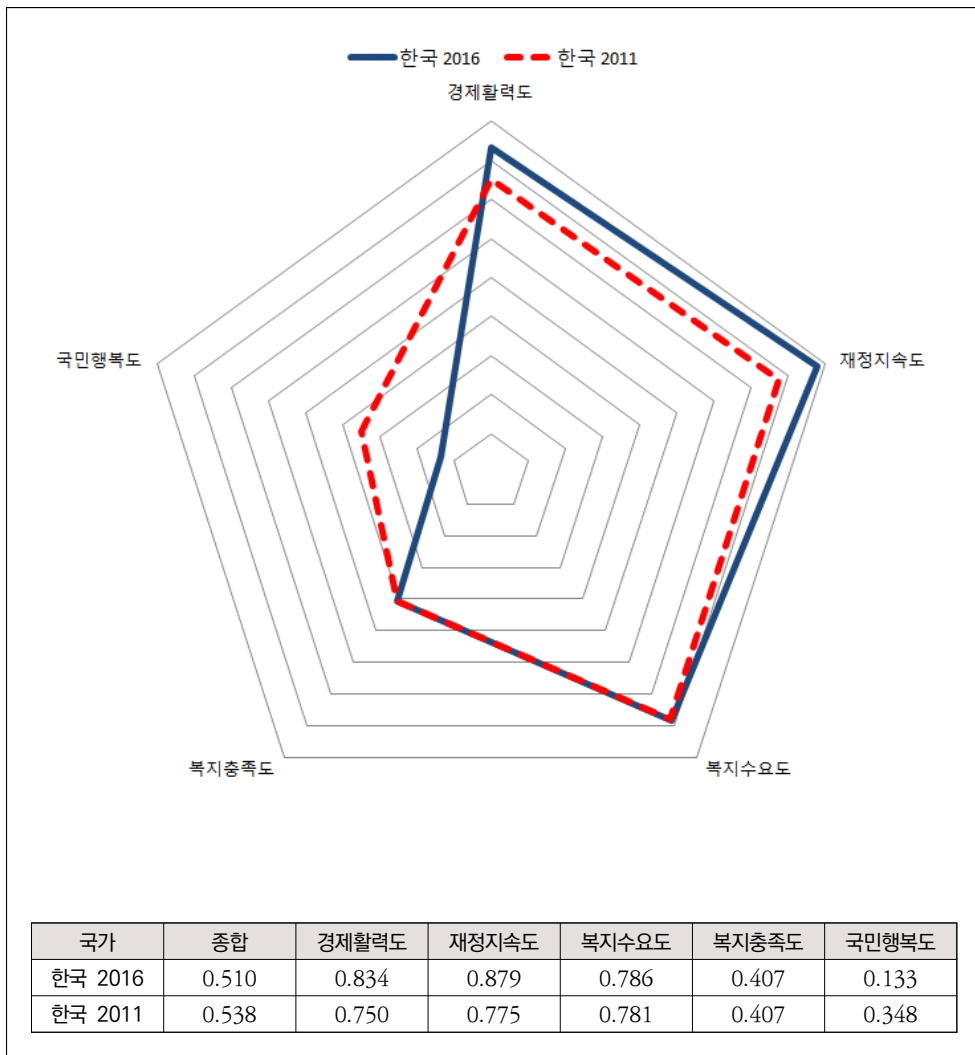
3. 주요 결과

한국의 복지 수준은 2011년 기준 23위에서 2016년 기준 21위로 두 계단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시점을 비교하기 위해 영역별로 다시 표준화한 경제활력도는 0.750점에서 0.834점으로 상승하였고, 복지수요도도 0.781점에서 0.786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한편, 복지충족도는 0.407점으로 두 시점이 동일하였다. 그러나 국민

행복도는 2011년 0.348점에서 2016년에는 0.133점으로 크게 하락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그간 종합 순위에서는 높아졌지만, 상대적 위치를 고려한 점수에서는 상위권 국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특히, 국민행복도가 그러하다.

[요약그림 1] 한국의 복지 수준 변화



4. 시사점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종합적인 복지 수준을 살피는 데 있어 경제적 관점에서 측정한 활력도와 재정지속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복지수요와 복지충족 역시 점수와 순위에서 개선되고 있다. 반면에 복지 수준을 협의로 정의할 경우에 더 적합한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는 국민행복도는 본 연구의 비교 기간 동안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이는 복지 수준을 측정하는 다른 지표와 달리 현실에서 쉽게 체감되는 국민행복도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로써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의 복지정책은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행복도 지표를 구성하는 개별지표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복지 수준 변화 추이를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복지 수준 측정 지표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하는 연구를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복지 수준, 경제활력, 재정지속, 복지수요, 복지충족, 국민행복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등 인구·사회·경제적 변동요인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 나은 복지정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복지는 어느 지점에 도달해 있으며, 다양한 복지환경 및 수요를 어느 수준으로 충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면서, 우리나라의 복지는 어떤 측면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우리나라 복지 수준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본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측정하는 기존의 방식은 일반국민의 체감과 거리가 있고, 복지를 너무 제한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단순히 국민총생산에 대한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을 통해 일차적으로 비교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복지수요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1인당 GDP 수준 등 경제성 지표를 활용하기도 하고 노인인구 비율을 반영한 복지지출 수준을 비교하는 등 복지지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복지지출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았음에도 국민의 생활은 오히려 활력이 있고 안정적이었다. 반면, 2016년 보건·복지·고용 부문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123.4조 원으로, 총예산의 31.9%에 이르는 등 현재 복지지출이 상당히 증가하였음에도 국민의 복지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복지 수준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 방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 국가의 복지 수준 및 국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복지욕구의 확대 및 다양화에 따라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종합적인 복지지표를 통한 국제비교가 활성화되고 있다. 2011년에 이를 반영한 OECD 국가 간 복지 수준 비교 연구¹⁾가 조선일보사와 공동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되었으며, KIHASA-Chosun Welfare Index(KCWI) 2011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복지 수준에 대한 비교는 일회성으로 그치기보다 일정 기간마다 비교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복지와 관련한 인구, 사회, 경제, 정치, 정책 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난 5년간의 변화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후속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복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1년의 연구와 동일하게 경제활력도, 재정지속도, 복지수요도, 복지충족도, 국민행복도의 다섯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 개별지표를 선정한 후 지난 5년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 간 복지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사회복지정책 방향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또한 KCWI 2011을 바탕으로 하여 가장 최근에 OECD에서 생산된 보건, 복지, 사회, 경제 등의 다양한 지표를 검토하고, 각 부문별 지표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KIHASA-Chosun Welfare Index(KCWI) 2016을 개발하여 OECD 국가 간 복지 수준을 비교하고자 한다.

5개 부문 선정에 있어 복지 수준을 측정하는 데 경제활력이라는 변수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정부 재정의 건전성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일차적 경제적인 분배과정이 공정하고 사회적 위험이 낮다면 복지지출이 높지 않아도 복지 수준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복지는 재정지출과 함께 노령, 질병, 장애 등 각종의 부문별 균형이 중요하므로 제도적 복지수요 충족의 정도를 계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밖에 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면 의미가 제한될 것이므로 국민행복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부문별 지표를 아우르는 종합적 복지지수를 산정하여 OECD 국가의 복지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복지 수준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OECD 국가의 각종 지표에 대한 비교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산정된 부문 간 국가별 차

1) 김용하, 임성은, 윤강재, 우선희(2011). OECD 국가의 복지지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를 OECD 국가 각각에 대해 방사형 그림으로 표현하여 부문별 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11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결과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위하여 조선일보사와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제2절 연구의 내용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의 복지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복지지수 개발 및 산출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여섯 개 장으로 연구내용을 구성하였다.

제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배경 및 목적,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제2장은 복지지수 산출 및 복지 지표 선정을 위한 이론적 고찰 및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OECD의 Pressure-State-Response(PSR)를 근거로 하여 5대 부문과 개별지표를 선정하였다. 또한 KCWI 2011을 바탕으로 한 KCWI 2016의 지표 개발 및 산출방법론을 설명하였다. 부문별 개별지표의 구성과 선정 사유를 제시하고, 부문별, 개별지표별 표준화(normalizing) 및 가중치(aggregating & weighting) 방법론 역시 검토하였다. 특히 가중치 산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방법론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개별지표를 부문별 혹은 종합 지수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각 지표 간 상대적 가중치가 중요하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내의 경제, 사회, 보건, 복지, 인구 분야 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하여 지표별 가중치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제3장은 결론 부분으로 OECD 국가의 개별지표별 산출 결과 및 순위, 5개 부문별 산출 결과 및 순위, 그리고 결과가 나타난 요인에 대하여 제시하고 해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KCWI 2016을 바탕으로 한 OECD 국가의 복지지수 결과를 가지고 OECD 국가별 5대 부문 간 균형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 복지 수준의 발전 특성과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서 도출된 복지 지표 산정결과와 복지 수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연구방법

제1절 이론적 배경

제2절 지표의 구성 및 자료원

제3절 지수 계산방법

2

이론적 고찰 및 연구방법 <<

제1절 이론적 배경

1. Pressure-State-Response(PSR) 모델

국가 구성원 개개인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을 총괄하여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사회 지표로는 경제지표와 사회발전 지표가 대표적이다. 경제지표에는 한 사회 구성원이 상품 시장을 이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지가 반영되어 있고, 사회발전 지표에는 산업화 및 탈가족화의 진행에 따라 사회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각종 욕구가 적절히, 그리고 균등하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반영되어 있다. 한편 최근에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병행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욕구,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확보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자원의 정도를 복지 수준 비교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OECD(2009, pp.52-53)가 제시한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사회적 상황(Social status), 사회적 반응(Social response)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표 2-1〉 OECD의 사회지표 틀 제안

정책목표		자립측면 Self-Sufficiency	형평성 측면 Equity	건강 측면 Health	사회응집 측면 Social Cohesion
사회적 맥락 Social Context					
사회적 상황 Social Status					
사회적 반응 Social Responses					

주: 음영이 있는 부분에 지표가 배치되는 형태임.
자료: OECD(2009, p.54); 안상훈 등(2010, pp.9-10)을 수정함.

위 〈표 2-1〉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적 맥락은 직접적인 정책 목표는 아니지만 사회 정책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민소득 수준, 이민자의 규모, 출

산율, 혼인·이혼율, 노인부양비 등의 지표가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총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책 목표로서 기능하지 않지만, 보건, 조세 또는 연금정책 대응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환경에 관한 유의미한 정보가 된다(OECD, 2015a, p.15). 그러나 사회적 맥락의 지표는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 목표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천명하면서 노인부양비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맥락에 위치한 지표들은 때로는 정책 대응의 목표 또는 결과로서 사회적 상황에 위치하기도 한다.

이렇듯 사회적 상황 지표는 정책이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사회적 결과를 의미한다. 즉, 모든 국가는 정책을 통해 높은 빈곤율보다 낮은 빈곤율을 지향한다는 것이다(OECD, 2015b, p.78). 끝으로, 사회적 반응 지표는 사회적 상황 지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정부정책 지표 또는 시민사회 활동 등을 포함한다(OECD, 2015b, p.78).

OECD(2009)는 이를 Pressure-State-Response(PSR)의 개념에서 추론하여 2009년부터 Society at a Glance에서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 즉, 인간의 행위는 현재 주어진 상태(state)의 자연 자원과 환경 조건에 압력(pressure)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사회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러한 변화에 대응(response)한다는 것이다(OECD, 2009, p.52).²⁾ 그러므로 압력의 조건과 주어진 상태는 사회적 상황에 해당하고, 사회가 반응하는 다양한 정책 대응은 사회적 반응에 해당한다. <표 2-1>에서 형평성 측면의 정책목표에서는 소득 불평등 지표가 사회적 상황에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사회지출은 사회적 반응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PSR 모델은 정책결정자와 일반 대중에게 영역 내에서 지표와 지표 간의 전반적인 인과관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개념적 발전을 시도하였다. 개인의 안녕(well-being)은 적절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와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 국가에서 사회구성원은 시장을 이용한 방식으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것이 부족할 때 사회적 욕구로 발전된다. 예컨대, 고용률과 1인당 GDP는 한 사회가 사회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와 임금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

2) 국내에는 PSR 모델이 안상훈, 김영미, 최영준(2010)에서 소개되었다. 그 이후 사회보장통계의 구축과정, 지역사회단위의 복지 수준 평가 등에서도 PSR 모델을 적용하여 지표가 선정되었다.

능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할 수 있으며, 이것을 하나의 현재의 상태(state)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1인당 GDP가 실제 소득으로 분배되는 방식에서 불평등이 높은 상태(state)에 있을 경우, 어떤 이들은 재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되므로 복지에 대한 수요, 즉, 압력(pressure)으로 작용한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는 복지를 늘려서 재분배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욕구에 반응(response)할 것이다. 이때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재정적 수준 및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가로 그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³⁾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PSR의 결과로 나타나는 국민의 복지 상태를 몇 가지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살률과 출산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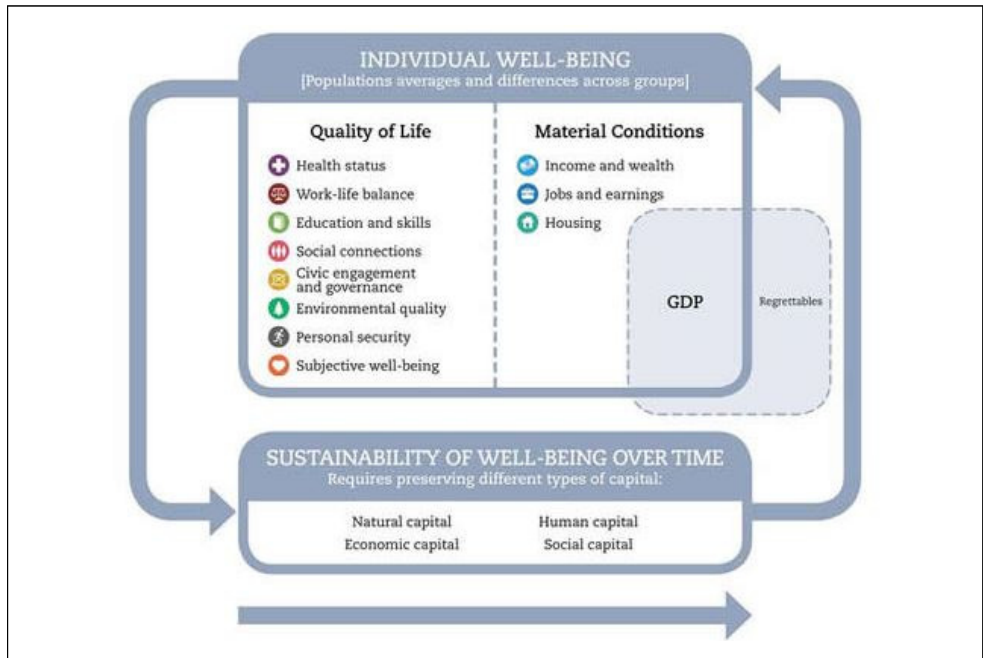
2. OECD의 Better Life Index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인 삶의 질 측정을 위하여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를 일부 활용하였다. OECD는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2011년부터 매년 국가 간 복지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이 지수는 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 11개 영역, 하위 세부지표 25개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 BLI는 경제지표와 같은 거시지표보다 개인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미시지표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15년 조사 결과의 경우, 조사 대상 국가는 34개 OECD 회원국에 러시아, 브라질이 포함된 36개국이었다. 조사 방식은 각국의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BLI 11개 영역에 대해 각자가 판단하는 나름대로의 가중치(중요도)를 부여하여 국가별 복지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OECD의 기본적인 개인의 복지와 그 과정을 측정하기 위한 체계는 다음과 같다.

3) 사회구성원의 욕구에 반응하고자 하는 국가의 능력으로 접근하고자 하면,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국민부담률의 지표는 국민복지 수준에 부(-)적 기능보다는 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정지속'의 영역명도 '복지재정'과 같이 재정적 능력을 표현하는 형태로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KCWI 2011을 구성하면서 김용하 등(2011)은 재정지속을,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도 국민부담률을 복지 수준에 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림 2-1] OECD의 Well-being and Progress 측정 체계



자료: OECD(2013). 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 Well-being Research (<https://www.oecd.org/statistics/measuring-well-being-and-progress.htm>).

이러한 틀에 근거한 BLI 지표체계는 <표 2-2>와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삶에 대한 만족도’와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사용한 시간’을 국민행복도의 개별지표로 활용하였다.

<표 2-2> OECD Better Life Index 지표 구성

영역	세부지표
주거(Housing)	주거 관련 지출(Housing expenditure)
	기본시설이 있는 가구(Dwelling with basic facilities)
	1인당 방의 수(Number of rooms per person)
소득(Income)	가계 금융순자산(Household financial wealth)
	가계 순가처분소득(Household net adjusted disposable income)
직업(Jobs)	직업안정성(Job security)
	개인소득(Personal earnings)
	고용률(Employment rate)
	장기 실업률(Long-term unemployment rate)

영역	세부지표
공동체(Community)	지원관계망의 질(Quality of support network)
교육(Education)	기대교육기간(Years in education)
	학생들의 역량(Students skills)
	교육 성취(Educational attainment)
환경(Environment)	수질(Water quality)
	대기의 질(Air quality)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규칙제정에서의 협의(Consultation on rule-making)
	투표 참여율(Voter turn-out)
건강(Health)	자기보고 건강상태(Self-reported health status)
	기대수명(Life-expectancy)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삶에 대한 만족도(Life-satisfaction)
안전(Security)	살인율(Homicide rate)
	피해율(Assault rate)
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Time devoted to leisure and personal care)
	장시간 근로자(Employees working very long hours)

자료: OECD(2013). 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 Well-being Research
(<https://www.oecd.org/statistics/measuring-well-being-and-progress.htm>).

3. 부문별 주요 개념

앞서 설명한 PSR 개념과 BLI를 바탕으로 하여 각 부문별 주요 개념을 살펴본다. 첫째, 사회구성원이 현재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을 ‘경제활력’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실질경제성장률이 높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상황은 사회구성원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의 확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고용률과 1인당 GDP는 자원 확보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둘째, 사회구성원별 욕구의 총합으로서 가질 수 있는 욕구는 ‘복지수요’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앞서 설명한 경제활력의 정도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적절히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즉, 경제성장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빈곤 및 불평등의 정도를 통해서 사회구성원의 욕구

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 아동과 노인처럼 돌봄이 필요한 사회구성원의 규모도 중요하다. 과거에는 이들을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였으나, 탈산업화 및 탈가족화의 상황에서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돌봄의 필요가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고통의 정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사회적 대응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여력을 ‘재정지속’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재분배를 위한 사회적 재원의 지속적 확보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다. 사회적 대응에 필요한 세출에 필요한 세입이 적절하게 확보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재정 건전성을 측정하고, 향후 추가적인 세입이 이뤄질 수 있는 정도를 재정 여력이라고 보고, 국민부담률의 역의 값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넷째, 국가가 구성원의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는 정도를 ‘복지충족’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국가는 각종 사회제도를 통해 구성원의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퇴, 실업 등이 닦혔을 때 이에 대응하는 장치인 사회보험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공적연금, 실업보험 등을 통해 소득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장하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에 어느 정도의 인구가 가입해 있는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이러한 능력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사회적 돌봄의 정도에 대한 대응의 정도로서 영유아 1인당 보육지출액, 장애인연금의 지출액,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을 이용한다.

다섯째, 사회적 욕구와 이에 대응하는 정도의 일치·불일치의 결과로서 ‘국민행복’의 영역을 설정하였다. 사회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사회적 욕구의 결과는 낮은 사회적 산출(outcome)로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불만으로서 자살률과 삶의 만족도, 현재의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미래의 불안감을 대표하는 합계출산율이 있다. 한편으로, 경제적인 활력과 복지가 충족되는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사회적 성과(output)도 있는데 여가시간의 정도 및 기대수명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면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로서 국가투명도가 있다.

이러한 PSR 개념을 이용하면 본 연구의 5개 영역은 <표 2-3>과 같이 경제활력, 복지수요, 재정지속, 복지충족, 국민행복의 순서로 연결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차원, 복지국가의 수요와 대응의 차원, 그리고 각각의 결과로서 국민행복의 차원을 구성하는

것이 독자의 이해를 쉽게 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측정 결과의 제시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영역을 가까이에 놓으면, 비교하기가 더 쉽다. 그리하여 영역을 연속적 순서로 제시하기에는 PSR 모델이 더 타당하지만 이하 본문에서는 경제활력, 재정지속, 복지수요, 복지충족, 국민행복의 순서로 영역을 배치하고자 한다.

〈표 2-3〉 복지 수준 측정 부문의 이해(PSR 개념도)

부문명	개념	측정 영역
경제활력	사회구성원이 노동시장, 상품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의 정도	- 자원의 확보 가능성 증가(실질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증가율) - 자원의 확보 능력(고용률, 1인당 GDP)
복지수요	사회구성원 각각이 가지는 욕구의 총합	- 사회적 돌봄(아동, 노인)의 필요 정도(총부양비) - 빈곤 및 불평등(지니계수, 상대빈곤율) - 경제적 고통(실업률, 소비자물가지수)
재정지속	사회적 대응에 필요한 국가의 능력	- 재정 건전성(국가채무 비율, 재정수지 비율) - 재정 여력(국민부담률)
복지충족	국가가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는 정도	- 소득보장을 통한 사회적 위험에의 대응(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 사회적 위험에 대한 포괄(건강보험 가입률) - 정부지출, 소득지원을 통한 삶의 질 제고(영유아 1인당 보육지출액, 1인당 장애연금 지출액, 공공사회지출 비율)
국민행복	사회적 욕구와 이에 대응하는 정도의 일치·불일치의 결과	- 사회적 산출(자살률, 합계출산율, 삶의 만족도) - 사회적 성과(여가시간, 기대수명) - 사회적 평가(국가투명도)

이상과 같이 복지 수준 측정을 위한 각 부문의 역할을 설정하고, 측정 영역과 측정 지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개별 측정 지표가 각 측정 영역의 속성에 대하여 배타적이지는 않다. 하나의 고유한 사회적 속성을 가지는 사회지표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측정 영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모두 5개 부문에 걸쳐 총 23개의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세부적인 지표의 측정 방법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제2절 지표의 구성 및 자료원

1. 경제활력지표

가. 고용률

고용률은 근로연령대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로 계산한다. 고용률이 높다는 것은 사회적 자원 배분이 노동시장을 통해 이뤄지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충분한 소득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개인의 자원 확보 능력이 높고, 이에 따라 국가의 부담은 줄어든다.

고용률 산정에 포함되는 취업자는 일반적으로 가구노동통계조사를 이용하여 측정한다(OECD, 2016a, p.120). OECD(2016a)는 ILO의 권고안에 따라 ‘취업’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15세 이상 인구로서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로 한다. 그렇지만 ILO가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고용률을 계산하는 것과 달리, OECD(2016a)는 15~64세의 근로연령대로 제한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은 근로연령대 인구보다 낮기 때문에, 이들의 고용률을 포함하고 있는 ILO의 계산방식에서 OECD의 계산방식보다 고용률이 낮게 산출된다.

고용률은 OECD(2016b)의 ‘Employment rates: total’ 값을 이용하였다. 고용률과 같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지표의 경우, 특정 연도의 값으로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경향을 판단하는 것에 무리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경제활력 및 재정지속의 7개 지표에 대해 모두 같은 방식을 적용하였다.

나. 실질경제성장률

사회구성원이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커진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사회에서는 장래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높기 마련이다. 경제의 규모 변화는 전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감하였는가로 측정하는데, 실질경제성장률은 물가상승의 효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여 물가 변동으로 인한 왜곡을 시정한 것

이다. 명목GDP를 실질가치를 가진 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물가지수 정보가 필요하다. 각국의 GDP 통계는 UN이 정한 국제기준인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따라 작성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OECD(2016a)의 GDP 통계는 일반적으로 2008년 국민계정체계를 따르고 있는데, 칠레, 일본, 터키의 경우에는 1993년 SNA를 따르고 있다. 두 체계에서 GDP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성장률을 측정하는 데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실질경제성장률 측정을 위해 OECD(2016b)의 'Real GDP growth' 값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질경제성장률에 대해 고용률처럼 2010년부터 2014년의 5년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다. 노동생산성 증가율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노동자 1인당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GDP로 측정한다. OECD(2016a)에서 현가화된 GDP 자료로 OECD의 연간 국민계정(Annual National Accounts) 자료를 2014년 구매력지수(Purchasing Power Parities: PPPs)로 환산한 값을 사용하며, 노동시간은 OECD의 연간국민계정 및 OECD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을 활용한다. 노동생산성은 노동시간당 GDP의 증가율로 측정하기 때문에, 자본집약도가 증가하거나 저생산성 분야가 감소하거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면 증가한다.

노동생산성 증가율 측정을 위해 OECD(2016c)의 'GDP per hour worked, annual growth' 값을 사용하였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4년의 5년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라. 1인당 GDP

GDP는 국내총생산으로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1년간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 가치를 합산한 것이다. 1인당 GDP는 경제성 성과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이면서, 몇몇 단점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삶의 기준을 측정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표이다(OECD, 2016a, p.30). GDP가 경제활동을

파악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단일의 지표이기는 하지만, 몇몇 영역에서는 사회 전체의 안녕을 측정하는 데에 실패하였다.

OECD(2016a)의 1인당 GDP 지표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앞서 언급한 국민계정체계의 변화에 따른 점을 주의해야 한다. OECD는 일반적으로 국민계정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 자료를 편집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1993 국민계정체계에 비해서 2008 국민계정체계는 2010년 기준으로 약 3.8%의 GDP 수준 증가가 나타났다(OECD, 2016a, p.30). 그러므로 재계산한 GDP의 증가 경향이 다른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본다면, 1993 국민계정체계를 사용하는 칠레, 일본, 터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1인당 GDP 수준이 과소 추정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국민의 규모에 주의해야 한다. 룩셈부르크와 (소규모이나) 스위스의 경우에는 국경을 넘어 출퇴근을 하는 노동자들이 많으며, 이들은 생산에 기여하면서 인구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들 국가의 1인당 GDP가 높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OECD, 2016a, p.30).

본 연구의 1인당 GDP는 2014년 구매력지수로 환산한 값이며, 이를 측정하는 데 OECD(2016b)의 'GDP per capita' 값을 이용하였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4년의 5년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2. 재정지속지표

가. 국가채무 비율

정부의 부채가 축적되는 것은 향후 정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경제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의 부채 축적 정도는 복지를 위한 여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을 의미하며, 국가채무란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순확정채무로 정의한다. 그런데 순확정채무에는 장래 정부가 부담할 수도 있는 연금 충당금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OECD(2016b)의 'Adjusted general government debt-to-GDP(excluding unfunded pension liabilities)' 값을 이용하였다. OECD는 정부의 채무 중에서 특히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는 경우, 자료의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이 낮다고 보았다. 대표적으로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미국은 연금의 미적립부채를 정부부채에 포함하고 있다(OECD, 2016a, p.182).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연금의 미적립부채를 채무에서 제외한 값을 적용한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4년 5년 평균값을 이용하였다.⁴⁾ 해당 자료에서 국가채무 비율을 제공하지 않는 뉴질랜드는 OECD(2016d)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한국은 e-나라지표의 국가채무 비율을 이용하였다.⁵⁾

나. 재정수지 비율

정부의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정부는 다른 경제 주체에게 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국가는 다른 경제 주체에게 채무를 지게 된다. 당해연도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의 규모를 의미하는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 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말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재정을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정부만을 집중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OECD, 2016a, p.180). 그래서 재정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이용하기도 한다.

재정수지 비율은 당해연도 GDP 대비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차이이고, 이를 측정하는 데 OECD(2016b)의 'General government net lending' 값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2010년부터 2014년의 5년 평균값을 이용하였다.⁶⁾

다. 국민부담률

사회적 자원의 분배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할 때, 복지의 주된 특성 중

4) 아이슬란드와 스위스는 자료의 한계 때문에 2010년부터 2013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5)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OECD(2016d)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e-나라지표의 국가채무 비율보다 소폭 높다.

6) 자료의 한계 때문에 멕시코는 2010~2013년 평균값을, 터키는 2010~2011년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하나는 재분배 정책이다. 재분배 정책에서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부담하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 구분된다. 그러므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해 현재의 국민이 부담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 국가가 향후 재분배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어느 정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국민부담률이 낮은 편인 우리나라는 향후 복지수요가 늘어날 경우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국민부담률은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재화와 서비스에 부과되는 소비세, 재산세 등을 포괄한다(OECD, 2016a, p.198). 본 연구에서는 OECD(2016e)의 조세통계 자료에서 ‘Revenue Statistics: Comparative tables’를 이용하였으며, 앞서와 마찬가지로 2010년부터 2014년의 5년 평균값을 이용하였다.⁷⁾

3. 복지수요지표

가. 총부양비

한 사회에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대표적인 집단이 노인과 아동이다. 이들은 장애인, 실업자와 더불어 복지국가의 중요한 정책 대상이다.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은 생애주기 후반의 경제적 능력으로 연결되었으며, 보건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조기진단에 따른 치료 등으로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65세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아동의 경우에도 사회적 부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구부양비에 포함하였다.

인구부양비 계산을 위한 자료로 OECD(2016f)의 ‘Population Dataset’을 이용하였다. 총부양비는 근로연령대 인구(15-64세) 대비 15세 미만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계산하였고, 자료는 2013년 또는 2014년 값을 이용하였다.

나. 지니계수

한 사회의 사회적 자원의 풍부함과 더불어 그러한 자원이 얼마나 공평하게 분배되어

7) 자료의 한계 때문에 호주, 일본, 멕시코, 폴란드는 2010~2013년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있느냐도 복지 수준을 측정하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물질적 자원이 분배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소득불평등도인데,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을수록 복지에 대한 욕구가 높을 수 있다.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이다. 지니계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가지는 완벽한 공평의 상황을 0으로 하고, 모든 소득이 최고소득 1인에게 집중되는 완벽한 불평등의 상황을 1로 하는 값이다.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조세 납부 및 사회보장 이전 전의 시장소득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조세 및 이전이 이뤄진 이후의 처분가능소득을 이용한다.

지니계수는 OECD(2016g)의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set의 Gini 값을 이용하는데, 이 값은 이전 후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 post taxes and transfers)의 분포를 이용한 값이다. 자료는 2013년 또는 2014년 값을 이용하였다.

다. 상대빈곤율

한 사회의 자원이 분배되고 난 이후에도 자원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여 빈곤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소득을 이용한 빈곤율 또는 시장소득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이전 이후 소득의 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여전히 분배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적으로 사회적 공평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득불평등도보다는 빈곤율이 정책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OECD, 2014, p.112). 특히 아동빈곤율은 장래 성년이 될 사회적 자원의 건전한 발달의 측면에서, 노인빈곤율은 노인에게 정부의 소득보조 외에 딱히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상대빈곤율 측정을 위해 OECD(2016g)의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set의 poverty rate 값을 이용하였다. 이 값은 상대빈곤선을 중위소득의 50%로 놓고, 이전 후 소득(after taxes and transfers)의 분포를 이용한 값이다. 자료는 2013년 또는 2014년 값을 이용하였다.

라. 경제고통지수(실업률+소비자물가지수)

실업률은 실업자, 피용자 및 자영자를 포함하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

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실업자는 근로가 가능한데 일자리가 없으며, 지난 4주 동안 일 자리를 찾기 위해 구직활동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OECD, 2016a, p.132). 실업률은 개인적으로 큰 고통이면서, 국가적으로도 큰 복지수요를 만들어 낸다. 또한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명목 소득의 가치가 그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동일한 명목 소득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량이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지표를 합산한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를 이용하였다. 경제고통지수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아서 오쿤(Arthur Okun)이 제안한 것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을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업률은 OECD(2016h)의 LFS by sex and age-indicators의 실업률(Unemployment rate)을 이용하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는 OECD(2016b)의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ices: CPI) 값을 이용하였다. 경제고통지수는 특정 시점의 경제적 고통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두 지표 모두 2014년 값을 이용하였다.

4. 복지충족지표

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공적연금은 생애주기의 후반부에 있을 복지수요에 대비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노인의 소득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이 있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노인의 소득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국가가 노령의 사회구성원에게 충분한 경제적 여건을 제공하고 있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국가는 공적연금 외에도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사적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주로 국가를 통한 국민 삶의 질, 복지 수준을 측정한다는 관점에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사용하기로 한다.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2015b) Pensions at a Glance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 국가는 조세제도 및 연금공식 내의 재분배 장치, 그리고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이용하여 소득집단에 따라서 소득대체율을 다르게 보장하고 있다. 대체로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을, 고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대체

율을 보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소득 근로자(Average Worker Earnings)의 소득 대체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연금과세 등의 효과를 제외하고 평균소득자 남성의 총연금 소득의 대체율(Gross Pension replacement rate, Male, 1.00 of AW) 값을 이용하였다.⁸⁾ 모든 자료는 2014년을 기준값으로 하였다.

나. 건강보험 가입률(공공 및 민간)

질병에 걸리는 것은 소득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료에도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이 큰 요소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가는 건강보호를 위한 공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적건강보험 또는 사적건강보험은 의료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며, 예상하지 못하였던 심각한 질환으로부터 재정적 보장을 해주기도 한다(OECD, 2015a, p.120).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보편적인(또는 거의 보편적인) 건강보호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리스, 미국, 폴란드만이 보편적 건강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⁹⁾ 그리스는 경제 위기로 인해서 장기실업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호를 줄였으며, 자영자 중에 소득 감소 때문에 건강보험을 갱신하지 않은 이들이 있다. 미국은 사적건강보험을 통해서 54%의 국민들이 보호를 받고 있으며, 공적 재정지원을 받는 제도에서 34.5%(노인, 저소득, 장애인)가 보호받고 있다. 건강보험의 포괄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폴란드는 2012년에 가입자가 건강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보호 대상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ECD(2016i)의 Social Protection and Well-being 데이터셋에서 공공 및 사적건강보험(Primary private health insurance)을 통해 제도적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 중에서 최신 자료를 이용하였다.

8) 일각에서는 한국의 평균소득자 소득대체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들어 OECD pension model의 추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9) 이하에서는 OECD(2015c, p.120)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다.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많은 OECD 국가에서 실업이라는 경제적 고통에 대해서 실업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순소득대체율(Net Replacement Rate: NRR)은 실업기간의 순소득을 근로활동기의 순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앞서 말한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가구유형, 실업의 지속기간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OECD는 각국의 제도를 비교하기 위해 네 가지 가족의 유형(독신, 1소득자 부부, 2명의 자녀를 둔 독신, 2명의 자녀를 둔 1소득자 부부)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호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 가족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독신 가구의 소득대체율을 사용하였다. 대체로 독신 가구의 소득대체율이 여러 가족 유형의 소득대체율 중에서 가장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의 준거를 하나로 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OECD(2016j)의 조세급여모델(Tax-Benefit Models)에서 평균소득의 67%인 독신 소득자의 순소득대체율(Net Replacement Rates for 67% AW single earner, previous earnings)을 이용하였다. 자료의 측정 연도는 2014년이다.

라. 영유아 1인당 보육 공공사회지출액

보육 등 아동에 대한 지원은 현시점 취약계층의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일 뿐 아니라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투자이기도 하다. 동시에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양육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 양육자인 여성에게 근로유인을 제공하여,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 근로가능인구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적 기제이다. 개별 국가의 정책적 지향에 따라 지원 방식으로 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보육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2016k)의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Social Expenditure-Aggregated data)에서 가족(family) 영역의 지출 프로그램 중 초기 아동 교육 및 보호(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에 대한 현물급여 지출액을 이용하였으며, 2012년 이후 최신 자료를 활용하였다.¹⁰⁾ 정책 대상 대비 정책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

여, 아동 교육 및 보호의 국가별 현물급여액을 해당 국가의 0~4세 아동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구매력지수로 나눈 각국의 공공사회지출액을 US\$ 기준으로 표준화하였다.

마. 인구 1인당 장애연금 지출액

장애인은 생활영역에서 소외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중 하나이다. 장애의 원인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 그 자체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경제활동을 제한하며, 의료비 등 추가 생활비 지출분을 발생시켜 장애인이 속한 가구나 장애를 가진 개인의 빈곤을 유발할 수 있다. 장애가 자발적 선택에 의한 곤란이 아니라는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정책에 의한 의도적인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2016k)의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Social Expenditure-Aggregated data)에서 장애 관련(Incapacity related) 영역의 지출 프로그램 중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s)에 대한 현금급여 지출액을 이용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 중에서 최신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가별로 장애발생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장애발생률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연금에 대한 현금급여 지출액을 인구수로 나누어 인구 1인당 장애연금 지출액을 산정하였다.

바. 공공사회지출 비율

공공사회지출은 노후소득보장, 장애인, 건강, 가족, 노동시장, 실업, 주거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복지국가로서의 능력과 정책 노력의 정도를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는 지표이다. 지원 방식에 따라 정부가 사회지출의 재정적 흐름을 통제하는 경우, 이는 공공사회지출로 분류된다. 즉, 사회보험에 의해 강제기여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상병급여는 ‘공공’ 지출에 포함되지만, 상병급여가 고용주로부터 피용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에는 ‘민간’ 지출에 포함된다(OECD, 2014, p.116).

본 연구에서는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의 비율을 이용하는데, 그 이유는 공공사회

10) 현재 현물급여 지출 자료만 제공한다.

지출이 민간사회지출보다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고, 개별 국가의 재정여력 대비 사회지출에 대한 투자 정도를 통해 정부의 사회정책 노력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사회지출 비율을 파악하는 데에 OECD(2016k)의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의 GDP 대비 비율을 이용하였다.

5. 국민행복지표

가. 자살률

자살은 많은 OECD 국가에서 주된 사망요인 중 하나이며, 사회병리 현상의 하나로 매우 복잡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살사망률은 ‘한 사회의 행복과 국민의 안녕을 나타내는 핵심적 지표’라 할 수 있다(정홍원 등, 2013, p.78). 본 연구에서도, 자살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사회적 현상의 하나이며, 개인적·사회적 욕구의 미충족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았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자살을, 사람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을 완전히 인지하거나 예상하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실행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OECD, 2016l). 자살률은 인구 1만 명당 자살자 수로 계산된다. 동 데이터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망 원인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가별·시대별 연령 구조 변화를 감안한 1980년 OECD 인구 구조를 이용하여 표준화되었다(OECD, 2015a, p.56). 물론 질병 및 관련 건강 문제의 국제적 통계 분류 개발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사망의 근본적 원인에 따라 자살을 기록하는 절차 또는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가 달라 통계에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자살은 주된 사망원인으로, 지난 25년간 급격히 증가하여 2014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이 29건으로 OECD 평균인 12건의 두 배 이상이며, OECD 회원국에서 가장 높다. 특히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정도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OECD, 2016l).

본 연구에서는 OECD(2016l) 자료에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이용하였다. 기준연도는 2014년이나, 아이슬란드는 2009년, 슬로베니아는 2010년, 캐나다는 2011

년,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는 2012년 기준이다. 2013년 기준인 국가는 벨기에, 칠레, 프랑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우리나라, 멕시코, 네덜란드,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이다.

나. 합계출산율

본 연구에서는 OECD(2016m)의 출산율(Fertility rates) 자료를 이용하였다. 합계 출산율은 15~49세의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1명인데, OECD 평균 1.7명보다 낮고, 인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2.1명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OECD, 2016). 대부분의 국가는 2014년 기준 합계출산율이지만 캐나다는 2012년, 칠레는 2013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만혼화의 경향,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의 변화가 저출산의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의 양상에도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원인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결과가 출산율로 나타난다고 본다. 다만, 출산율, 가족구성의 변화, 건강 수준의 변화는 경제적·사회적 위기의 직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된 영향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정부 역시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청년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취업·고용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며, 삶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여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 출생 시 기대수명

본 연구에서는 OECD(2016n)의 2014년 기준 출생 시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자료를 이용하였다. 다만,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캐나다는 2011년 기준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출생 시 기대수명은 현시점의 사망률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연령별 사망률을 바탕으로 하여 사람들이 출생 이후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지를 측정한 것이다(OECD, 2015a, p.46; OECD, 2016n). 그러나 특정 출생 집단의 실제 연령별 사망률을 미리 알 수는 없다. OECD(2016n)의 설명에 따르면, 기대수명

산출방식은 국가별로 일부 차이가 있어 1년 미만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출생 시 기대수명은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가장 흔히 사용되기도 한다. 출생 시 기대수명이 연장되는 것은 높은 생활수준, 개선된 생활스타일, 높은 교육수준,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OECD 이외에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DI)에서도 국가의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할 때 행복 관련 지표인 ‘출생 시 기대수명’을 활용하고 있다(UNDP, 2015).

라. 삶의 만족도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주관적 안녕 수준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며(김용하 등, 2011, p.30), 이를 더 넓은 측면에서 살펴보면 개인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좋은 가족관계, 건강, 생활환경,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과 연관되어 있다. 정해식(2016)은 행복도의 국가 간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 중에서 경제 수준, 사회적 지지 수준이 OECD 국가에서는 유의하지 않음을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낮은 행복도 원인을 삶의 선택에서의 자유, 관대성, 부패 인식 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갤럽 세계조사의 자료를 이용하는 OECD(2016o)의 Better Life Index의 지표를 활용하였다. 갤럽 세계조사는 동일한 설문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150여 개국에서 실시된다. 일부 예외가 있으나 모든 표본은 농촌지역을 포함한 해당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15세 이상의 거주 인구 중 확률적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확률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확률적 오차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OECD, 2015). 삶의 만족도는 현재의 기분보다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평가하는 것이다. 만족도의 점수 부여 기준은 0점에서 10점으로 10점이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낸다. 2016년에 발표된 2015년 기준 OECD 평균 점수는 6.5점이었으며, 우리나라는 5.8점으로 OECD 평균 이하였다. 다만, 아이슬란드는 2013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마. 여가시간

국가 간 여가시간 차이의 결정요인으로, 문화적 요인(Blanchard, 2004), 노동소득

에 대한 높은 한계세율(Prescott, 2004), 시장실패¹¹⁾(Alesina et al., 2005; Landers et al., 1996)와 같은 정책과 제도의 역할이 제시되었다(김용하 등, 2011, pp.30-31 재인용). 경제적 자원 수준을 반영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 여가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MTUS(Multinational Time Use Study)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국제 시간사용 연구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me Use Research)에서 표준화된 시간 분류 코드를 제공하는데, 국제 비교가 가능한 형태의 표준화된 시간 사용 자료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MTUS 자료로, 유럽과 북미의 15개국 이상 국가의 시간 사용 자료를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임유즈서베이(Time Use Surveys) 자료를 이용한 Better Life Index(BLI)에서 지표를 활용하였다(OECD, 2016o). BLI에서의 여가시간은 레저와 개인적인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을 포괄하며, 1일 여가시간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다만, 1일 여가시간에 대한 기준연도는 국가별로 다르다. 슬로베니아와 스웨덴은 2000~2001년, 덴마크는 2001년, 독일은 2001~2002년, 폴란드는 2003~2004년, 벨기에와 영국은 2005년, 호주는 2006년, 오스트리아는 2008~2009년, 우리나라는 2009년,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스페인은 2009~2010년, 캐나다와 노르웨이는 2010년, 일본은 2011년, 미국은 2014년 기준이다.

바. 국가투명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www.transparency.org)는 매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1995년부터 매년 각국의 공공부문(공무원 및 정치인)의 부패 정도를 전문가의 인식조사를 통해 표준화 과정을 거쳐 10점 만점 기준으로 발표하는데, 일반적으로 7점대의 경우 사회가 보편적으로 청렴하다고 보며, 3점대는 보편적으로 부패하다고 인식한다(김용하 등, 2011, p.29). 김용하 등(2011)에서 종합적인 복지 수준을 측정하고자 할 때, 복지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도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하면 이는 복지충족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보고, 국가투명도를 복지충족 지표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투명도를 국민행복 지표에 포함하였다. 이것은 국가투

11) 여가소비에 대한 정보 불균형 등으로 일부 국가에서 사회적 최적 수준을 상회하는 노동시간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명도가 사회적 신뢰 수준을 대리하는 매우 강력한 변수이며, 또한 현대 복지국가에서 사회적 신뢰 수준은 미해결된 사회적 욕구와 관련이 크기 때문이다. 즉, 국민행복 지표가 복지의 수요와 충족의 균형 관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국가투명도는 국민행복 지표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¹²⁾

본 연구에서는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6)의 자료를 이용하였다(transparency.org). 이는 총 168개국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5년 기준의 국가투명도이다.

〈표 2-4〉 KCWI 2016 지표구성 및 자료원

부문지표	개별지표	영문지표명	자료원	기준연도
경제활력지표	고용률	Employment rates: total	OECD(2016b), OECD Factbook Statistics	2010-2014년 기간 평균
	실질경제성장률	Real GDP growth	OECD(2016b), OECD Factbook Statistics	2010-2014년 기간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	GDP per hour worked, annual growth	OECD(2016c), OECD Productivity Statistics	2010-2014년 기간 평균
	1인당 GDP	GDP per capita	OECD(2016b), OECD Factbook Statistics	2010-2014년 기간 평균
재정지속지표	국가채무 비율	Adjusted general government debt-to-GDP (excluding unfunded pension liabilities)	OECD(2016b), OECD Factbook Statistics	2010-2014년 기간 평균
	재정수지 비율	General government net lending	OECD(2016b), OECD Factbook Statistics	2010-2014년 기간 평균
	국민부담률	Total tax revenue	OECD(2016e), OECD Tax Statistics	2010-2014년 기간 평균
복지수요지표	총부양비	Gross Dependency Ratio	OECD(2016f), Population Dataset	2012~2014년 중 최신 자료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OECD(2016g),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set	2012~2014년 중 최신 자료
	상대빈곤율	Relative poverty rate(50%)	OECD(2016g),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set	2013~2014년 중 최신 자료
	경제고통지수	Misery Index (=물가상승률+실업률)	물가상승률- OECD(2016b), OECD Factbook Statistics	2014년
			실업률- OECD(2016h), LFS	2014년
복지충족지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Gross pension replacement rate, Male, 1.00 of AW	OECD(2015b), Pensions at a Glance	2014년
	건강보험 가입률 (공공 및 민간)	Total public and primary private health insurance	OECD(2016i), Social Protection and Well-being	2013~2015년 중 최신 자료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Net Replacement Rates for 67% AW single earner, previous earnings	OECD(2016j), Tax-Benefit Models	2014년

12)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회의에서 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동일한 결론이 나왔다.

부문지표	개별지표	영문지표명	자료원	기준연도
복지총족지표	영유아 1인당 보육 공공사회지출액	Public social expenditure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ECEC)	OECD(2016k),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12~2015년 중 최신 자료
	인구 1인당 장애연금 지출액	Public Expenditure of Disability pensions	OECD(2016k),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11~2013년 중 최신 자료
	공공사회지출 비율	Public social expenditure	OECD(2016k),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11~2014년 중 최신 자료
국민행복지표	자살률	Suicide Rates, Total	OECD(2016l), Suicide rates	2014년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OECD(2016m), Fertility rates	2014년
	출생 시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OECD(2016n), Life expectancy at birth	2014년
	삶의 만족도	Life satisfaction	OECD(2016o), Better Life Index	2015년
	여가시간	Time devoted to leisure and personal care	OECD(2016o), Better Life Index	국가별 상이 (한국 2009년)
	국가투명도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6)	2015년

주: 일부 국가에서는 출처 및 기준연도에 예외가 있을 수 있음.

〈표 2-5〉 KCWI 2011과 KCWI 2016의 부문 및 지표구성 비교

부문	지표체계	
	KCWI 2011	KCWI 2016
경제 활력 지표 (기간 평균)	고용률	고용률
	실질경제성장률	실질경제성장률
	생산성증가율	노동생산성 증가율
	1인당 GDP [미국 달러 기준, 구매력지수 (PPPs) 기준]	1인당 GDP [미국 달러 기준, 구매력지수(PPPs) 기준]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 기준)	-
재정 지속 지표 (기간 평균)	국가부채 비율	국가채무 비율
	재정적자율	재정수지 비율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사회보장 기여금 제외) 사회보장 기여금
	사회보험부담률	
복지 수요 지표	노인인구 비율	총부양비 ((0~14세 인구+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상대빈곤율,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상대빈곤율, 가처분소득 기준)
	실업률	경제고통지수 (Misery index) =소비자물가지수+실업률
	장애출현율(20~64세 인구 대비)	-
	산재발생률(인구 10만 명당)	-

부문	지표체계		
	KCWI 2011		KCWI 2016
복지 총족 지표	공적연금 소득보장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건강보장률	건강보험 가입률	건강보험 가입률(공공 및 민간)
	실업급여 순대체율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아동 및 보육지원율	0~2세 보육시설 등록률	영유아 1인당 보육 공공사회지출액
		3~5세 보육시설 등록률	
		보육비 본인부담률	
	장애급여 수혜율		인구 1인당 장애연금 지출액
	국가투명도		-
국민 행복 지표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출생 시 기대수명		출생 시 기대수명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여가시간(연간)		여가시간(1일)
	-		국가투명도

주: 1) 밑줄 표시된 지표는 역기능 지표임.

2) KCWI 2011의 지표명은 원 보고서 내용으로 인용하였음.

제3절 지수 계산방법

1. 지표의 표준화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총 23개 지표는 상이한 분포를 보이므로, 영역 및 지표 간 비교를 위해서 표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표준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수화 연구 방법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식의 하나인 최소-최대 표준화(최소값-최대값 Normalization)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분석 대상이 되는 34개 OECD 국가의 해당 지표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용하여 정규화하는 방식이다. 역기능을 가지는 지표의 경우에는 반대의 방법을 이용한다. 각 지표의 표준화 방법과 이에 해당하는 지표는 다음 <표 2-6>과 같다.

〈표 2-6〉 KCWI 2016 지표 표준화 방식

구분	수식	해당지표
순기능	$Z_{ij} = \frac{X_i - \min(X_i)}{\max(X_i) - \min(X_i)}$ i: 지표 j: 국가 최대값(Xi): 해당 지표 중 최대값 최소값(Xi): 해당 지표 중 최소값	- 경제활력지표: 전체 - 재정지속지표: 재정수지 비율 - 복지충족지표: 전체 - 국민행복지표: 합계출산율, 출생 시 기대수명, 삶의 만족도, 여가시간, 국가투명도
역기능	$Z_{ij} = \frac{\max(X_i) - X_i}{\max(X_i) - \min(X_i)}$	- 재정지속지표: 국가채무 비율, 국민부담률 - 복지수요지표: 전체 - 국민행복지표: 자살률

2. 가중치 설정(Aggregating and Weighting)

종합적인 지수 산출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지표를 합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각 개별지표별로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또한 종합적인 복지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특정 부문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가중치 부여와 관련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개별 지표의 중요도를 동등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동일가중치(equal weight)를 부여하는 방식은 지표 및 부문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어려울 경우에 적용한다. 이렇게 동일가중치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문 간 상대적 중요도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표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여러 지표들은 국민 복지 수준을 측정하는 데 상대적으로 중요도 차이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는 지표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 산출을 위해 사회복지학, 경제학, 인구학, 보건학 등 분야의 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¹³⁾ 설문 조사 내용은 5개 부문에 대한 가중치와 23개 세부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구성하였다(〈부록 1〉참고).

13) 이러한 형태의 주관적 가중치는 복지의 개념적 가치를 둘러싼 학문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한 가치평가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 편향적 해석이 이뤄질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해석은 한국적 관점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국한해야 할 것이다.

학문분야별로 어떠한 응답자들이 참여하였는지도 가중치의 설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표 2-7>은 학문분야별 응답자 수를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어떠한 분야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는지 별도로 분석하여 제시하지는 않는다.

<표 2-7> KCWI 2016 전문가 델파이 조사 응답자 분야별 특성

분야	빈도(명)	비율(%)
사회복지학	17	32.7
경제학	12	23.1
보건학	11	21.2
사회학	5	9.6
사회정책학	3	5.8
가족학	2	3.8
인구학	1	1.9
행정학	1	1.9
계	52	100.0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중치를 반영하여, 부문지수 및 종합복지 수준을 평가한다. 그러므로 복지 수준 평가에서는 우리나라의 관점으로 다른 OECD 국가의 복지 수준을 평가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지금까지 각국의 복지 수준을 평가할 때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복지 수준을 측정할 때, 특히 객관적 수준에도 불구하고 인식적 차원이 반영되는 구조에서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가중치 부여도 의미를 가질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부합하는 가중치가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김용하 등(2011)은 KCWI 2011을 작성하면서, 지표별 가중치를 조사하였다. 이전 조사의 가중치와 본 연구의 가중치를 비교하면, 정책전문가들이 두 시점에 어떤 영역이 국민의 복지 수준 측정에 더 많은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했는지 비교할 수 있다. <표 2-8>은 본 연구에서 확인된 지표별 가중치와 영역별 가중치를 제시하며, <표 2-9>는 김용하 등(2011)의 KCWI 2011의 작성 과정에서 확인된 지표별 가중치를 제시한다.

〈표 2-8〉 KCWI 2016 지표별 가중치

부문지표	비중	개별지표	지표 가중치	
1. 경제활력지표	16.8%	고용률	6.0%	35.8 %
		실질경제성장률	3.6%	21.5 %
		노동생산성 증가율	3.3%	19.4 %
		1인당 GDP	3.9%	23.4 %
2. 재정지속지표	11.0%	국가채무 비율	3.5%	31.4 %
		재정수지 비율	3.0%	27.5 %
		국민부담률	4.5%	41.2 %
3. 복지수요지표	19.9%	충부양비	4.4%	22.3 %
		지니계수	5.3%	26.7 %
		상대빈곤율	5.5%	27.5 %
		경제고통지수	4.7%	23.5 %
4. 복지충족지표	30.3%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8%	19.1 %
		건강보험 가입률(공공 및 민간)	5.1%	16.8 %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4.7%	15.4 %
		영유아 1인당 보육 공공사회지출액	4.3%	14.3 %
		인구 1인당 장애연금 지출액	3.4%	11.3 %
		공공사회지출 비율	7.0%	23.1 %
5. 국민행복지표	22.0%	자살률	3.5%	15.9 %
		합계출산율	3.5%	15.9 %
		출생 시 기대수명	3.2%	14.7 %
		삶의 만족도	4.7%	21.3 %
		여가시간	3.4%	15.5 %
		국가투명도	3.7%	16.7 %
계	100.0%	계	100.0%	

김용하 등(2011)의 연구 시점은 전 세계 각국이 금융위기의 파고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 있었다. 이런 이유로 경제활력지표와 재정지속지표를 합산하여 39.3%에 이르는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제활력지표 및 재정지속지표에 대한 가중치 부여가 많지 않아, 27.8%에 그쳤다. 반대로 복지충족지표 및 국민행복지표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2011년에는 두 영역에 42.5%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52.3%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44 OECD 국가의 복지 수준 비교 연구

〈표 2-9〉 KCWI 2011 지표별 가중치

부문지표	비중	개별지표	지표 가중치	
1. 경제활력지표	20.5%	고용률	6.5%	31.5%
		실질경제성장률	4.0%	19.8%
		생산성증가율	3.2%	15.5%
		물가상승률	3.8%	18.7%
		1인당 GDP	3.0%	14.5%
2. 재정지속지표	18.8%	국가부채 비율	3.8%	20.4%
		재정적자율	3.8%	20.4%
		조세부담률	5.6%	29.6%
		사회보험 부담률	5.6%	29.7%
3. 복지수요지표	18.2%	노인인구 비율	2.6%	14.2%
		지니계수	3.5%	19.5%
		빈곤율	4.6%	25.1%
		실업률	3.6%	20.0%
		장애인 비율	1.9%	10.2%
		산업재해 발생률	2.0%	11.0%
4. 복지충족지표	26.6%	공적연금 소득보장률	4.4%	16.3%
		건강보장률	4.4%	16.7%
		고용보장률	3.5%	13.3%
		아동 및 보육 지원율	4.0%	15.0%
		장애급여 보장률	2.7%	10.0%
		국가투명도	2.2%	8.4%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5.4%	20.3%
5. 국민행복지표	15.9%	자살률	3.0%	18.1%
		출산율	3.0%	19.2%
		평균수명	2.7%	17.0%
		주관적 행복도	4.0%	25.5%
		여가시간	3.2%	20.3%
계	100.0%	계	100.0%	

자료: 김용하 등(2011). p.34.

3. 국가별 순위산정 방법

5개 부문별 지표의 국가별 순위는 세부지표의 가중치를 해당 국가의 표준화한 값에 곱하고,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매겼다.

$$y_i = \sum x_i * w$$

y_i : 해당국가의 부문별 최종값

x_i : 해당국가의 표준화된 지표값

w : 각 지표별 가중치

종합복지지수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앞서 산출한 부문별 점수에 부문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y_i = \sum x_i * w'$$

y_i : 해당국가의 복지지수 최종값

x : 해당국가의 부문별 최종값

w' : 각 부문별 가중치

제 3 장

복지지표 산정 결과

제1절 KCWI 2016 개별지표별 순위

제2절 KCWI 2016 부문별 순위

제3절 KCWI 2016 종합순위

3

복지지표 산정 결과 <<

제1절 KCWI 2016 개별지표별 순위

1. 경제활력도

가. 고용률

2014년 기준으로 가용데이터 범위가 제한적인 라트비아를 제외한 OECD 34개국 중 기간 평균 고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80.1%)였으며, 다음은 스위스(79.4%), 노르웨이(75.4%)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64.2%의 고용률을 보이며 21위에 해당하였고, 터키(48.5%), 그리스(52.6%), 이탈리아(56.3%)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1〉 국가별 고용률 순위

(단위: %)

순위	국가	고용률	순위	국가	고용률
1	아이슬란드	80.1	18	룩셈부르크	65.6
2	스위스	79.4	19	이스라엘	64.5
3	노르웨이	75.4	20	슬로베니아	64.4
4	네덜란드	74.0	21	대한민국	64.2
5	스웨덴	73.8	22	프랑스	64.0
6	덴마크	72.9	23	포르투갈	62.8
7	독일	72.8	24	벨기에	61.9
8	뉴질랜드	72.8	25	칠레	61.4
9	호주	72.2	26	멕시코	60.4
10	캐나다	72.0	27	아일랜드	59.9
11	일본	71.4	28	폴란드	59.9
12	오스트리아	71.2	29	슬로바키아	59.7
13	영국	70.2	30	헝가리	57.4
14	핀란드	68.8	31	스페인	56.7
15	미국	67.2	32	이탈리아	56.3
16	체코	66.8	33	그리스	52.6
17	에스토니아	66.4	34	터키	48.5

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에서 순위가 결정됨.

나. 실질경제성장률

비교국가군 중에서 기간 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터키(5.4%)이고, 다음은 칠레(4.6%), 에스토니아(3.9%), 이스라엘(3.8%)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국가인 OECD 34개국 중 한국은 3.7%로 5위에 해당하여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2010년대 유로존 금융 위기의 진원지로 지목된 PIGS 국가인 그리스(-4.9%), 포르투갈(-0.8%), 스페인(-0.8%), 이탈리아(-0.5%)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하위권을 형성하였다. 그 외 슬로베니아(0.2%), 네덜란드(0.5%), 핀란드(0.5%), 덴마크(0.7%) 등의 국가들이 2010년 이후 저성장 경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국가별 실질경제성장률 순위

(단위: %)

순위	국가	실질경제성장률	순위	국가	실질경제성장률
1	터키	5.4	18	스위스	1.9
2	칠레	4.6	19	노르웨이	1.5
3	에스토니아	3.9	20	일본	1.5
4	이스라엘	3.8	21	헝가리	1.3
5	대한민국	3.7	22	오스트리아	1.3
6	멕시코	3.4	23	벨기에	1.2
7	룩셈부르크	3.2	24	프랑스	1.1
8	폴란드	3.0	25	아이슬란드	1.1
9	슬로바키아	2.7	26	체코	1.0
10	호주	2.6	27	덴마크	0.7
11	캐나다	2.5	28	핀란드	0.5
12	스웨덴	2.4	29	네덜란드	0.5
13	뉴질랜드	2.2	30	슬로베니아	0.2
14	미국	2.1	31	이탈리아	-0.5
15	독일	2.0	32	스페인	-0.8
16	아일랜드	2.0	33	포르투갈	-0.8
17	영국	1.9	34	그리스	-4.9

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에서 순위가 결정됨.

다. 노동생산성 증가율

OECD 34개국 중 기간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폴란드로 3.2%였다. 한국은 3.1%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이며 1위 국가와 0.1%p의 차이로 2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슬로바키아(2.7%), 에스토니아(2.6%), 헝가리(2.6%), 아일랜드(2.4%) 순이었다.

반면, 2010년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한 그리스(-0.6%)와 아이슬란드(-0.3%)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며 각각 34위와 33위에 해당하였다. 그 외에도 멕시코(0.2%), 노르웨이(0.3%), 뉴질랜드(0.4%), 영국(0.5%) 등의 국가들이 낮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이는 하위권을 형성하였다.

〈표 3-3〉 국가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순위

(단위: %)

순위	국가	노동생산성 증가율	순위	국가	노동생산성 증가율
1	폴란드	3.2	18	체코	1.1
2	대한민국	3.1	19	덴마크	1.0
3	슬로바키아	2.7	20	스위스	1.0
4	에스토니아	2.6	21	룩셈부르크	1.0
5	헝가리	2.6	22	프랑스	0.9
6	아일랜드	2.4	23	오스트리아	0.8
7	칠레	2.0	24	핀란드	0.8
8	호주	1.6	25	네덜란드	0.8
9	스페인	1.6	26	미국	0.7
10	슬로베니아	1.4	27	이탈리아	0.6
11	이스라엘	1.4	28	벨기에	0.6
12	터키	1.3	29	영국	0.5
13	캐나다	1.2	30	뉴질랜드	0.4
14	독일	1.2	31	노르웨이	0.3
15	포르투갈	1.2	32	멕시코	0.2
16	일본	1.2	33	아이슬란드	-0.3
17	스웨덴	1.1	34	그리스	-0.6

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에서 순위가 결정됨.

라. 1인당 GDP

기간 평균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91,956)로, 2위인 노르웨이의 \$63,893과 \$28,063의 큰 차이를 보였다. 다음은 스위스(\$56,360), 미국(\$51,265), 네덜란드(\$46,771)의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32,019로 전체 34개 OECD 비교국가 중 22위에 위치하였다.

한편, 기간 평균 1인당 GDP가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로 \$16,709로 나타났고, \$18,182의 터키와 함께 2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였다. 다음은 \$20,611의 칠레, \$23,068의 폴란드, \$23,196의 헝가리 순서로 2만 달러 초반 수준이었고, 그 외 에스토니아(\$25,222), 슬로바키아(\$26,270), 그리스(\$27,027)의 순서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4〉 국가별 1인당 GDP 순위

(단위: PPPs, in US dollars)

순위	국가	1인당 GDP	순위	국가	1인당 GDP
1	룩셈부르크	91,956	18	일본	35,408
2	노르웨이	63,893	19	이탈리아	35,233
3	스위스	56,360	20	뉴질랜드	34,260
4	미국	51,265	21	스페인	32,731
5	네덜란드	46,771	22	대한민국	32,019
6	아일랜드	46,384	23	이스라엘	31,724
7	오스트리아	45,389	24	체코	29,107
8	호주	44,422	25	슬로베니아	28,823
9	덴마크	44,221	26	포르투갈	27,538
10	스웨덴	44,053	27	그리스	27,027
11	독일	43,662	28	슬로바키아	26,270
12	캐나다	42,617	29	에스토니아	25,222
13	벨기에	41,938	30	헝가리	23,196
14	아이슬란드	41,033	31	폴란드	23,068
15	핀란드	40,129	32	칠레	20,611
16	프랑스	37,881	33	터키	18,182
17	영국	37,876	34	멕시코	16,709

2. 재정지속도

가. 국가채무 비율

2014년 국가채무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12.2%)로 나타났다. 다음은 18.7%의 칠레, 29.5%의 룩셈부르크의 순서로 낮은 국가채무 비율을 보였다. 한국은 33.0%로 4위에 해당하였다. 이는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일본의 국가채무 비율은 231.7%로 200%를 상회하며 비교 국가군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그리스(151.8%), 이탈리아(135.7%), 포르투갈(128.1%), 벨기에(116.9%), 아일랜드(116.4%), 프랑스(107.4%)의 순으로 100%를 상회하는 높은 국가채무 비율을 보였다.

〈표 3-5〉 국가별 국가채무 비율 순위

(단위: %)

순위	국가	국가채무 비율	순위	국가	국가채무 비율
1	에스토니아	12.2	18	네덜란드	75.2
2	칠레	18.7	19	이스라엘	78.5
3	룩셈부르크	29.5	20	독일	83.5
4	대한민국	33.0	21	캐나다	88.7
5	호주	35.1	22	스페인	91.6
6	노르웨이	37.0	23	아이슬란드	92.9
7	뉴질랜드	40.0	24	헝가리	94.8
8	스위스	43.8	25	오스트리아	95.0
9	터키	45.1	26	영국	99.3
10	멕시코	46.2	27	미국	99.7
11	스웨덴	47.3	28	프랑스	107.4
12	체코	53.3	29	아일랜드	116.4
13	슬로바키아	55.0	30	벨기에	116.9
14	덴마크	58.6	31	포르투갈	128.1
15	핀란드	62.2	32	이탈리아	135.7
16	폴란드	62.3	33	그리스	151.8
17	슬로베니아	66.9	34	일본	231.7

나. 재정수지 비율

34개 OECD 국가 중 기간 평균 흑자재정을 보인 국가는 노르웨이(11.6%), 한국(1.1%), 룩셈부르크(0.5%), 에스토니아(0.3%), 스위스(0.2%), 칠레(0.1%)의 6개 국가 뿐이었다. 이처럼 한국은 OECD 국가 중 비교적 양호한 재정수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기를 경험한 아일랜드(-12.5%), 그리스(-9.4%)가 가장 극심한 재정적자 수준을 보였고, 다음은 스페인(-8.4%), 미국(-8.3%), 일본(-7.9%), 영국(-7.4%), 슬로베니아(-7.3%) 순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가 흑자인 6개 국가를 제외한 28개 국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평균 재정적자를 기록하였다.

〈표 3-6〉 국가별 재정수지 비율 순위

(단위: %)

순위	국가	재정수지 비율	순위	국가	재정수지 비율
1	노르웨이	11.6	18	헝가리	-3.4
2	대한민국	1.1	19	호주	-3.6
3	룩셈부르크	0.5	20	네덜란드	-3.6
4	에스토니아	0.3	21	벨기에	-3.7
5	스위스	0.2	22	이스라엘	-4.0
6	칠레	0.1	23	아이슬란드	-4.2
7	멕시코	-0.2	24	슬로바키아	-4.3
8	스웨덴	-0.8	25	폴란드	-4.7
9	독일	-1.0	26	프랑스	-4.9
10	덴마크	-1.6	27	포르투갈	-7.2
11	터키	-1.9	28	슬로베니아	-7.3
12	캐나다	-2.0	29	영국	-7.4
13	핀란드	-2.3	30	일본	-7.9
14	오스트리아	-2.6	31	미국	-8.3
15	뉴질랜드	-2.8	32	스페인	-8.4
16	체코	-2.9	33	그리스	-9.4
17	이탈리아	-3.3	34	아일랜드	-12.5

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에서 순위가 결정됨.

다. 국민부담률

OECD 국가 중 기간 평균 국민부담률은 멕시코가 19.3%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다음은 20.4%의 칠레이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4.2%로 비교국가 중 3위에 해당하였고, 이 뒤를 이어 미국(24.4%), 호주(26.7%), 스위스(26.8%), 터키(27.9%)의 순으로 국민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구 및 대륙 유럽 국가들의 국민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덴마크가 47.1%로 가장 높고, 프랑스가 43.8%, 벨기에가 43.7% 수준이었다. 다음은 이탈리아(43.0%), 스웨덴(42.8%), 핀란드(42.6%), 오스트리아(41.8%), 노르웨이(41.0%)의 순으로 높은 국민부담률을 보였다.

〈표 3-7〉 국가별 국민부담률 순위

(단위: %)

순위	국가	국민부담률	순위	국가	국민부담률
1	멕시코	19.3	18	영국	33.0
2	칠레	20.4	19	체코	33.5
3	대한민국	24.2	20	그리스	34.1
4	미국	24.4	21	아이슬란드	35.5
5	호주	26.7	22	독일	35.9
6	스위스	26.8	23	네덜란드	36.2
7	터키	27.9	24	슬로베니아	36.7
8	아일랜드	28.3	25	헝가리	37.9
9	일본	29.0	26	룩셈부르크	38.2
10	슬로바키아	29.3	27	노르웨이	41.0
11	이스라엘	30.5	28	오스트리아	41.8
12	캐나다	30.6	29	핀란드	42.6
13	뉴질랜드	31.5	30	스웨덴	42.8
14	폴란드	31.9	31	이탈리아	43.0
15	스페인	32.2	32	벨기에	43.7
16	에스토니아	32.4	33	프랑스	43.8
17	포르투갈	32.8	34	덴마크	47.1

3. 복지수요도

가. 총부양비

OECD 34개국 중 한국의 총부양비가 36.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 규모 대비 15세 미만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 인구 규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은 미래를 대비할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슬로바키아(40.6%), 폴란드(42.8%), 칠레(44.1%), 룩셈부르크(44.8%) 순으로 총부양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스라엘(63.3%), 일본(61.1%), 프랑스(57.2%), 스웨덴(57.1%), 핀란드(57.1%) 순으로 총부양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국가별 총부양비 순위

(단위: %)

순위	국가	총부양비	순위	국가	총부양비
1	대한민국	36.9	18	노르웨이	51.9
2	슬로바키아	40.6	19	에스토니아	51.9
3	폴란드	42.8	20	포르투갈	52.2
4	칠레	44.1	21	독일	52.7
5	룩셈부르크	44.8	22	그리스	52.8
6	슬로베니아	45.6	23	뉴질랜드	53.0
7	캐나다	46.6	24	멕시코	53.1
8	터키	47.3	25	아일랜드	53.3
9	헝가리	47.5	26	벨기에	53.7
10	스위스	48.1	27	영국	54.0
11	오스트리아	48.4	28	이탈리아	54.4
12	체코	48.6	29	덴마크	54.7
13	스페인	50.4	30	핀란드	57.1
14	호주	50.5	31	스웨덴	57.1
15	미국	50.7	32	프랑스	57.2
16	아이슬란드	51.1	33	일본	61.1
17	네덜란드	51.8	34	이스라엘	63.3

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에서 순위가 결정됨.

나. 지니계수

2014년 기준으로 조세 납부 및 소득 이전이 이루어진 이후의 처분가능소득의 소득 분배 수준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를 살펴본 결과, 아이슬란드가 0.244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0.252의 노르웨이, 0.254의 덴마크, 0.255의 슬로베니아, 0.257의 핀란드, 0.262의 체코 순으로 양호한 소득분배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0.302로 0.300의 지니계수를 보인 폴란드(17위)와 함께 전체 34개 국가 중 18위로 중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칠레의 지니계수는 0.465로 소득분배가 가장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0.459의 멕시코, 0.394의 미국, 0.393의 터키, 0.365의 이스라엘, 0.361의 에스토니아 순으로 불평등한 소득분배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3-9〉 국가별 지니계수 순위

순위	국가	지니계수	순위	국가	지니계수
1	아이슬란드	0.244	18	대한민국	0.302
2	노르웨이	0.252	19	아일랜드	0.309
3	덴마크	0.254	20	캐나다	0.322
4	슬로베니아	0.255	21	이탈리아	0.325
5	핀란드	0.257	22	일본	0.330
6	체코	0.262	23	뉴질랜드	0.333
7	벨기에	0.268	24	호주	0.337
8	슬로바키아	0.269	25	포르투갈	0.342
9	오스트리아	0.280	26	그리스	0.343
10	룩셈부르크	0.281	27	스페인	0.346
10	스웨덴	0.281	28	영국	0.358
12	네덜란드	0.283	29	에스토니아	0.361
13	헝가리	0.288	30	이스라엘	0.365
14	독일	0.292	31	터키	0.393
15	프랑스	0.294	32	미국	0.394
16	스위스	0.295	33	멕시코	0.459
17	폴란드	0.300	34	칠레	0.465

다. 상대빈곤율

이전소득을 포함하고 조세를 차감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율을 살펴 보면, 아이슬란드가 4.6%로 가장 낮았다. 다음은 5.4%의 덴마크, 6.0%의 체코, 6.8%의 핀란드, 7.8%의 노르웨이, 8.0%의 프랑스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14.4%로 전체 비교국가 중 25위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위권에 속하였다.

반면, 이스라엘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18.6%로 34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17.5%의 미국, 17.2%의 터키, 16.8%의 칠레, 16.7%의 멕시코, 16.3%의 에스토니아, 16.1%의 일본 등이 높은 상대빈곤율을 보이며 하위권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집단 경향은 소득분배 수준을 보여주는 지니계수의 분포와 유사한 형태이다.

〈표 3-10〉 국가별 상대빈곤율 순위

(단위: %)

순위	국가	상대빈곤율	순위	국가	상대빈곤율
1	아이슬란드	4.6	18	헝가리	10.1
2	덴마크	5.4	19	영국	10.4
3	체코	6.0	20	폴란드	10.5
4	핀란드	6.8	21	캐나다	12.6
5	노르웨이	7.8	22	호주	12.8
6	프랑스	8.0	23	이탈리아	13.3
7	룩셈부르크	8.4	24	포르투갈	13.6
7	네덜란드	8.4	25	대한민국	14.4
7	슬로바키아	8.4	26	그리스	15.1
10	스위스	8.6	27	스페인	15.9
11	스웨덴	8.8	28	일본	16.1
12	아일랜드	8.9	29	에스토니아	16.3
13	오스트리아	9.0	30	멕시코	16.7
14	독일	9.1	31	칠레	16.8
15	슬로베니아	9.5	32	터키	17.2
16	뉴질랜드	9.9	33	미국	17.5
17	벨기에	10.0	34	이스라엘	18.6

라. 경제고통지수

2010~2014년의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합으로 산출되는 경제고통지수를 살펴본 결과, 스위스가 4.7% 수준으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4.9%를 기록하여 전체 34개국 중 2위에 해당하였다. 이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업률의 합으로 측정되는 경제고통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 외 노르웨이(5.6%), 독일(6.0%), 이스라엘(6.5%), 룩셈부르크(6.5%), 일본(6.5%), 체코(6.5%) 등이 경제고통지수로 측정한 복지수요가 양호한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그리스의 경제고통지수가 25.4%로 가장 높고, 다음은 24.4%의 스페인, 18.9%의 터키, 14.2%의 포르투갈, 13.1%의 슬로바키아와 이탈리아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남부 유럽에서 경제고통지수로 표현되는 복지수요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이탈리아와 아일랜드가 중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표 3-11〉 국가별 경제고통지수 순위

(단위: %)

순위	국가	경제고통지수	순위	국가	경제고통지수
1	스위스	4.7	18	스웨덴	7.9
2	대한민국	4.9	19	호주	8.7
3	노르웨이	5.6	20	캐나다	8.9
4	독일	6.0	21	벨기에	8.9
5	이스라엘	6.5	22	멕시코	9.1
6	룩셈부르크	6.5	23	폴란드	9.2
7	일본	6.5	24	핀란드	9.8
8	체코	6.5	25	슬로베니아	10.1
9	아이슬란드	7.2	26	프랑스	10.9
10	뉴질랜드	7.2	27	칠레	11.3
11	오스트리아	7.3	28	아일랜드	12.3
12	덴마크	7.3	29	이탈리아	13.1
13	에스토니아	7.4	30	슬로바키아	13.1
14	헝가리	7.5	31	포르투갈	14.2
15	네덜란드	7.8	32	터키	18.9
16	영국	7.9	33	스페인	24.4
17	미국	7.9	34	그리스	25.4

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에서 순위가 결정됨.

4. 복지충족도

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2014년 기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네덜란드가 90.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스페인(82.1%), 오스트리아(78.1%), 룩셈부르크(76.8%), 터키(75.7%), 포르투갈(73.8%), 이탈리아(69.5%), 아이슬란드(69.2%), 덴마크(67.8%), 그리스(66.7%)가 높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보이는 상위 그룹을 형성하였다.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9.3%로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영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21.6%에 불과하여 가장 낮은 순위에 해당하였고, 멕시코(25.5%), 칠레(32.8%), 아일랜드(34.7%), 일본(35.1%), 미국(35.2%) 등이 하위권을 형성하였다.

〈표 3-12〉 국가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순위

(단위: %)

순위	국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순위	국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1	네덜란드	90.5	18	노르웨이	49.8
2	스페인	82.1	19	체코	49.0
3	오스트리아	78.1	20	벨기에	46.6
4	룩셈부르크	76.8	21	호주	44.5
5	터키	75.7	22	폴란드	43.1
6	포르투갈	73.8	23	스위스	40.2
7	이탈리아	69.5	24	뉴질랜드	40.1
8	아이슬란드	69.2	25	대한민국	39.3
9	덴마크	67.8	26	슬로베니아	38.4
10	그리스	66.7	27	독일	37.5
11	슬로바키아	62.1	28	캐나다	36.7
12	이스라엘	61.0	29	미국	35.2
13	헝가리	58.7	30	일본	35.1
14	스웨덴	56.0	31	아일랜드	34.7
15	핀란드	55.8	32	칠레	32.8
16	프랑스	55.4	33	멕시코	25.5
17	에스토니아	50.5	34	영국	21.6

나. 건강보험 가입률

2014년 기준 공공 및 민간 건강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비교 국가의 상당수가 100% 혹은 이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건강보험 가입률 또한 100.0%로 2위 국가 집단에 속하였다.

반면, 그리스는 86.0%에 불과하여 가장 낮은 건강보험 가입률을 기록하였다. 다음은 미국(90.9%), 폴란드(91.3%), 멕시코(92.3%), 칠레(92.6%), 슬로바키아(94.2%), 에스토니아(94.3%), 헝가리(95.0%) 등의 순서로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있는 하위권을 형성하였다.

〈표 3-13〉 국가별 건강보험 가입률 순위

(단위: %)

순위	국가	건강보험 가입률	순위	국가	건강보험 가입률
1	체코	100.2	2	영국	100.0
2	호주	100.0	19	오스트리아	99.9
2	캐나다	100.0	19	프랑스	99.9
2	덴마크	100.0	21	독일	99.8
2	핀란드	100.0	21	네덜란드	99.8
2	아이슬란드	100.0	21	스페인	99.8
2	아일랜드	100.0	24	벨기에	99.0
2	이스라엘	100.0	25	터키	98.4
2	이탈리아	100.0	26	룩셈부르크	95.9
2	일본	100.0	27	헝가리	95.0
2	대한민국	100.0	28	에스토니아	94.3
2	뉴질랜드	100.0	29	슬로바키아	94.2
2	노르웨이	100.0	30	칠레	92.6
2	포르투갈	100.0	31	멕시코	92.3
2	슬로베니아	100.0	32	폴란드	91.3
2	스웨덴	100.0	33	미국	90.9
2	스위스	100.0	34	그리스	86.0

다.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2014년 기준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은 이스라엘이 89.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89.0%의 벨기에, 85.6%의 슬로베니아, 84.2%의 덴마크, 82.9%의 룩셈부르크, 77.6%의 스페인, 75.7%의 아이슬란드, 75.0%의 포르투갈, 74.1%의 네덜란드, 73.3%의 이탈리아가 높은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을 보이는 상위 10개 그룹을 형성하여, 고용과 관련한 높은 복지충족 수준을 보였다.

반면, 한국의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은 56.1%로 전체 34개 국가 중 23위의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실업급여제도 없이 공공부조제도 등으로 보완하고 있는 멕시코를 제외하고, 영국이 19.8%, 호주가 31.3%, 뉴질랜드가 34.9%, 그리스가 38.8%, 폴란드가 44.9%, 아일랜드가 48.6%, 터키가 52.6%, 에스토니아가 54.7%, 오스트리아가 55.0%, 칠레가 55.5%로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을 보이는 하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국가별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순위

(단위: %)

순위	국가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순위	국가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1	이스라엘	89.6	18	캐나다	63.9
2	벨기에	89.0	19	슬로바키아	62.1
3	슬로베니아	85.6	20	미국	61.3
4	덴마크	84.2	21	스웨덴	60.9
5	룩셈부르크	82.9	22	독일	58.8
6	스페인	77.6	23	대한민국	56.1
7	아이슬란드	75.7	24	칠레	55.5
8	포르투갈	75.0	25	오스트리아	55.0
9	네덜란드	74.1	26	에스토니아	54.7
10	이탈리아	73.3	27	터키	52.6
11	스위스	73.2	28	아일랜드	48.6
12	핀란드	70.7	29	폴란드	44.9
13	일본	69.3	30	그리스	38.8
14	프랑스	69.2	31	뉴질랜드	34.9
15	노르웨이	67.4	32	호주	31.3
16	헝가리	67.2	33	영국	19.8
17	체코	65.0	34	멕시코	0.0

라. 영유아 1인당 보육 공공사회지출액

0~4세 영유아 1인당 보육 공공사회지출액은 스웨덴이 \$13,1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12,107.8의 룩셈부르크, \$11,998.3의 노르웨이, \$10,736.8의 덴마크 순으로 영유아 1인당 \$10,000이 넘는 높은 보육 공공사회지출액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은 \$6,097.5 수준으로 나타나 OECD 가입국 34개 중 8위에 해당하여 상위권 그룹에 속하였는데, 이는 2010년 이후 확대된 보육정책의 정책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터키는 \$417.7로 영유아 1인당 보육 공공사회지출액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그리스(\$834.2), 멕시코(\$921.2), 칠레(\$1,271.0), 에스토니아(\$1,608.0), 캐나다(\$1,714.8) 순으로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표 3-15〉 국가별 영유아 1인당 보육 공공사회지출액 순위

(단위: PPPs, in US dollars)

순위	국가	영유아 1인당 보육 공공사회지출액	순위	국가	영유아 1인당 보육 공공사회지출액
1	스웨덴	13,149.3	18	일본	3,348.8
2	룩셈부르크	12,107.8	19	스페인	3,344.7
3	노르웨이	11,998.3	20	아일랜드	3,001.8
4	덴마크	10,736.8	21	슬로베니아	2,792.0
5	아이슬란드	9,965.8	22	헝가리	2,786.5
6	프랑스	8,220.1	23	미국	2,765.8
7	핀란드	7,527.9	24	체코	2,428.0
8	대한민국	6,097.5	25	이스라엘	2,326.4
9	네덜란드	5,952.6	26	슬로바키아	2,324.4
10	독일	5,918.1	27	포르투갈	2,233.1
11	벨기에	5,460.8	28	폴란드	1,890.6
12	뉴질랜드	4,951.7	29	캐나다	1,714.8
13	오스트리아	4,715.5	30	에스토니아	1,608.0
14	영국	4,526.8	31	칠레	1,271.0
15	호주	4,261.8	32	멕시코	921.2
16	스위스	3,987.7	33	그리스	834.2
17	이탈리아	3,926.7	34	터키	417.7

마. 인구 1인당 장애연금 지출액

인구 1인당 장애연금 지출액이 가장 높은 국가는 1,325.5\$의 노르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가 1,027.3\$, 네덜란드가 895.8\$, 룩셈부르크가 859.6\$, 아이슬란드가 821.7\$, 벨기에가 741.9\$, 호주가 734.2\$, 핀란드가 727.0\$, 오스트리아가 599.0\$, 스위스가 584.9\$로 높은 보장 수준을 보이는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인구 1인당 장애연금 지출액이 가장 낮은 국가는 2.2\$의 멕시코로 나타났고, 독일이 38.1\$로 그 뒤를 이었으며, 한국은 41.2\$로 34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지원 수준을 보였다. 그 외 터키(46.9\$), 칠레(95.3\$), 일본(149.2\$), 캐나다(154.9\$), 슬로베니아(172.7\$), 이탈리아(205.5\$), 그리스(207.4\$) 등이 인구 1인당 장애연금 지출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국가별 인구 1인당 장애연금 지출액 순위

(단위: PPPs, in US dollars)

순위	국가	인구 1인당 장애연금 지출액	순위	국가	인구 1인당 장애연금 지출액
1	노르웨이	1,325.5	18	프랑스	403.7
2	덴마크	1,027.3	19	체코	345.0
3	네덜란드	895.8	20	뉴질랜드	312.3
4	룩셈부르크	859.6	21	에스토니아	309.1
5	아이슬란드	821.7	22	슬로바키아	287.0
6	벨기에	741.9	23	헝가리	273.0
7	호주	734.2	24	폴란드	221.5
8	핀란드	727.0	25	그리스	207.4
9	오스트리아	599.0	26	이탈리아	205.5
10	스위스	584.9	27	슬로베니아	172.7
11	스웨덴	536.1	28	캐나다	154.9
12	아일랜드	514.1	29	일본	149.2
13	이스라엘	483.9	30	칠레	95.3
14	스페인	468.5	31	터키	46.9
15	영국	458.2	32	대한민국	41.2
16	미국	442.9	33	독일	38.1
17	포르투갈	439.4	34	멕시코	2.2

바. 공공사회지출 비율

2014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31.9%)이다. 그 다음으로 핀란드(31.0%), 벨기에(30.7%), 덴마크(30.1%)의 북구 유럽이 상위권에 속하였고, 이탈리아가 28.6%, 오스트리아가 28.4%, 스웨덴이 28.1%, 스페인이 26.8%, 독일이 25.8%, 포르투갈이 25.2%로 높은 공공사회지출 비율을 보이는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10.4%에 불과하여 멕시코(7.9%), 칠레(10.0%)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12.5%의 터키, 15.5%의 이스라엘, 16.3%의 에스토니아, 16.5%의 아이슬란드, 17.0%의 캐나다, 18.4%의 슬로바키아, 19.0%의 호주 등이 낮은 공공사회지출 비율을 보이는 하위권에 속하였다.

〈표 3-17〉 국가별 공공사회지출 비율 순위

(단위: GDP %)

순위	국가	공공사회지출 비율	순위	국가	공공사회지출 비율
1	프랑스	31.9	18	영국	21.7
2	핀란드	31.0	19	아일랜드	21.0
3	벨기에	30.7	20	뉴질랜드	20.8
4	덴마크	30.1	21	폴란드	20.6
5	이탈리아	28.6	22	체코	20.6
6	오스트리아	28.4	23	스위스	19.4
7	스웨덴	28.1	24	미국	19.2
8	스페인	26.8	25	호주	19.0
9	독일	25.8	26	슬로바키아	18.4
10	포르투갈	25.2	27	캐나다	17.0
11	네덜란드	24.7	28	아이슬란드	16.5
12	그리스	24.0	29	에스토니아	16.3
13	슬로베니아	23.7	30	이스라엘	15.5
14	룩셈부르크	23.5	31	터키	12.5
15	일본	23.1	32	대한민국	10.4
16	헝가리	22.1	33	칠레	10.0
17	노르웨이	22.0	34	멕시코	7.9

5. 국민행복도

가.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로 2.6명이었다. 그리고 그리스가 4.2명, 멕시코가 5.2명, 이스라엘이 5.5명, 이탈리아가 6.3명, 스페인과 영국이 각각 7.5명, 슬로바키아가 9.6명으로 10명 이하의 낮은 자살률을 보이는 상위그룹을 형성하였다.

한국은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28.7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살률이 가장 높았다. 일본이 18.7명, 슬로베니아가 18.6명, 헝가리가 18.0명, 에스토니아가 17.3명, 벨기에가 16.7명, 폴란드가 14.7명, 프랑스가 14.4명으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하위 그룹에 속하였다.

〈표 3-18〉 국가별 자살률 순위

(단위: 명/인구 10만 명)

순위	국가	자살률	순위	국가	자살률
1	터키	2.6	18	아이슬란드	11.8
2	그리스	4.2	19	호주	12.2
3	멕시코	5.2	20	스위스	12.2
4	이스라엘	5.5	21	룩셈부르크	12.3
5	이탈리아	6.3	22	뉴질랜드	12.4
6	스페인	7.5	23	미국	13.1
6	영국	7.5	24	체코	13.3
8	슬로바키아	9.6	25	오스트리아	13.9
9	포르투갈	10.0	26	핀란드	14.2
10	칠레	10.3	27	프랑스	14.4
11	캐나다	10.5	28	폴란드	14.7
12	네덜란드	10.5	29	벨기에	16.7
13	독일	10.7	30	에스토니아	17.3
14	아일랜드	10.8	31	헝가리	18.0
15	노르웨이	10.9	32	슬로베니아	18.6
16	덴마크	11.3	33	일본	18.7
17	스웨덴	11.4	34	대한민국	28.7

나. 합계출산율

OECD 가입국 중 2014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3.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멕시코가 2.2명, 터키가 2.17명, 프랑스가 1.98명, 아일랜드가 1.95명, 아이슬란드가 1.93명, 뉴질랜드가 1.92명, 스웨덴이 1.88명, 미국이 1.86명, 영국이 1.81명으로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권은 1.71명의 핀란드와 네덜란드, 1.69명의 덴마크, 1.61명의 캐나다 등이 해당하였다.

반면, 한국은 1.21명에 불과하여, 전체 34개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였다. 한국 다음으로 낮은 국가는 포르투갈 1.23명, 폴란드 1.29명, 그리스 1.30명, 스페인 1.32명, 슬로바키아 1.35명, 이탈리아 1.37명, 헝가리 1.41명, 일본 1.42명 등이다.

〈표 3-19〉 국가별 합계출산율 순위

(단위: 명)

순위	국가	합계출산율	순위	국가	합계출산율
1	이스라엘	3.08	18	캐나다	1.61
2	멕시코	2.20	19	슬로베니아	1.58
3	터키	2.17	20	에스토니아	1.54
4	프랑스	1.98	21	스위스	1.54
5	아일랜드	1.95	22	체코	1.53
6	아이슬란드	1.93	23	룩셈부르크	1.50
7	뉴질랜드	1.92	24	독일	1.47
8	스웨덴	1.88	25	오스트리아	1.46
9	미국	1.86	26	일본	1.42
10	영국	1.81	27	헝가리	1.41
11	호주	1.80	28	이탈리아	1.37
12	칠레	1.79	29	슬로바키아	1.35
13	노르웨이	1.76	30	스페인	1.32
14	벨기에	1.72	31	그리스	1.30
15	핀란드	1.71	32	폴란드	1.29
15	네덜란드	1.71	33	포르투갈	1.23
17	덴마크	1.69	34	대한민국	1.21

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에서 순위가 결정됨.

다. 출생 시 기대수명

2014년 기준 출생 시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는 83.7세를 기록한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83.3세의 스페인과 스위스가 2위, 83.2세의 이탈리아가 4위, 82.9세의 아이슬란드가 5위, 82.8세의 프랑스가 6위, 82.4세의 호주가 7위, 82.3세의 룩셈부르크와 스웨덴이 8위의 상위권에 속하였다. 한국은 82.2세로 이스라엘, 노르웨이와 함께 10위의 높은 출생 시 기대수명을 기록하였다.

반면, 멕시코는 출생 시 기대수명이 74.8세에 불과하여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헝가리가 75.9세, 슬로바키아가 76.9세, 에스토니아가 77.2세, 폴란드가 77.7세, 터키가 78.0세, 미국이 78.8세, 체코가 78.9세, 칠레가 79.0세, 덴마크가 80.8세 등으로 나타나 출생 시 기대수명이 낮은 하위권을 형성하였다.

〈표 3-20〉 국가별 출생 시 기대수명 순위

(단위: 세)

순위	국가	출생 시 기대수명	순위	국가	출생 시 기대수명
1	일본	83.7	18	벨기에	81.4
2	스페인	83.3	18	아일랜드	81.4
2	스위스	83.3	18	영국	81.4
4	이탈리아	83.2	21	핀란드	81.3
5	아이슬란드	82.9	22	독일	81.2
6	프랑스	82.8	22	포르투갈	81.2
7	호주	82.4	22	슬로베니아	81.2
8	룩셈부르크	82.3	25	덴마크	80.8
8	스웨덴	82.3	26	칠레	79.0
10	이스라엘	82.2	27	체코	78.9
10	대한민국	82.2	28	미국	78.8
10	노르웨이	82.2	29	터키	78.0
13	네덜란드	81.8	30	폴란드	77.7
14	오스트리아	81.6	31	에스토니아	77.2
14	뉴질랜드	81.6	32	슬로바키아	76.9
16	캐나다	81.5	33	헝가리	75.9
16	그리스	81.5	34	멕시코	74.8

라. 삶의 만족도

2015년 최근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34개 OECD 가입국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노르웨이의 행복도가 7.6점으로 스위스와 함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위는 7.5점의 덴마크와 아이슬란드였고, 캐나다와 핀란드, 뉴질랜드는 7.4점으로 5위 집단에 속하였다. 호주와 네덜란드, 스웨덴의 행복도도 7.3점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오스트리아와 이스라엘의 행복도도 7.1점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5.8점에 불과하여, 이탈리아와 함께 27위의 하위권에 속하였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의 행복도도 5.9점으로 26위에 그쳐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한국 및 이탈리아보다 낮은 행복도를 보인 국가는 5.7점의 슬로베니아, 5.6점의 에스토니아 및 그리스, 5.5점의 터키, 5.3점의 헝가리, 5.1점의 포르투갈 6개 국가이다.

〈표 3-21〉 국가별 삶의 만족도 순위

(단위: 점)

순위	국가	삶의 만족도	순위	국가	삶의 만족도
1	노르웨이	7.6	18	체코	6.6
1	스위스	7.6	19	칠레	6.5
3	덴마크	7.5	19	영국	6.5
3	아이슬란드	7.5	21	프랑스	6.4
5	캐나다	7.4	21	스페인	6.4
5	핀란드	7.4	23	멕시코	6.2
5	뉴질랜드	7.4	23	슬로바키아	6.2
8	호주	7.3	25	폴란드	6.0
8	네덜란드	7.3	26	일본	5.9
8	스웨덴	7.3	27	이탈리아	5.8
11	오스트리아	7.1	27	대한민국	5.8
11	이스라엘	7.1	29	슬로베니아	5.7
13	독일	7.0	30	에스토니아	5.6
14	벨기에	6.9	30	그리스	5.6
14	미국	6.9	32	터키	5.5
16	아일랜드	6.8	33	헝가리	5.3
17	룩셈부르크	6.7	34	포르투갈	5.1

마. 여가시간

1일 24시간 중 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측정하는 여가시간의 지표에서 프랑스가 16.36시간의 가장 긴 여가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스페인이 15.93시간, 네덜란드가 15.90시간, 덴마크가 15.87시간, 벨기에가 15.77시간, 노르웨이가 15.56시간, 독일이 15.55시간, 아일랜드가 15.30시간, 스웨덴이 15.18시간, 핀란드와 룩셈부르크가 15.17시간, 헝가리가 15.04시간, 체코가 15.03시간, 스위스가 15.01시간의 여가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15시간 이상의 긴 여가를 즐기는 상위권에 속한다.

한국의 여가시간은 1일당 14.70시간에 불과해 25위의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그 외 터키(12.24시간), 멕시코(12.80시간) 이스라엘(13.94시간), 아이슬란드(14.13시간), 호주(14.35시간, 캐나다(14.41시간) 순으로 여가시간이 짧게 나타났다.

〈표 3-22〉 국가별 여가시간 순위

(단위: 시간/일)

순위	국가	여가시간	순위	국가	여가시간
1	프랑스	16.36	18	이탈리아	14.89
2	스페인	15.93	19	뉴질랜드	14.87
3	네덜란드	15.90	20	영국	14.87
4	덴마크	15.87	21	일본	14.85
5	벨기에	15.77	22	슬로베니아	14.75
6	노르웨이	15.56	23	그리스	14.74
7	독일	15.55	24	포르투갈	14.72
8	아일랜드	15.30	25	대한민국	14.70
9	스웨덴	15.18	26	오스트리아	14.55
10	핀란드	15.17	27	미국	14.47
10	룩셈부르크	15.17	27	폴란드	14.42
12	헝가리	15.04	29	캐나다	14.41
13	체코	15.03	30	호주	14.35
14	스위스	15.01	31	아이슬란드	14.13
15	슬로바키아	14.92	32	이스라엘	13.94
16	칠레	14.91	33	멕시코	12.80
17	에스토니아	14.90	34	터키	12.24

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에서 순위가 결정됨.

바. 국가투명도

2015년 기준 국가투명도 혹은 부패인식지수가 가장 양호한 국가는 100점 기준으로 91점을 기록한 덴마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핀란드가 90.0점, 스웨덴이 89.0점, 뉴질랜드가 88.0점, 네덜란드와 노르웨이가 87.0점, 스위스가 86.0점, 캐나다가 83.0점, 독일과 룩셈부르크, 영국이 81.0점으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국가투명도는 56.0점에 불과하여 체코와 함께 27위에 머물렀다. 한국 및 체코보다 국가투명도가 낮은 국가는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51.0점), 그리스(46.0점), 이탈리아(44.0점), 터키(42.0점), 멕시코(35.0점) 등 6개 국가이다.

〈표 3-23〉 국가별 국가투명도 순위

(단위: 점)

순위	국가	국가투명도	순위	국가	국가투명도
1	덴마크	91.0	17	일본	75.0
2	핀란드	90.0	19	칠레	70.0
3	스웨덴	89.0	19	에스토니아	70.0
4	뉴질랜드	88.0	19	프랑스	70.0
5	네덜란드	87.0	22	포르투갈	63.0
5	노르웨이	87.0	23	폴란드	62.0
7	스위스	86.0	24	이스라엘	61.0
8	캐나다	83.0	25	슬로베니아	60.0
9	독일	81.0	26	스페인	58.0
9	룩셈부르크	81.0	27	체코	56.0
9	영국	81.0	27	대한민국	56.0
12	호주	79.0	29	헝가리	51.0
12	아이슬란드	79.0	29	슬로바키아	51.0
14	벨기에	77.0	31	그리스	46.0
15	오스트리아	76.0	32	이탈리아	44.0
15	미국	76.0	33	터키	42.0
17	아일랜드	75.0	34	멕시코	35.0

제2절 KCWI 2016 부문별 순위

1. 경제활력도

고용률, 실질경제성장률, 생산성 증가율, 1인당 GDP의 2010~2014년 기간 평균값으로 측정, 표준화한 후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34개 OECD 가입국의 경제활력도 분포를 보면, 스위스가 0.695점으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0.675점의 룩셈부르크, 0.628점의 노르웨이, 0.623점의 호주 등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은 0.593점으로 전체 34개 국가 중 8위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활력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그리스의 경제활력도는 0.079점에 불과하여, 경제활력이 가장 떨어지는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이탈리아(0.296점), 터키(0.314점), 스페인(0.340점), 멕시코(0.345점) 등이 경제활력도가 낮은 국가군에 속하였다.

〈표 3-24〉 국가별 경제활력도 순위

순위	국가	경제활력도	순위	국가	경제활력도
1	스위스	0.695	18	이스라엘	0.509
2	룩셈부르크	0.675	19	영국	0.507
3	노르웨이	0.628	20	폴란드	0.506
4	호주	0.623	21	칠레	0.489
5	스웨덴	0.608	22	핀란드	0.485
6	독일	0.595	23	슬로바키아	0.485
7	캐나다	0.595	24	체코	0.451
8	대한민국	0.593	25	프랑스	0.442
9	에스토니아	0.578	26	슬로베니아	0.424
10	아이슬란드	0.573	27	벨기에	0.415
11	네덜란드	0.563	28	헝가리	0.410
12	덴마크	0.561	29	포르투갈	0.371
13	오스트리아	0.545	30	멕시코	0.345
14	일본	0.538	31	스페인	0.340
15	미국	0.530	32	터키	0.314
16	뉴질랜드	0.526	33	이탈리아	0.296
17	아일랜드	0.515	34	그리스	0.079

2. 재정지속도

재정지속도는 국가채무 비율, 재정수지 비율, 국민부담률의 지표값을 표준화한 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칠레의 재정지속도가 0.843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멕시코가 0.818점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은 0.770점으로 전체 34개 국가 중 3위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지속도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스위스가 0.714점, 호주가 0.686점, 에스토니아가 0.678점, 터키가 0.672점, 노르웨이가 0.643점, 뉴질랜드가 0.615점, 슬로바키아가 0.610점 등으로 재정지속도가 높은 상위권에 속하였다.

반면, 이탈리아의 재정지속도는 0.302점에 불과해, 34개 비교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0.313점의 프랑스, 0.314점의 벨기에, 0.321점의 일본, 0.342점의 그리스, 0.372점의 덴마크, 0.386점의 오스트리아 등이 재정지속도 지표에서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표 3-25〉 국가별 재정지속도 순위

순위	국가	재정지속도	순위	국가	재정지속도
1	칠레	0.843	18	네덜란드	0.487
2	멕시코	0.818	19	스페인	0.467
3	대한민국	0.778	20	아이슬란드	0.465
4	스위스	0.714	21	스웨덴	0.461
5	호주	0.686	22	영국	0.457
6	에스토니아	0.678	23	슬로베니아	0.449
7	터키	0.672	24	아일랜드	0.443
8	노르웨이	0.643	25	헝가리	0.436
9	뉴질랜드	0.615	26	핀란드	0.425
10	슬로바키아	0.610	27	포르투갈	0.420
11	미국	0.572	28	오스트리아	0.386
12	룩셈부르크	0.570	29	덴마크	0.372
13	캐나다	0.569	30	그리스	0.342
14	체코	0.566	31	일본	0.321
15	이스라엘	0.561	32	벨기에	0.314
16	폴란드	0.556	33	프랑스	0.313
17	독일	0.508	34	이탈리아	0.302

3. 복지수요도

국가별 복지수요도는 표준화한 총부양비,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경제고통지수의 값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34개 OECD 가입국 중 복지수요도가 가장 양호한 국가는 0.852점의 아이슬란드인 것으로 나타났고, 0.830점의 체코, 0.793점의 룩셈부르크, 0.791점의 덴마크, 0.789점의 노르웨이, 0.768점의 슬로바키아, 0.765점의 스위스, 0.755점의 슬로베니아, 0.743점의 오스트리아의 순으로 양호한 복지수요도 수준을 나타내었다. 한국은 0.734점으로 10위에 해당하여 복지수요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총부양비와 경제고통지수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그리스의 복지수요는 0.304점에 불과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 다음은 멕시코(0.315점), 스페인(0.317점), 터키(0.322점), 이스라엘(0.335점), 칠레(0.357점) 등의 순으로 하위권을 형성하였다.

〈표 3-26〉 국가별 복지수요도 순위

순위	국가	복지수요도	순위	국가	복지수요도
1	아이슬란드	0.852	18	프랑스	0.631
2	체코	0.830	19	뉴질랜드	0.624
3	룩셈부르크	0.793	20	캐나다	0.618
4	덴마크	0.791	21	아일랜드	0.612
5	노르웨이	0.789	22	영국	0.567
6	슬로바키아	0.768	23	호주	0.566
7	스위스	0.765	24	이탈리아	0.487
8	슬로베니아	0.755	25	에스토니아	0.471
9	오스트리아	0.743	26	포르투갈	0.467
10	대한민국	0.734	27	일본	0.444
11	헝가리	0.717	28	미국	0.412
12	네덜란드	0.716	29	칠레	0.357
13	폴란드	0.715	30	이스라엘	0.335
14	핀란드	0.713	31	터키	0.322
15	독일	0.705	32	스페인	0.317
16	벨기에	0.674	33	멕시코	0.315
17	스웨덴	0.665	34	그리스	0.304

4. 복지충족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건강보험 가입률,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영유아 1인당 보육 공공사회복지지출액, 인구 1인당 장애연금 지출액 및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의 지표값을 표준화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복지충족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0.856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0.782점의 네덜란드, 0.768점의 룩셈부르크, 0.749점의 스웨덴, 0.746점의 핀란드, 0.739점의 노르웨이, 0.730점의 프랑스, 0.719점의 스페인, 0.715점의 벨기에 등이 복지충족도가 높은 상위 그룹을 형성하였다.

한국의 복지충족도는 0.402점에 불과하여 28위에 해당하였다. 이는 낮은 인구 1인당 장애연금 지출액, 공공사회지출 비율,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등이 반영된 것이다. 그 외 멕시코(0.091점), 칠레(0.243점), 폴란드(0.357점), 그리스(0.369점), 미국(0.374점)이 복지충족도가 낮은 하위권에 속하였다.

〈표 3-27〉 국가별 복지충족도 순위

순위	국가	복지충족도	순위	국가	복지충족도
1	덴마크	0.856	18	체코	0.530
2	네덜란드	0.782	19	일본	0.513
3	룩셈부르크	0.768	20	헝가리	0.512
4	스웨덴	0.749	21	호주	0.495
5	핀란드	0.746	22	아일랜드	0.484
6	노르웨이	0.739	23	뉴질랜드	0.478
7	프랑스	0.730	24	슬로바키아	0.463
8	스페인	0.719	25	터키	0.435
9	벨기에	0.715	26	캐나다	0.432
10	오스트리아	0.712	27	영국	0.418
11	아이슬란드	0.688	28	대한민국	0.402
12	이탈리아	0.681	29	에스토니아	0.392
13	포르투갈	0.664	30	미국	0.374
14	이스라엘	0.565	31	그리스	0.369
15	슬로베니아	0.553	32	폴란드	0.357
16	독일	0.545	33	칠레	0.243
17	스위스	0.543	34	멕시코	0.091

5. 국민행복도

국민행복도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합계출산율, 출생 시 기대수명, 삶의 만족도, 1일 여가시간 및 국가투명도의 표준화 지표값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노르웨이의 국민행복도가 0.770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0.754점의 덴마크, 0.749점의 네덜란드, 0.745점의 스웨덴, 0.738점의 스위스, 0.734점의 이스라엘, 0.725점의 뉴질랜드 등이 상위권에 속하였다.

반면, 한국은 0.337점으로 33위에 머물렀다. 이는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 상대적으로 낮은 삶의 만족도와 국가투명도가 반영된 것이다. 국민행복도가 가장 낮은 국가는 0.271점을 기록한 헝가리이다. 그 외 멕시코(0.342점), 터키(0.348점), 폴란드(0.379점), 에스토니아(0.384점), 포르투갈(0.398점) 등이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8〉 국가별 국민행복도 순위

순위	국가	국민행복도	순위	국가	국민행복도
1	노르웨이	0.770	18	오스트리아	0.603
2	덴마크	0.754	19	스페인	0.597
3	네덜란드	0.749	20	미국	0.576
4	스웨덴	0.745	21	칠레	0.555
5	스위스	0.738	22	일본	0.511
5	이스라엘	0.734	23	체코	0.484
7	뉴질랜드	0.725	24	이탈리아	0.475
8	핀란드	0.709	25	그리스	0.437
8	아이슬란드	0.705	26	슬로베니아	0.419
10	캐나다	0.676	27	슬로바키아	0.405
11	호주	0.674	28	포르투갈	0.398
12	독일	0.661	29	에스토니아	0.384
12	아일랜드	0.660	30	폴란드	0.379
14	프랑스	0.655	31	터키	0.348
15	영국	0.645	32	멕시코	0.342
16	벨기에	0.637	33	대한민국	0.337
17	룩셈부르크	0.632	34	헝가리	0.271

제3절 KCWI 2016 종합순위

제2절에서 살펴본 경제활력도, 재정지속도, 복지수요도, 복지충족도, 국민행복도의 5개 부문별 지수에 부문가중치를 적용하여 OECD 가입국의 종합적인 복지 수준을 산출하고 비교하였다. 종합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0.729점이었으며, 다음으로 0.719점의 덴마크, 0.707점의 룩셈부르크, 0.694점의 네덜란드, 0.682점의 아이슬란드 등의 복지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로 북구 유럽 국가와 전통적인 유럽 대륙 복지국가의 순위가 높은 반면, 동구권 및 미주, 아시아 국가의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국의 종합지수는 0.529점으로 34개 OECD 국가 중 21위로 나타났다. 이는 33위에 불과한 국민행복도와 28위에 불과한 복지충족도와 달리 상대적으로 양호한 복지수요도(10위)와 경제활력도(8위), 상위권에 해당하는 재정지속도(3위)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종합지수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한국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5개 부문과 세부지표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3-29〉 KCWI 2016 종합순위

순위	국가	KCWI 2016	순위	국가	KCWI 2016
1	노르웨이	0.729	18	이스라엘	0.548
2	덴마크	0.719	19	슬로바키아	0.532
3	룩셈부르크	0.707	20	슬로베니아	0.532
4	네덜란드	0.694	21	대한민국	0.529
5	아이슬란드	0.682	22	스페인	0.522
6	스웨덴	0.678	23	영국	0.518
7	스위스	0.677	24	이탈리아	0.492
8	핀란드	0.654	25	포르투갈	0.491
9	오스트리아	0.632	26	일본	0.483
10	독일	0.608	27	폴란드	0.482
11	프랑스	0.601	28	미국	0.475
12	벨기에	0.597	29	헝가리	0.475
13	호주	0.593	30	에스토니아	0.470
14	뉴질랜드	0.586	31	칠레	0.443
15	체코	0.572	32	터키	0.400
16	캐나다	0.567	33	그리스	0.320
17	아일랜드	0.551	34	멕시코	0.315

제 4 장

복지 수준 평가

제1절 OECD 국가별 지표 간 균형 비교

제2절 복지 수준의 유형별 비교

제3절 한국의 복지 수준 변화 평가

4

복지 수준 평가 <<

4장에서는 각국의 복지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는 부문별 지표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계산된 부문별 지수를 이용하여 각국의 복지 수준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1절에서는 각국의 부문별 복지 수준의 균형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앞서 2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복지 수준을 구성하는 5개 부문을 PSR의 개념에 입각해서 설정하였다. 복지에 대한 수요에 적절히 반응하는 국가는 복지의 균형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균형이 갖춰진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복지의 정도가 작다는 것은 향후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복지를 위한 재정은 거의 소진되었는데, 여전히 복지수요가 큰 나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나라에서는 복지를 둘러싼 수요와 이에 대한 정부의 공급능력 간의 불일치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2절에서는 5개 부문의 발전 수준이 국가별로 어떠한 유형으로 구분되는지 군집분석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이 어느 나라와 유사한 수준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한국의 복지 수준이 재정적 문제에 직면하여 있는 남유럽 국가와 유사한 수준이라면, 복지지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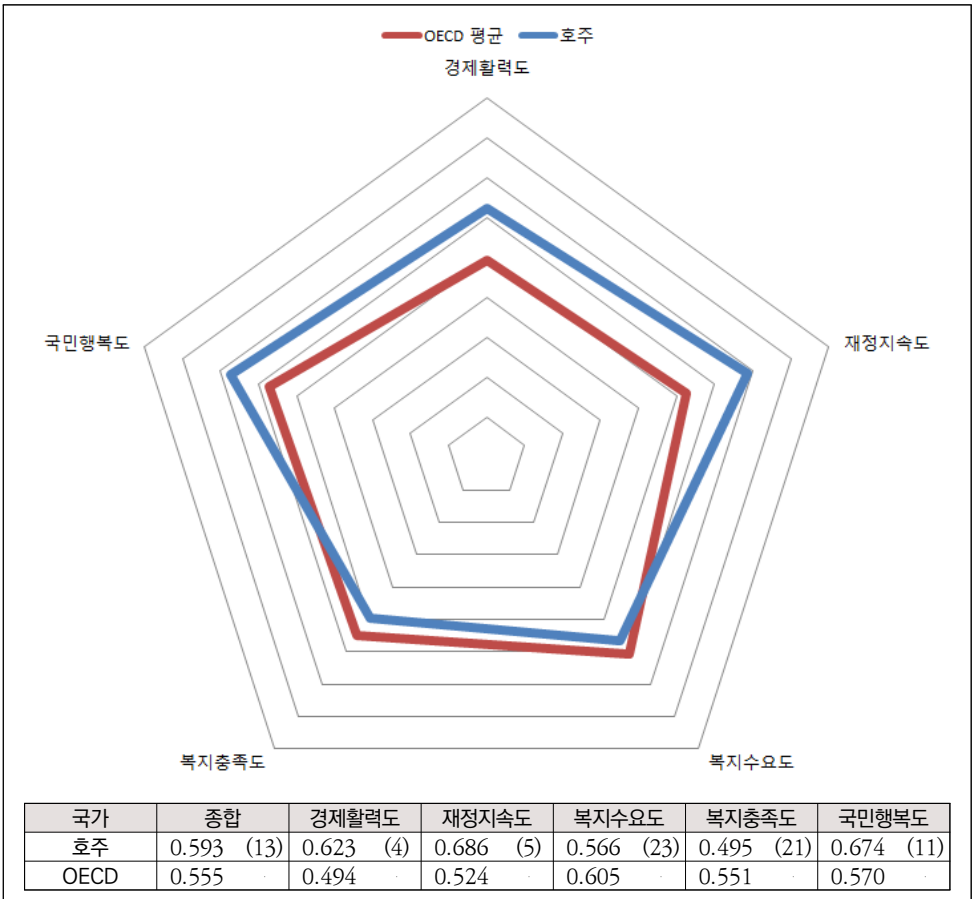
3절에서는 한국의 복지 수준이 지난 시기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KCWI 2016 모델에 2011년 시점의 자료를 투입하고자 한다. 2011년은 김용하 등(2011)의 분석 시점이기도 하며, 또한 분석자료의 기준시점을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직전의 복지 수준과 위기를 지난 이후의 복지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1절 OECD 국가별 지표 간 균형 비교

1. 호주

호주는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13위, 종합 평균은 0.593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4위), 재정지속도(5위)는 양호한 편이지만 복지수요도는 23위로 평균보다 복지수요가 많은 편이었다. 그렇지만 복지충족도(21위)는 평균에 못 미쳤다. 수요와 충족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도(11위)는 평균 이상이었다. 국민행복도의 하위 지표 중에서는 출생 시 기대수명, 삶의 만족도, 국가투명도가 특히 높은 편이었다.

[그림 4-1] 호주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9위, 종합 평균은 0.632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13위)는 평균보다 약간 좋고, 재정지속도(28위)는 나쁜 편이었지만, 복지수요도(9위)와 복지충족도(10위)는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 양호하였다. 국민행복도는 18위로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이었다. 재정지속도가 낮은 이유는 국민부담률이 41.8%로 높은 편이었기 때문이며, 복지수요도에서 양호한 성적을 보인 이유는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경제고통지수가 낮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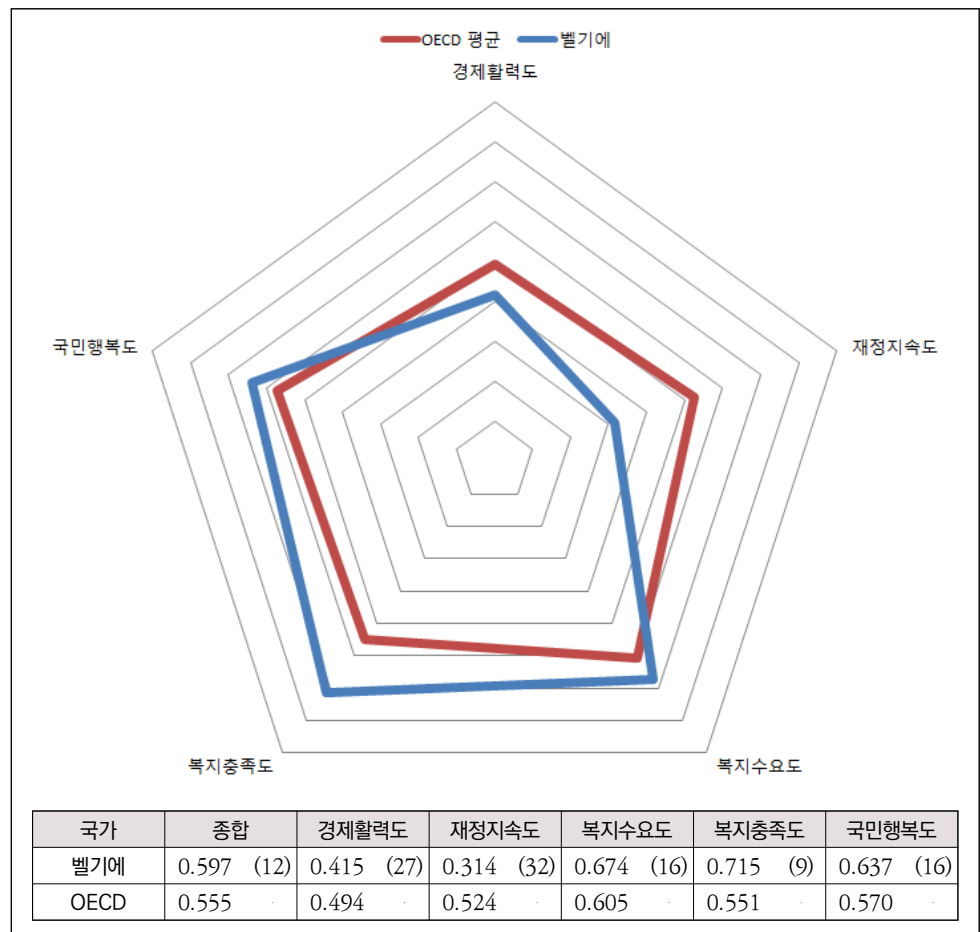
[그림 4-2] 오스트리아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3. 벨기에

벨기에는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12위, 종합 평균은 0.597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27위), 재정지속도(32위)는 나쁜 편이었다. 그렇지만 복지수요도가 16위로 양호한 편이었고, 복지충족도(9위)는 평균 이상이었다. 국민행복도는 16위로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이었다. 재정지속도가 낮은 이유는 국민부담률이 43.7%로 높은 편이었기 때문이며, 복지충족도에서 양호한 성적을 보인 이유는 실업급여 소득대체율과 공공사회지출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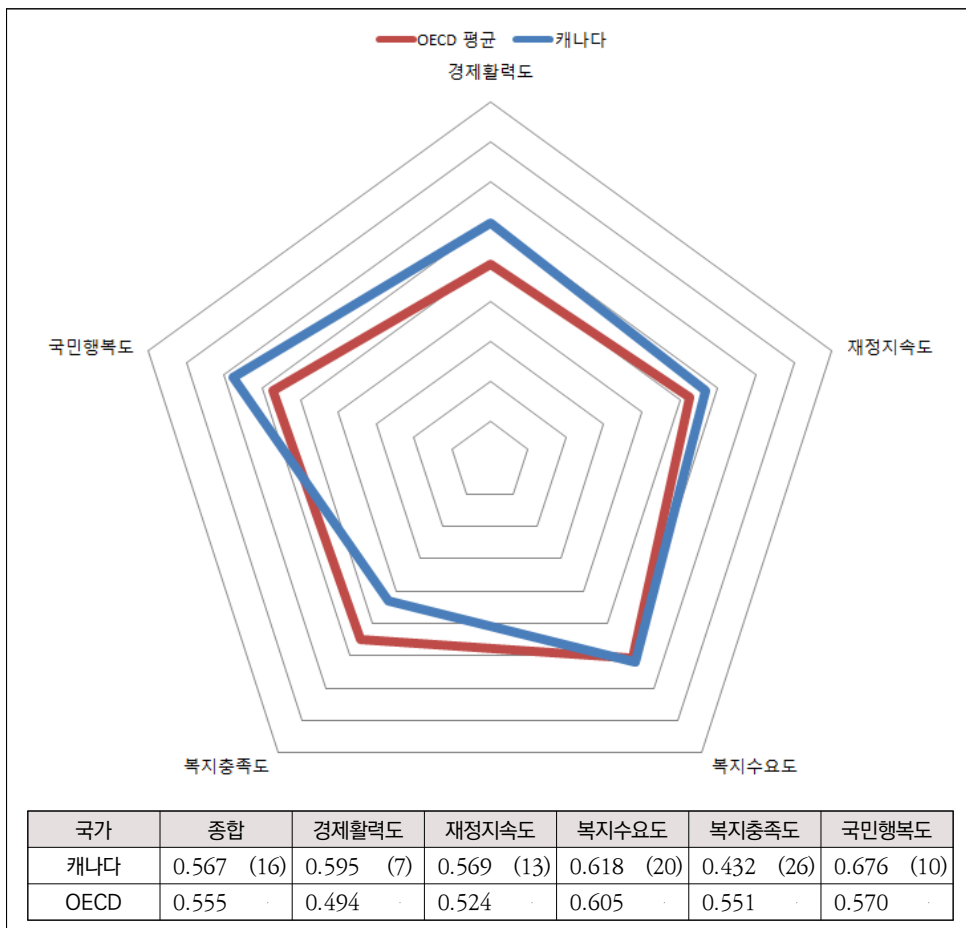
[그림 4-3] 벨기에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4. 캐나다

캐나다는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16위, 종합 평균은 0.567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7위), 재정지속도(13위)는 좋은 편이었고, 복지수요도(20위)는 평균 수준이었다. 복지충족도(26위)는 평균보다 낮은 편이었지만, 국민행복도는 10위로 평균보다 높았다. 복지충족도가 낮은 것은 영유아 1인당 보육공공사회 지출액, 인구1인당 장애인연금 지출액이 적었기 때문이다. 국민행복도 지표에서는 자살자 수가 적고, 삶의 만족도가 높고, 국가투명도가 높은 특징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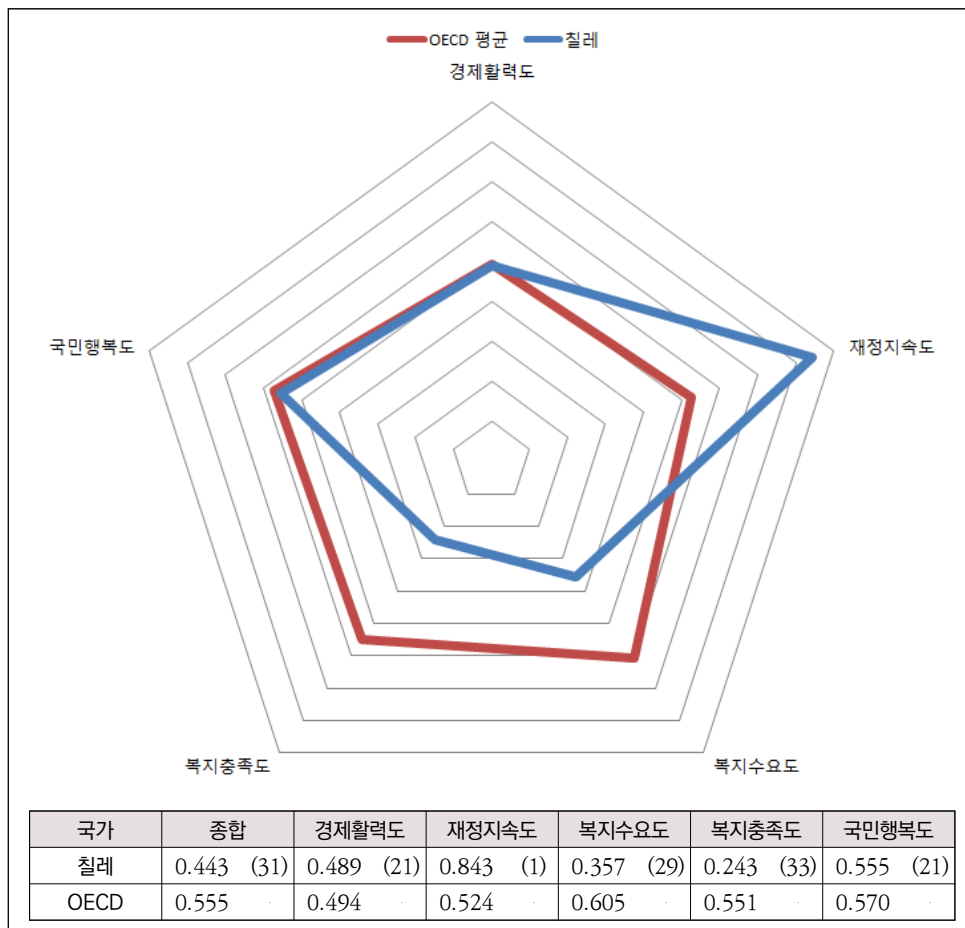
[그림 4-4] 캐나다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5. 칠레

칠레는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31위, 종합 평균은 0.443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21위)는 평균 수준이지만, 재정지속도(1위)는 가장 좋았다. 복지수요(29위)와 복지충족(33위)을 함께 고려하면 매우 낮은 복지 수준이지만, 향후 복지 수준의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이다. 복지수요 중에서는 특히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복지충족 중에서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고, 공공사회복지출액이 적은 특징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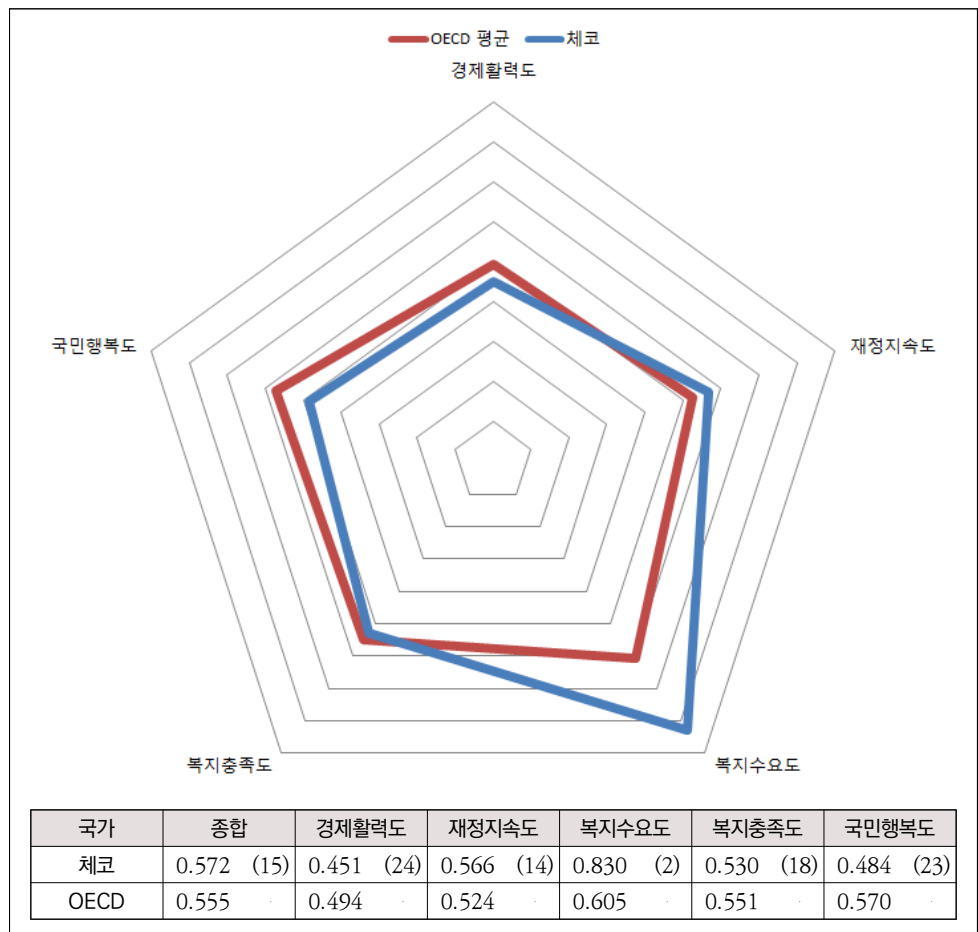
[그림 4-5] 칠레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6. 체코

체코는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15위, 종합 평균은 0.572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24위)와 재정지속도(14위)는 평균 언저리에 있었지만, 복지수요도는 2위로 매우 좋은 편이었다. 그렇지만 복지충족도(18위)는 평균 수준이었으며, 국민행복도는 23위로 평균보다 낮았다. 복지수요도에서 양호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경제고통지수 측면에서 양호하였기 때문이다. 국민행복도가 낮은 것은 합계 출산율과 국가투명도가 낮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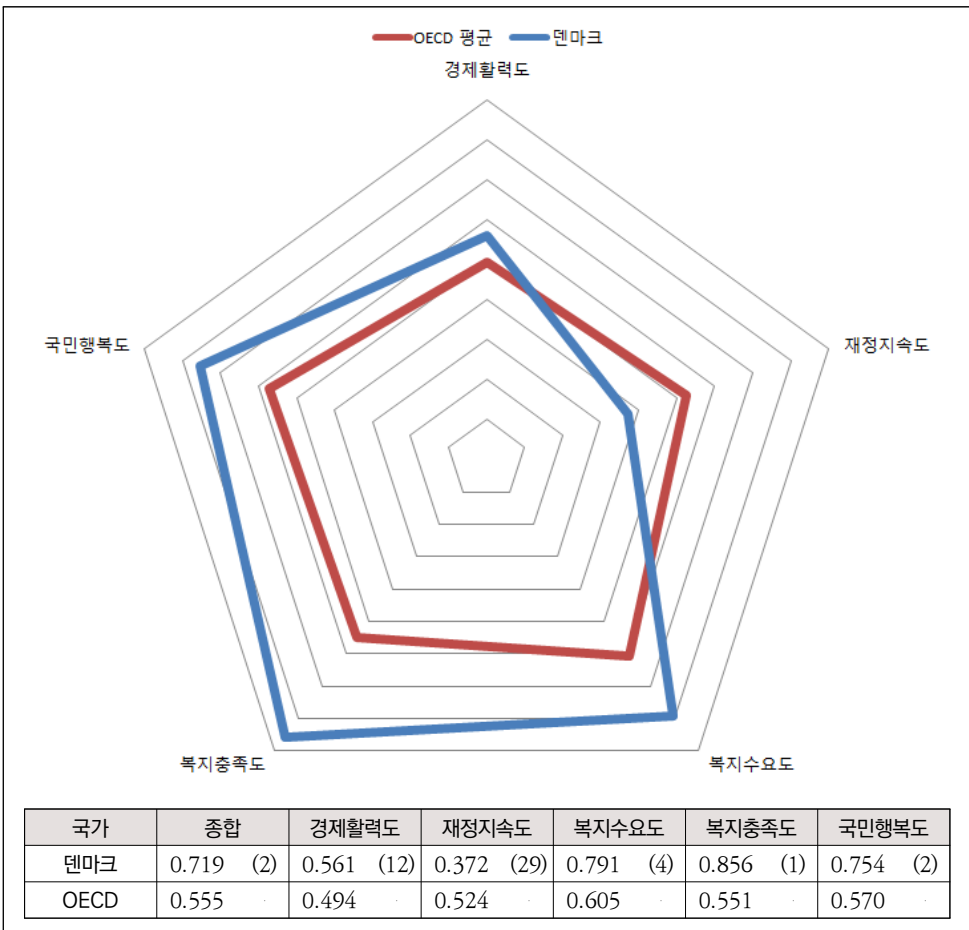
[그림 4-6] 체코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7. 덴마크

덴마크는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2위, 종합 평균은 0.719점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속도(29위)는 낮은 편이었지만, 경제활력도(12위), 복지수요도(4위), 복지충족도(1위), 국민행복도(2위) 모두 골고루 좋은 편이었다. 여러 지표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였지만, 경제활력도 지표 중에서 실질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증가율, 1인당 GDP는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었고, 재정지속도의 국민부담률(47.1%)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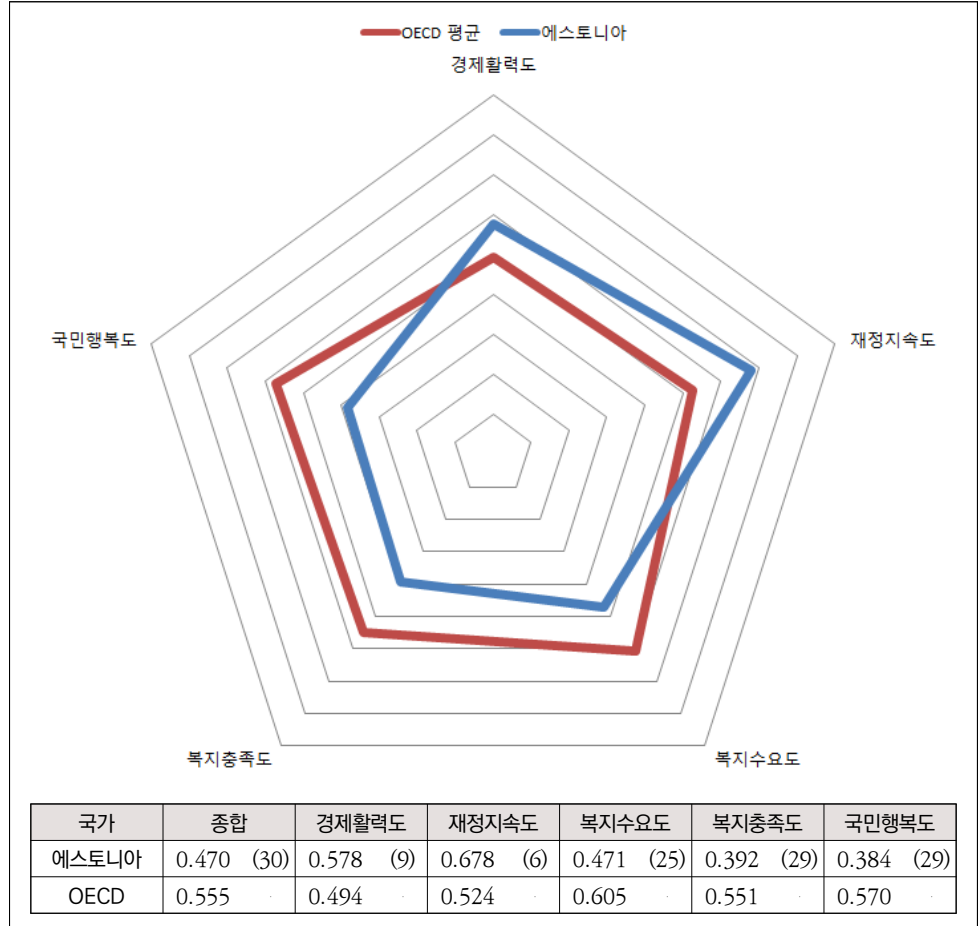
[그림 4-7] 덴마크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8.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는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30위, 종합 평균은 0.470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9위)와 재정지속도(6위)는 평균보다 양호한 편으로,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반대로 복지수요도(25위)와 복지충족도(29위)는 낮은 편이었고, 국민행복도도 29위로 낮은 편이었다. 국민행복도 지표 중에서 합계출산율, 출생 시 기대수명, 삶의 만족도가 특히 낮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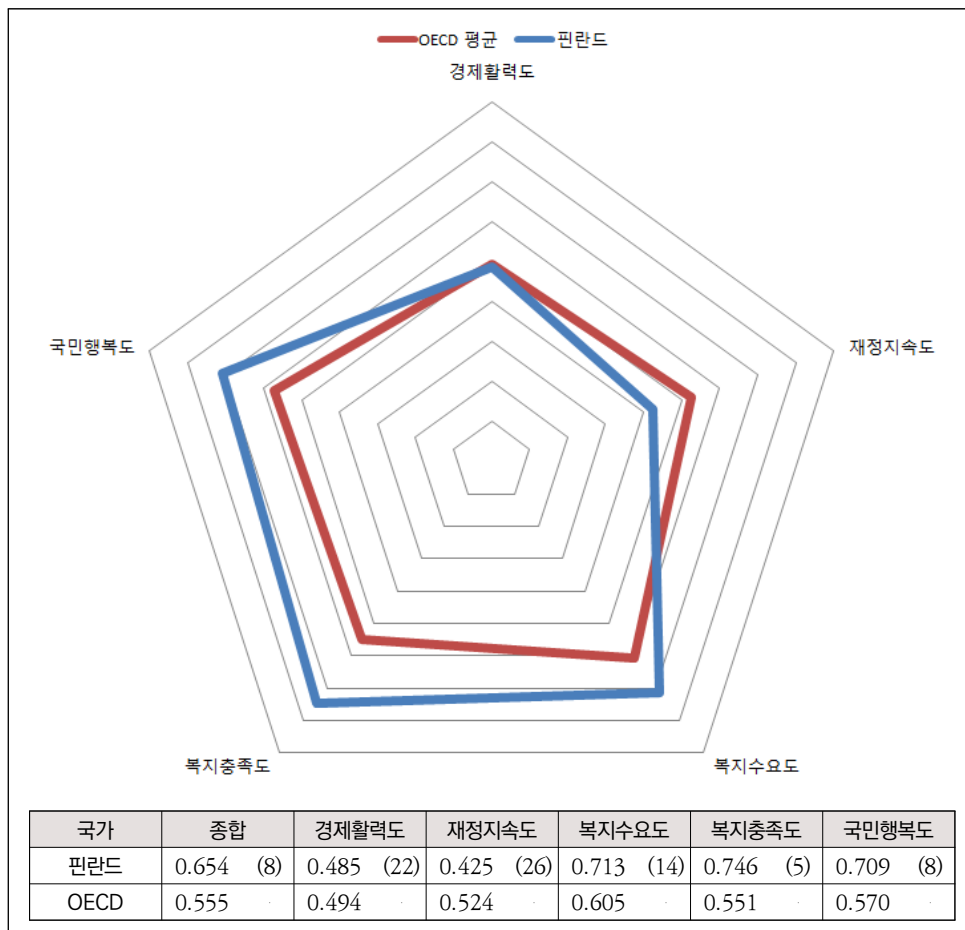
[그림 4-8] 에스토니아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9. 핀란드

핀란드는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8위, 종합 평균은 0.654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22위), 재정지속도(26위)는 각각 평균 언저리에 있거나 낮은 편이었다. 그렇지만 복지수요도(14위)는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었고, 복지충족도(5위)도 높은 편이었다. 국민행복도는 0.709점으로 8위로 나타났다. 다른 복지국가와 마찬가지로 높은 국민부담률(42.6%)이 핀란드의 재정지속도 순위를 낮추었으며, 높은 공공사회지출 비율(31.04%)은 복지충족도 순위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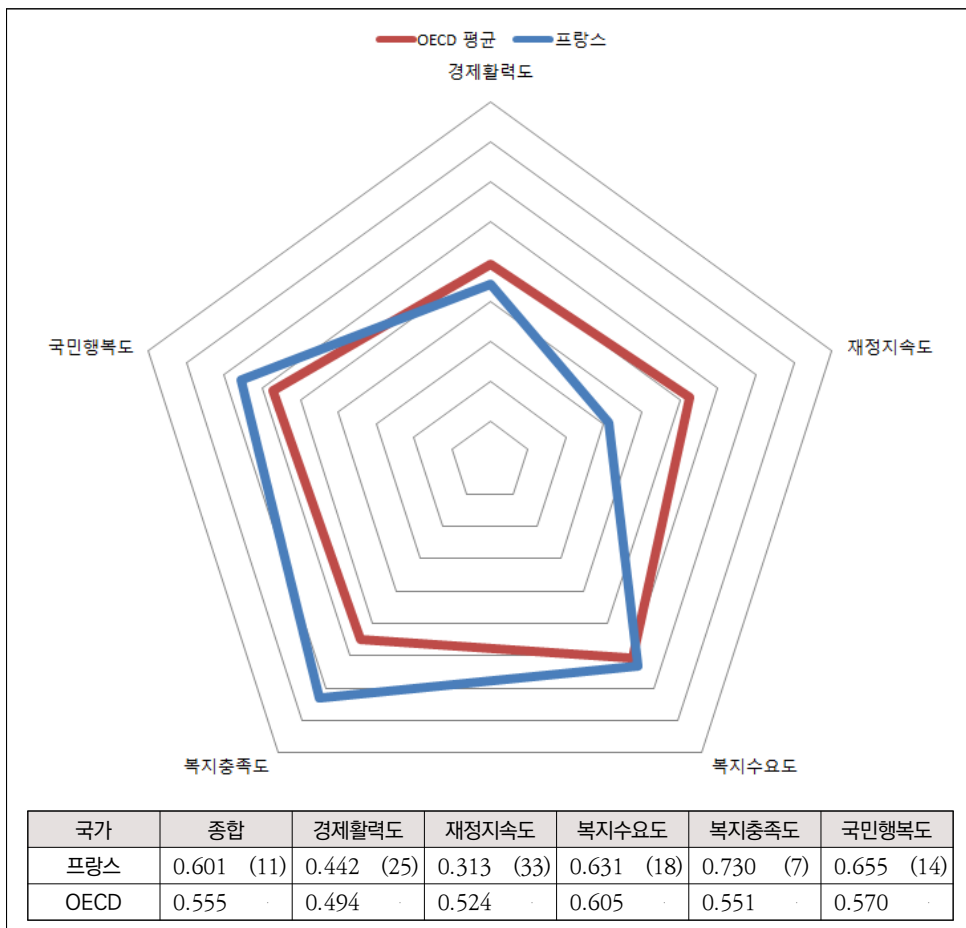
[그림 4-9] 핀란드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10. 프랑스

프랑스는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11위, 종합 평균은 0.601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25위), 재정지속도(33위)는 나쁜 편이었지만, 복지수요도(18위)는 OECD 평균보다 약간 양호한 편이었고, 복지충족도(7위)는 평균 이상이였다. 국민행복도는 14위로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이었다. 재정지속도가 낮은 이유는 국민부담률이 43.8%로 높은 편이었기 때문이며, 복지충족도에서 양호한 성적을 보인 이유는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이 높고, 공공사회지출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 4-10] 프랑스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11. 독일

독일은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10위, 종합 평균은 0.608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6위), 복지수요도(15위)는 양호한 편이었고, 재정지속도(17위), 복지충족도(16위)는 평균 근처였다. 국민행복도는 12위로 평균보다 높은 편이었다. 독일의 경제활력도가 높은 것은 고용률, 실질경제성장률이 높기 때문이며, 복지수요도가 양호한 것은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경제고통지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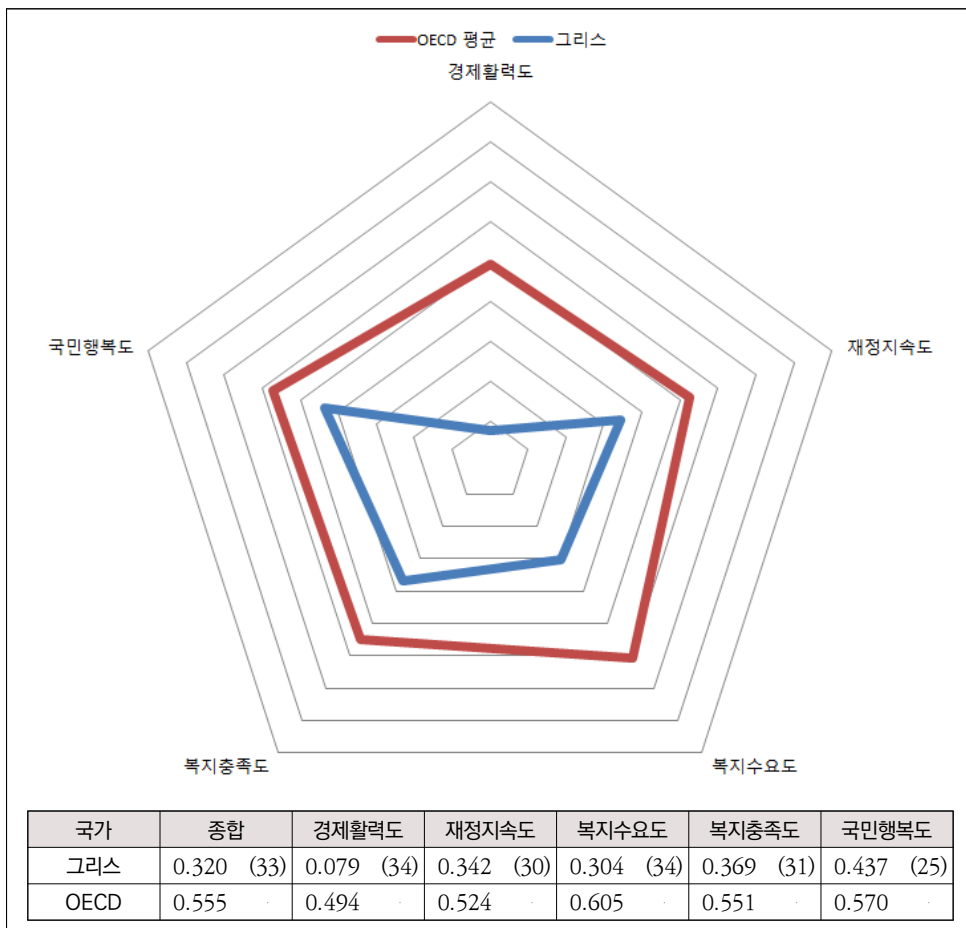
[그림 4-11] 독일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12. 그리스

그리스는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33위, 종합 평균은 0.320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34위), 재정지속도(30위), 복지수요도(34위)는 매우 나쁜 편이었다. 복지충족도(31위)도 낮은 편이었고, 국민행복도 역시 25위로 낮은 편이었다. 복지수요도가 낮은 이유는 경제고통지수가 26.6%로 가장 높았고, 상대빈곤율 역시 15.1%로 높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복지충족도가 낮은 이유는 경제위기로 인해서 건강보험 가입률이 86%로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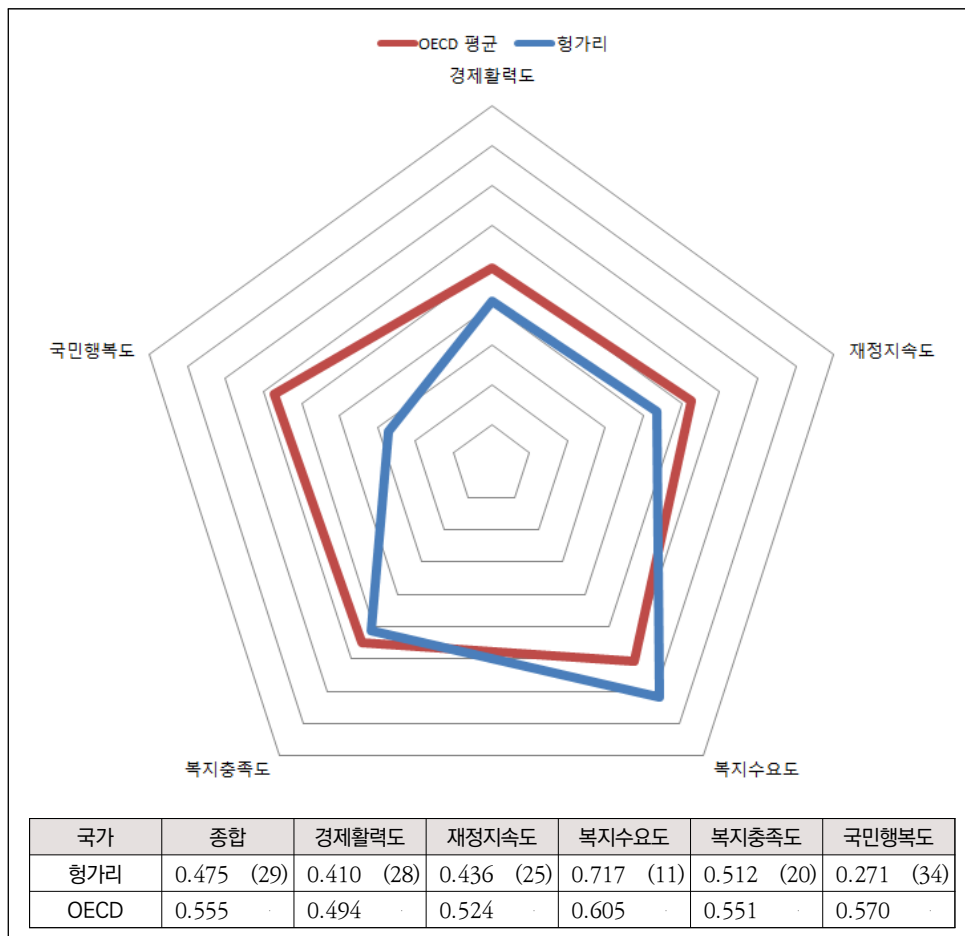
[그림 4-12] 그리스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13. 헝가리

헝가리는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29위, 종합 평균은 0.475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28위)와 재정지속도(25위)는 평균보다 낮은 편이었으며, 복지수요도(11위)는 평균보다 양호한 편이었다. 복지충족도(20위)는 평균 수준이었으며, 국민행복도는 34위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 국민행복도가 특히 낮은 것은 합계출산율, 출생 시 기대수명 및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며, 국가투명도 역시 낮은 편이었다.

[그림 4-13] 헝가리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14.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5위, 종합 평균은 0.682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는 10위로 양호한 편이었지만, 재정지속도(20위)는 평균보다 약간 낮았다. 복지수요도는 0.852점(1위)으로 가장 높고, 복지충족도는 11위로 평균 이상이였다. 국민행복도는 9위로 양호하였다. 복지수요도 지표를 살펴보면, 지니계수가 0.244, 상대빈곤율이 4.6%로 가장 낮았고, 경제고통지수도 7.2%로 낮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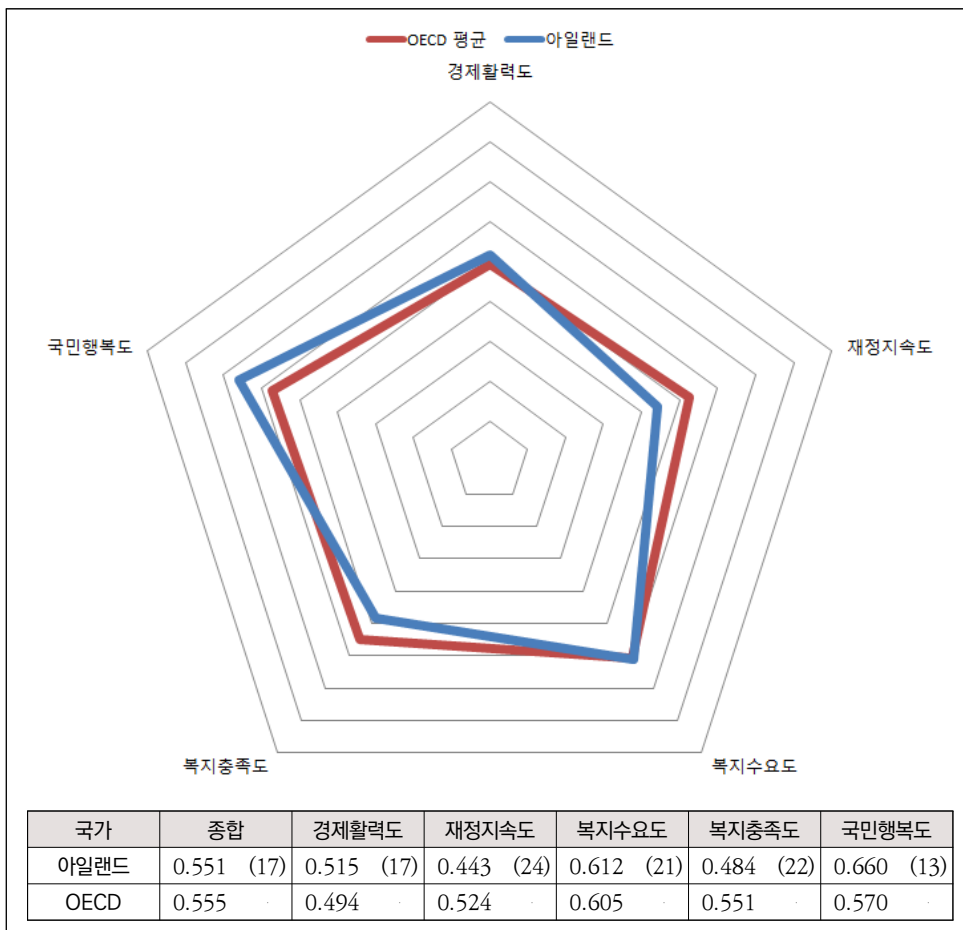
[그림 4-14] 아이슬란드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15.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17위, 종합 평균은 0.551점으로 평균 수준을 나타냈다. 경제활력도(17위)는 평균보다 약간 높았고, 재정지속도(24위)는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였다. 복지수요도(21위)는 평균 수준이었고, 복지충족도(22위)는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였다. 국민행복도는 13위로 평균보다 양호한 편이었다. 국민행복도 지표 중에서는 자살자 수, 출생 시 기대수명, 여가시간, 국가투명도가 양호한 편에 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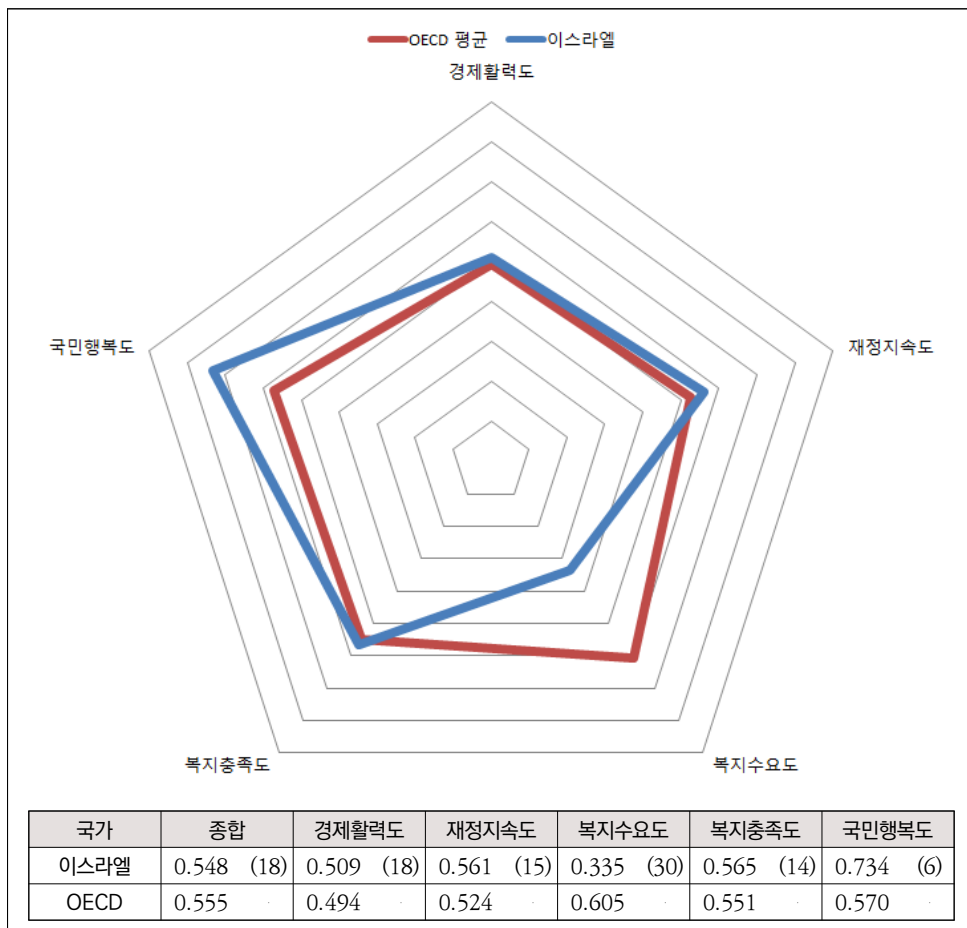
[그림 4-15] 아일랜드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16.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18위, 종합 평균은 0.548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18위), 재정지속도(15위)는 평균 수준이었고, 복지수요도는 30위이다. 복지충족도(14위)는 평균 근처였지만, 국민행복도는 6위로 평균보다 높았다. 복지수요도가 특히 낮은 이유는 총부양비가 63.3%, 상대빈곤율이 18.6%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기 때문이다. 총부양비가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출산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며, 그 결과 국민행복도가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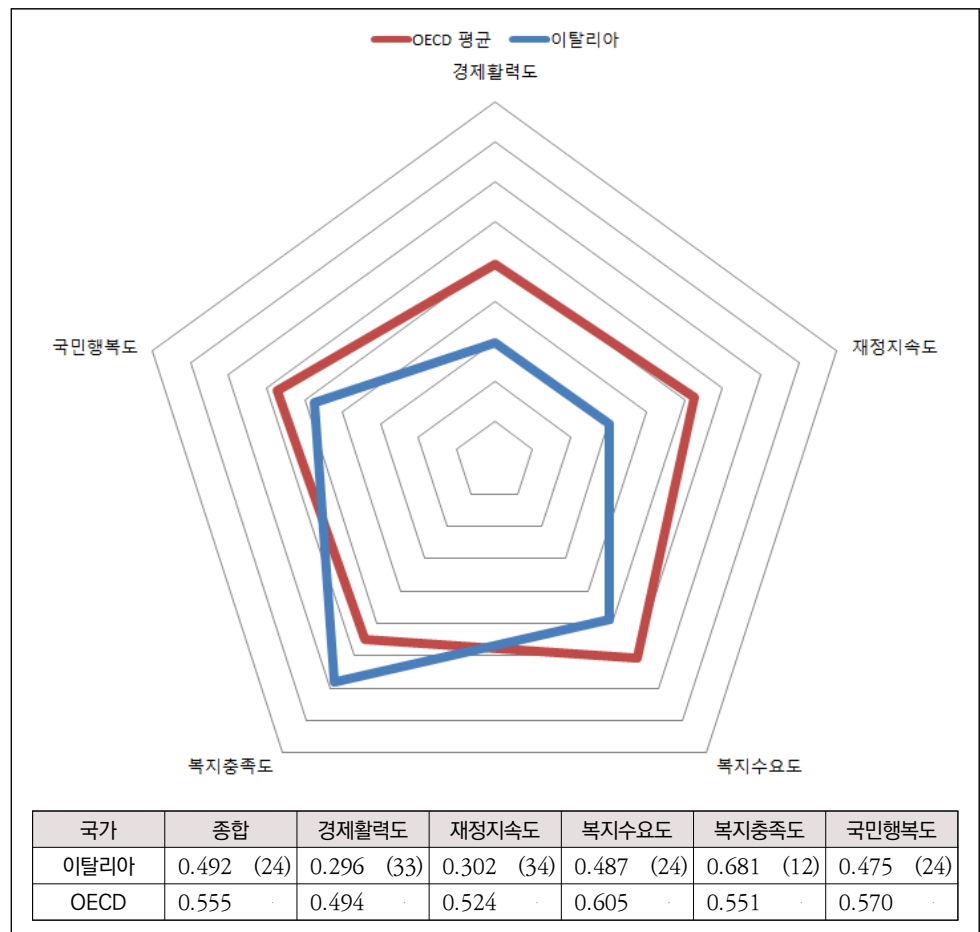
[그림 4-16] 이스라엘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17.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24위, 종합 평균은 0.492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33위)와 재정지속도(34위)는 OECD 국가 중 나쁜 그룹에 속한다. 복지수요도는 24위로 평균 이하인 반면, 복지충족도(12위)는 평균 이상이었다. 국민행복도는 24위로 평균보다 낮았다. 복지충족도가 높은 이유는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및 공공사회지출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행복도 지표에서 합계출산율과 국가투명도가 특히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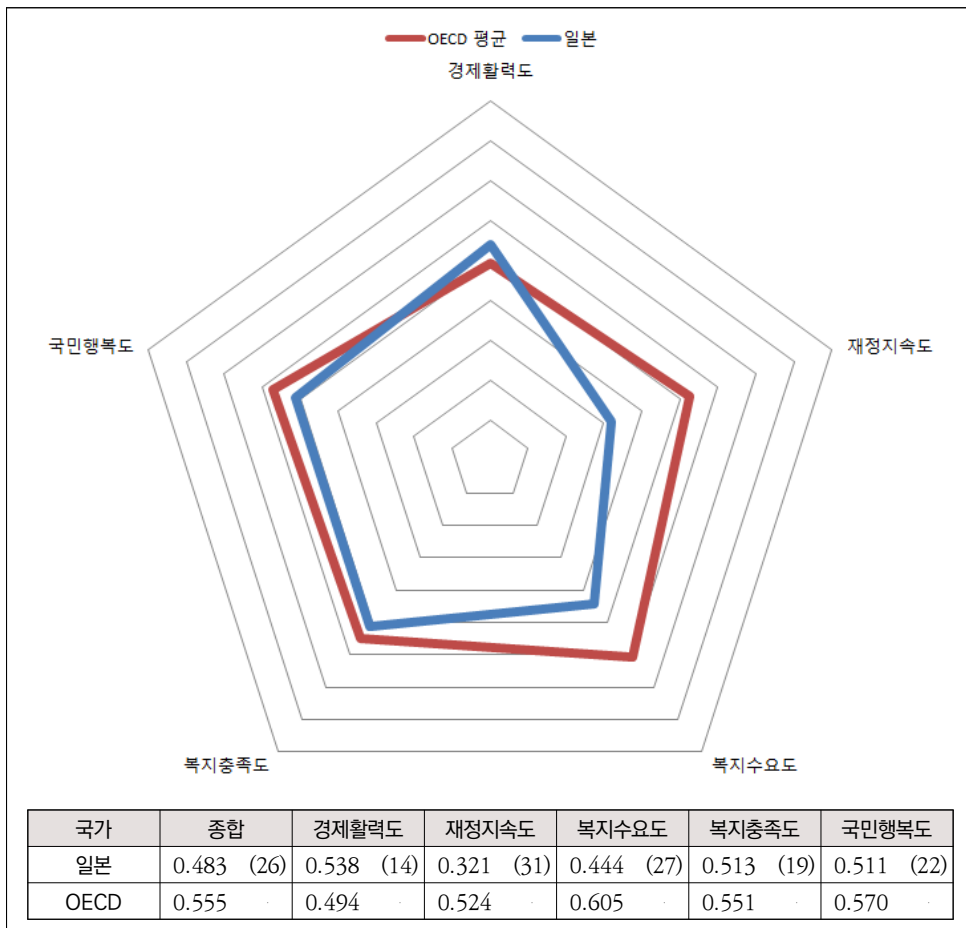
[그림 4-17] 이탈리아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18. 일본

일본은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26위, 종합 평균은 0.483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14위)는 평균보다 약간 좋고, 재정지속도(31위)는 상당히 나쁜 그룹에 속한다. 복지수요도(27위)와 복지충족도(19위) 역시 평균 이하였다. 국민행복도는 22위로 평균보다 약간 낮은 편이었다. 재정지속도가 낮은 이유는 국가채무 비율이 231.7%로 높기 때문이며, 복지수요도가 낮은 이유는 총부양비가 61.1%로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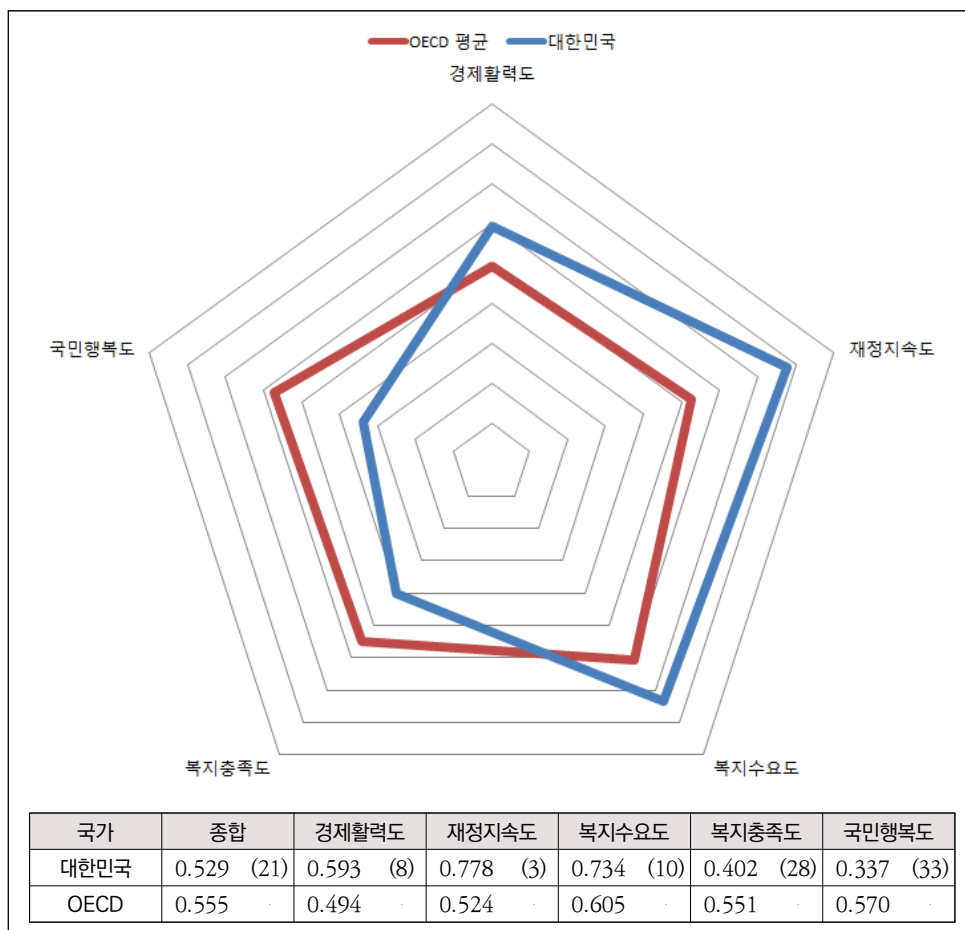
[그림 4-18] 일본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19.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21위, 종합 평균은 0.529점으로 나타나, 평균에 약간 못 미쳤다. 경제활력도(8위)는 양호한 편이며, 재정지속도(3위)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한다. 복지수요도(10위)는 아직까지 양호한 편이지만, 복지충족도(28위)는 낮은 편에 속했다. 국민행복도는 33위로 매우 낮았다. 복지충족도가 낮은 것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장애연금 지출액, 공공사회지출이 낮기 때문이며, 국민행복도가 낮은 것은 자살률이 높고, 출산율이 낮기 때문이다.

[그림 4-19]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20.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는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3위, 종합 평균은 0.707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2위)와 재정지속도(12위)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며, 복지수요도(3위)와 복지충족도(3위)도 매우 양호한 편이었다. 다만, 국민행복도는 17위로 평균 수준이었다. 복지수요도가 양호한 것은 총부양비,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경제고통지수에서 골고루 양호한 결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충족도가 높은 것은 영유아보육지출액이 높고,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이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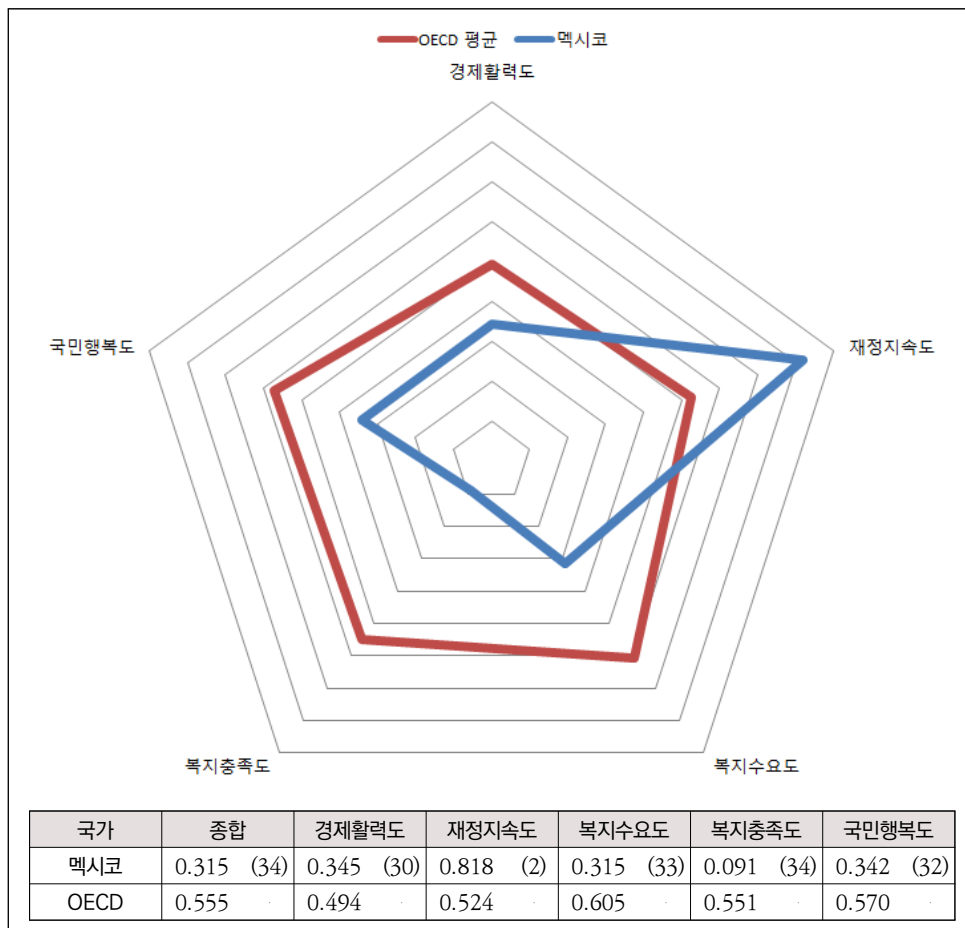
[그림 4-20] 룩셈부르크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21. 멕시코

멕시코는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34위, 종합 평균은 0.315점으로 비교대상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복지 수준을 보였다. 경제활력도(30위), 복지수요도(33위), 복지충족도(34위), 국민행복도(32위)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고, 재정지속도만 2위로 양호하였다. 재정지속도가 높은 것은 국가채무 비율이 낮고, 국민부담률이 19.3%로 가장 낮기 때문이다. 복지충족도가 낮은 것은 실업급여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각종 사회지출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그림 4-21] 멕시코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22.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4위, 종합 평균은 0.694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11위), 복지수요도(12위)와 복지충족도(2위)에서 양호한 편이었고, 국민행복도 역시 3위로 매우 양호하였다. 그런데 재정지속도(18위)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높은 복지충족도는 공적연금 및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이 높기 때문이며, 높은 국민행복도는 출생 시 기대수명, 삶의 만족도, 여가시간, 국가투명도가 양호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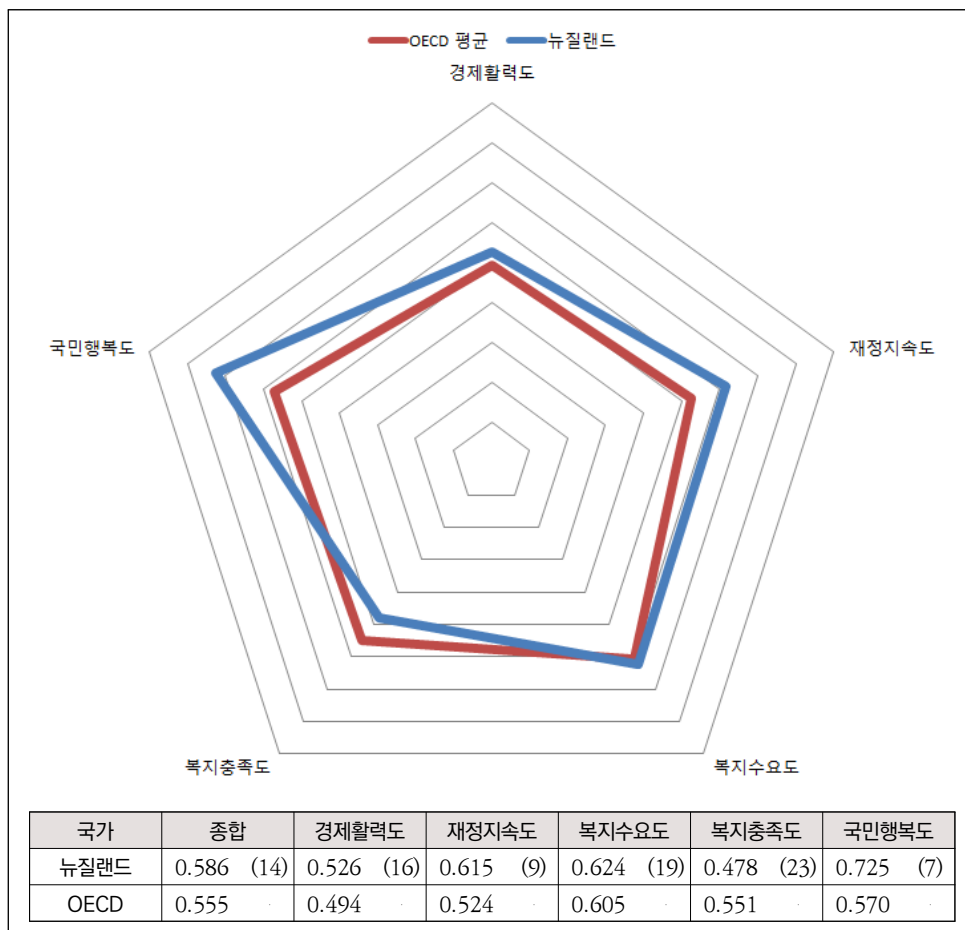
[그림 4-22] 네덜란드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23.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14위, 종합 평균은 0.586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16위)와 재정지속도(9위)는 평균보다 양호한 편이었으며, 복지수요도(19위)는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복지충족도가 23위로 평균보다 낮은 반면, 국민행복도는 7위로 평균보다 높았다. 국민행복도의 하위 지표 중에서는 특히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여가시간과 국가투명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그림 4-23] 뉴질랜드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24.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1위, 종합 평균은 0.729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3위), 재정지속도(8위), 복지수요도(5위), 복지충족도(6위) 모두 양호하였으며, 국민행복도는 0.770점으로 1위였다. 노르웨이의 국민행복도가 높은 것은 합계출산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출생 시 기대수명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7.6점으로 가장 높으며, 여가시간과 국가투명도가 양호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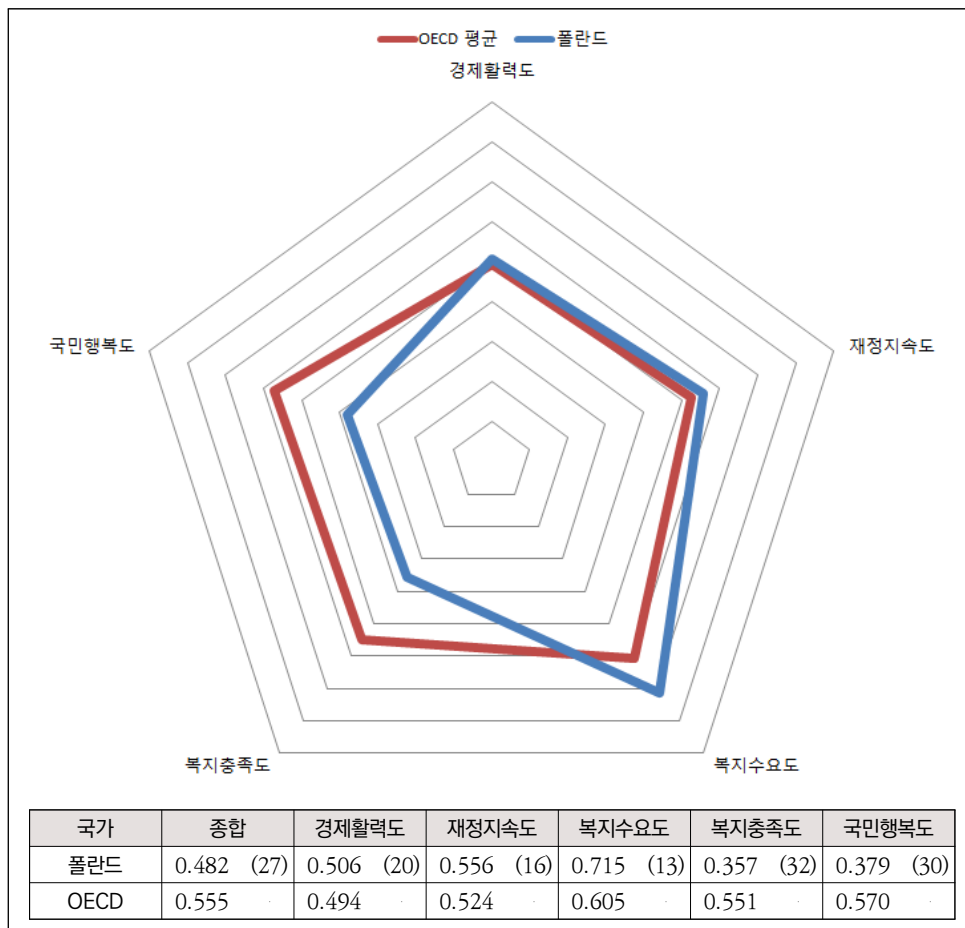
[그림 4-24] 노르웨이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25. 폴란드

폴란드는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27위, 종합 평균은 0.482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20위)와 재정지속도(16위)는 평균 수준이었고, 복지수요도(13위)는 양호한 편이었다. 그러나 복지충족도(32위)와 국민행복도(30위)는 낮은 편이다. 폴란드의 복지충족도가 낮은 이유는 영유아 1인당 보육 공공사회지출액, 인구 1인당 장애인연금 지출액 등이 적기 때문이다. 국민행복도가 낮은 것은 출산율이 낮고, 출생 시 기대수명, 삶의 만족도가 평균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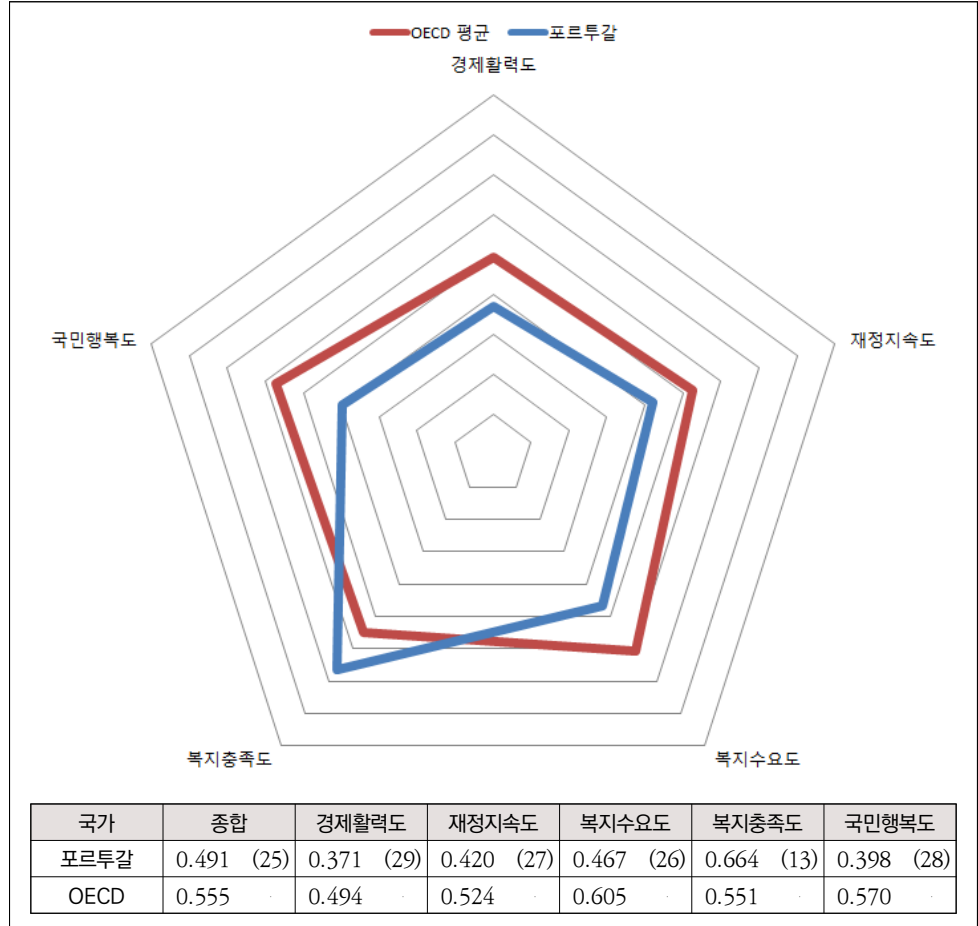
[그림 4-25] 폴란드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26.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25위, 종합 평균은 0.491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29위)와 재정지속도(27위)는 OECD 국가 중 낮은 그룹에 속한다. 복지수요도(26위)는 낮았고, 복지충족도(13위)는 평균 이상이었다. 국민행복도는 28위로 평균보다 낮았다. 낮은 국민행복도는 낮은 합계출산율과 5.8점으로 가장 낮은 삶의 만족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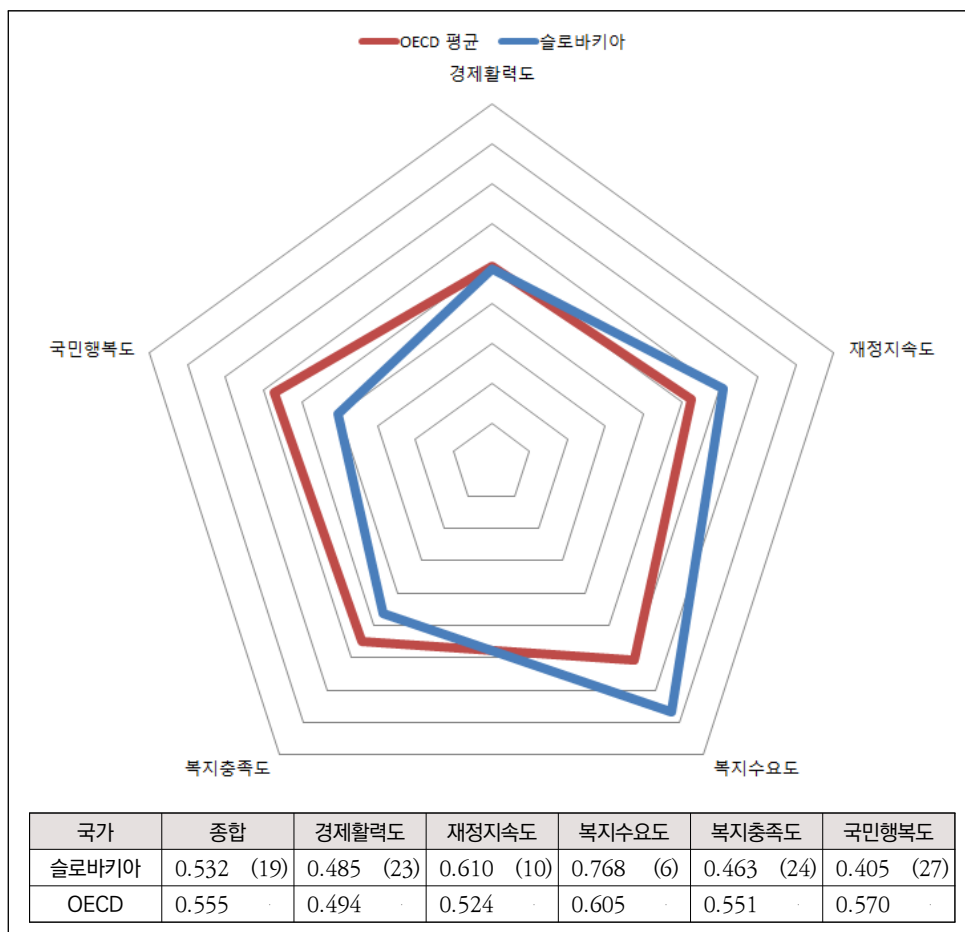
[그림 4-26] 포르투갈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27.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는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19위, 종합 평균은 0.532점으로 조사되었다. 경제활력도(23위)는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재정지속도(10위)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복지수요도(6위)도 양호한 편이었다. 그러나 복지충족도는 24위로 평균 이하였으며, 국민행복도도 27위로 평균 이하였다. 슬로바키아의 복지수요도가 양호한 것은 충부양비, 지니계수 등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행복도의 합계출산율은 낮은 편이었고, 국가투명도도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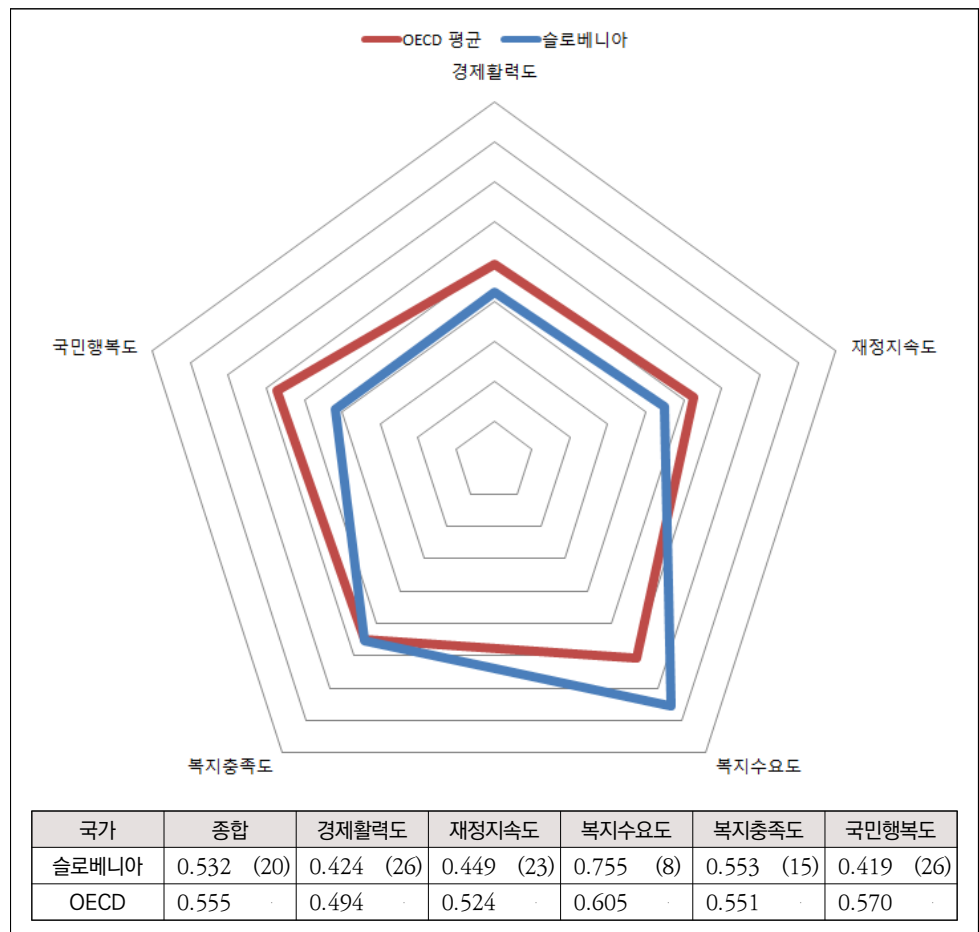
[그림 4-27] 슬로바키아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28.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는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20위, 종합 평균은 0.532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26위)와 재정지속도(23위)는 모두 평균보다 낮았으며, 복지수요도는 8위로 양호한 편이었다. 복지충족도(15위)는 평균 수준이었고, 국민행복도는 평균 이하였다. 양호한 복지수요도는 낮은 지니계수 때문이며, 낮은 국민행복도는 낮은 합계출산율과 낮은 삶의 만족도에 기인한다. 이러한 경향은 체제전환국의 대체적인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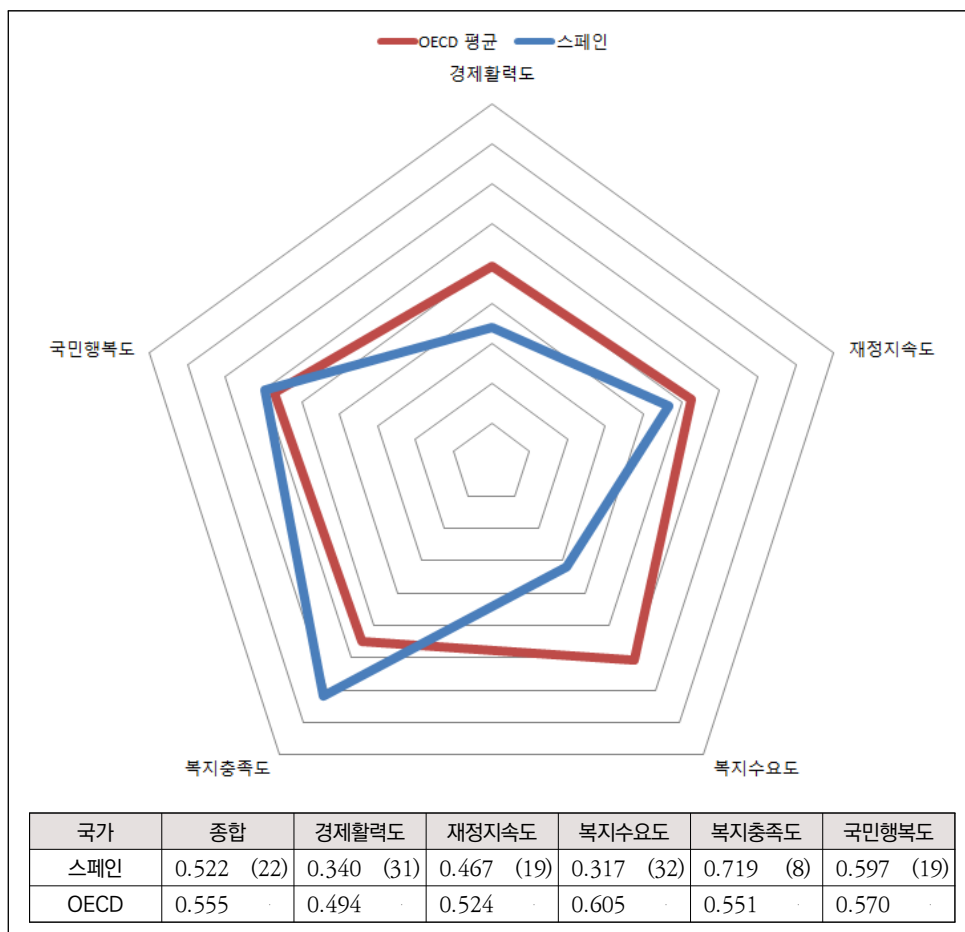
[그림 4-28] 슬로베니아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29. 스페인

스페인은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22위, 종합 평균은 0.522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31위), 재정지속도(19위)는 나쁜 편이었으며, 복지수요도는 32위로 복지수요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렇지만 복지충족도(8위)는 평균 이상이며, 국민행복도(19위)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이었다. 복지수요도에서는 상대빈곤율이 15.9%에 달하고, 경제고통지수 역시 24.4%로 높았다. 복지충족도에서는 연금과 실업급여의 소득 대체율은 높지만, 영유아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출액은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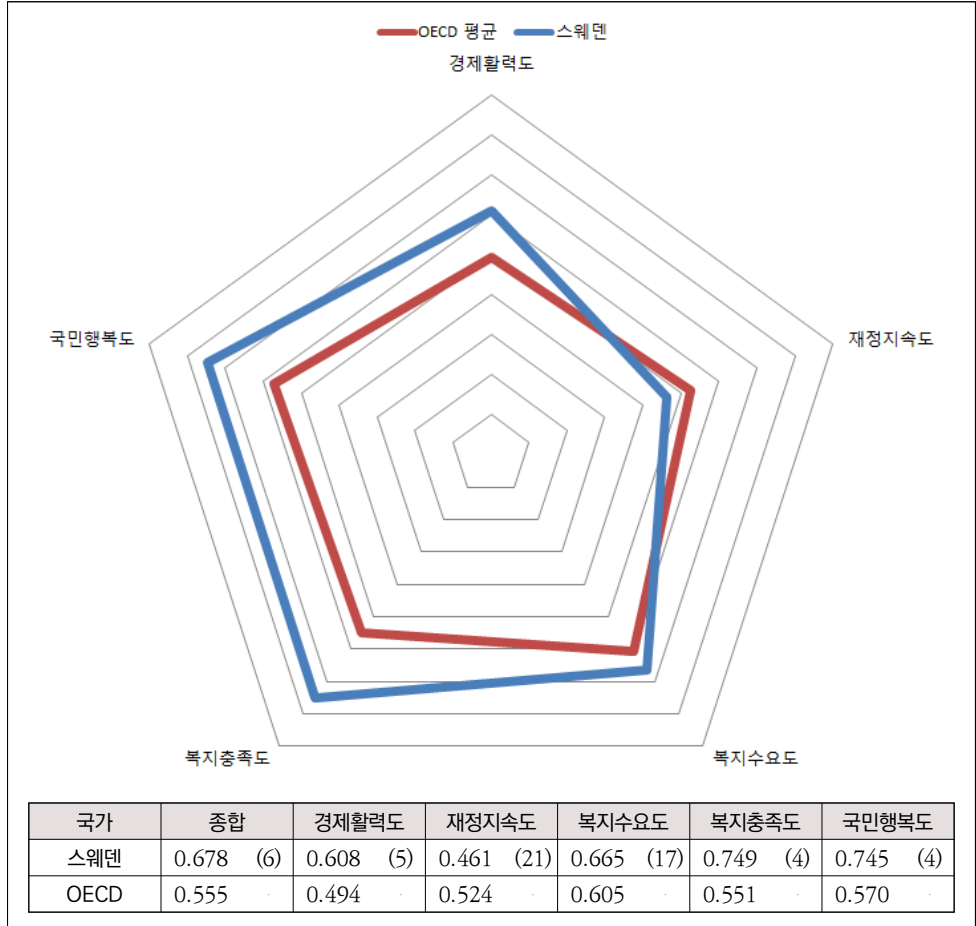
[그림 4-29] 스페인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30. 스웨덴

스웨덴은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6위, 종합 평균은 0.678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5위)는 양호한 편이었지만, 재정지속도(21위)는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복지수요도(17위)와 복지충족도(4위)는 양호한 편에 속했고, 국민행복도는 4위로 높은 편이었다. 재정지속도가 약간 낮은 것은 국민부담률이 42.8%로 높기 때문이며, 반대로 복지충족도가 높은 것은 특히 영유아 1인당 공공사회지출액이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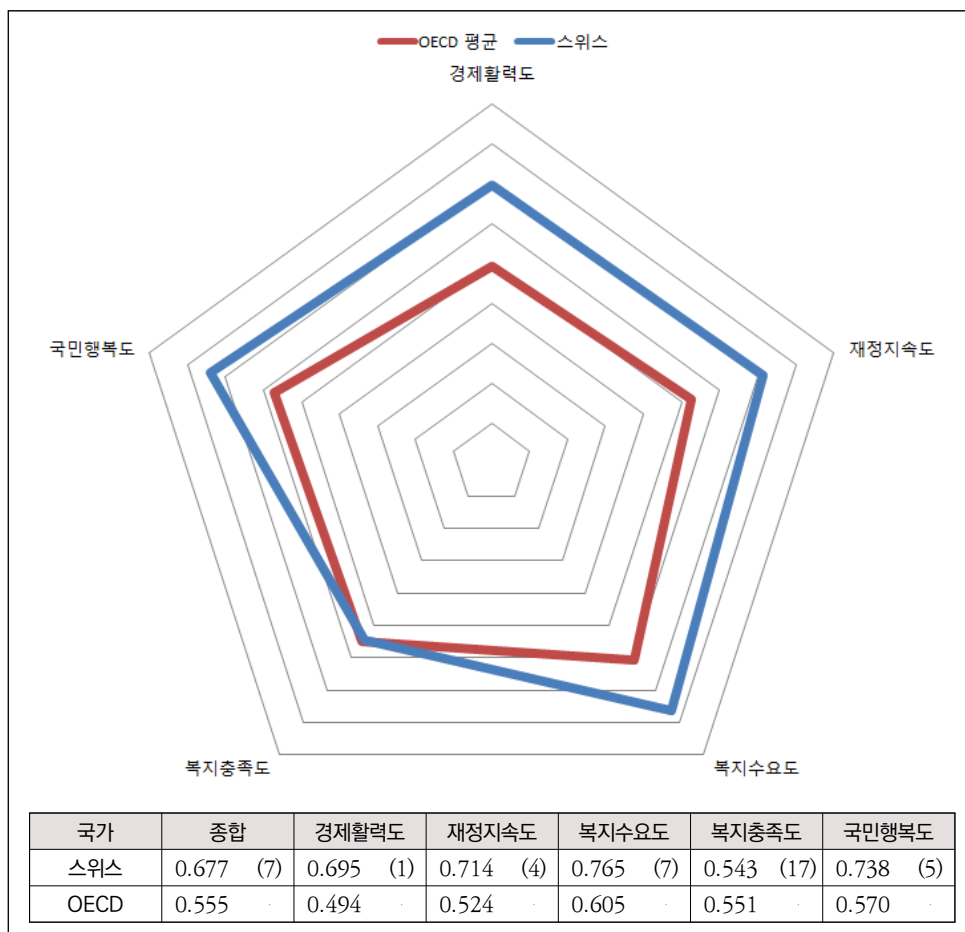
[그림 4-30] 스웨덴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31. 스위스

스위스는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7위, 종합 평균은 0.677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1위)는 가장 높았고, 재정지속도(4위)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복지수요도(7위), 복지충족도(17위)도 양호한 편이었다. 국민행복도는 0.738점으로 5위에 해당하였다. 복지충족도가 약간 낮은 것은 사회보험은 양호하지만,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지출액 및 공공사회지출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출생 시 기대수명, 삶의 만족도, 국가투명도 등 국민행복도 지표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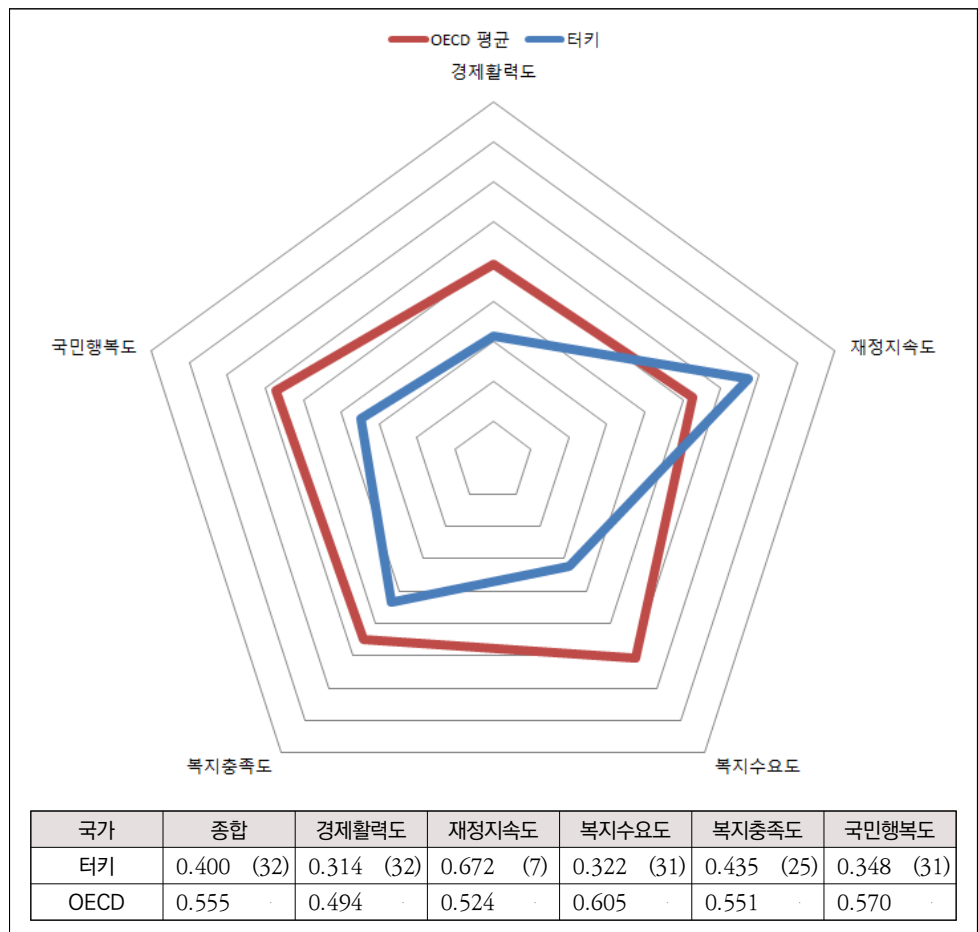
[그림 4-31] 스위스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32. 터키

터키는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32위, 종합 평균은 0.400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32위)는 낮지만, 재정지속도(7위)는 양호한 편이었다. 그렇지만 복지수요도(31위)와 복지충족도(25위)는 평균 이하였다. 특히, 국민행복도는 31위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재정의 확대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향후 복지 수준의 증가가 예상된다. 국민 행복도 지표 중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으며, 특히 1일 여가시간은 14.7시간으로 비교대상 국가 중 짧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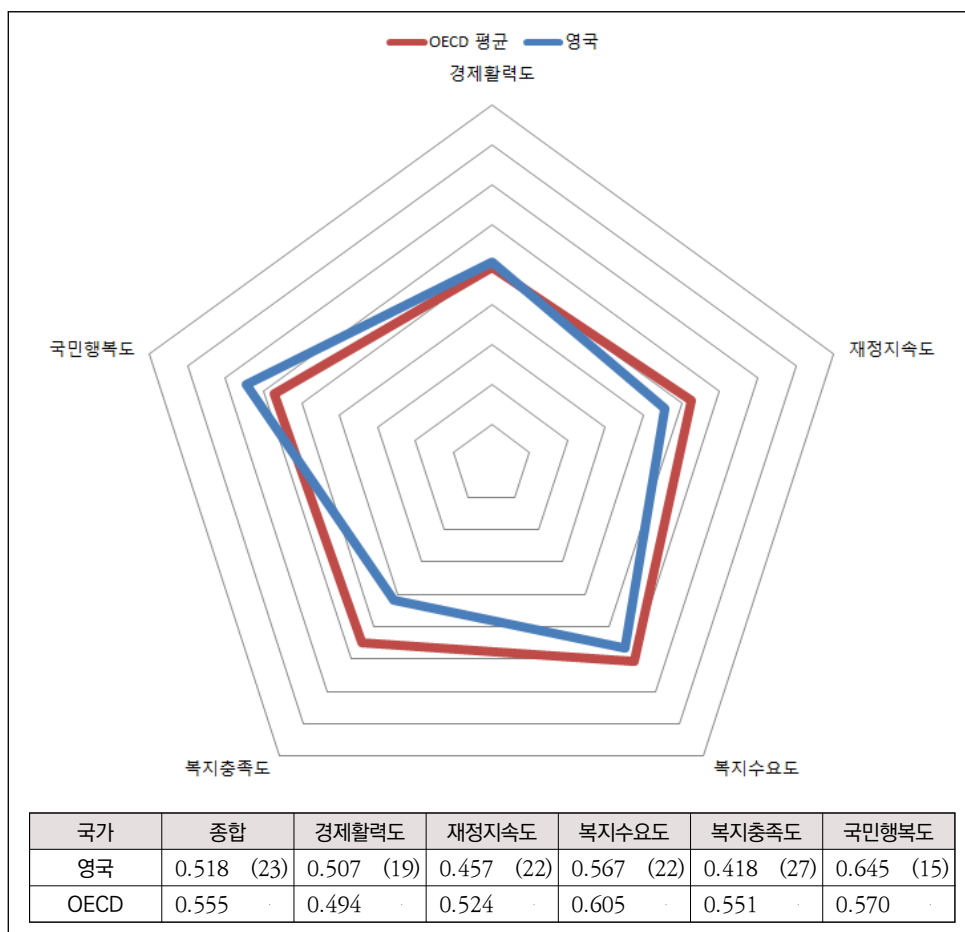
[그림 4-32] 터키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33. 영국

영국은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23위, 종합 평균은 0.518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19위)는 평균보다 약간 좋지만, 재정지속도(22위)는 평균에 약간 못 미쳤다. 복지수요도(22위)는 평균 수준이지만, 복지충족도(27위)는 낮은 편이었고, 국민행복도(15위)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이었다. 복지충족도가 낮은 이유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1.6%로 가장 낮았고, 실업급여 소득대체율도 19.8%로 낮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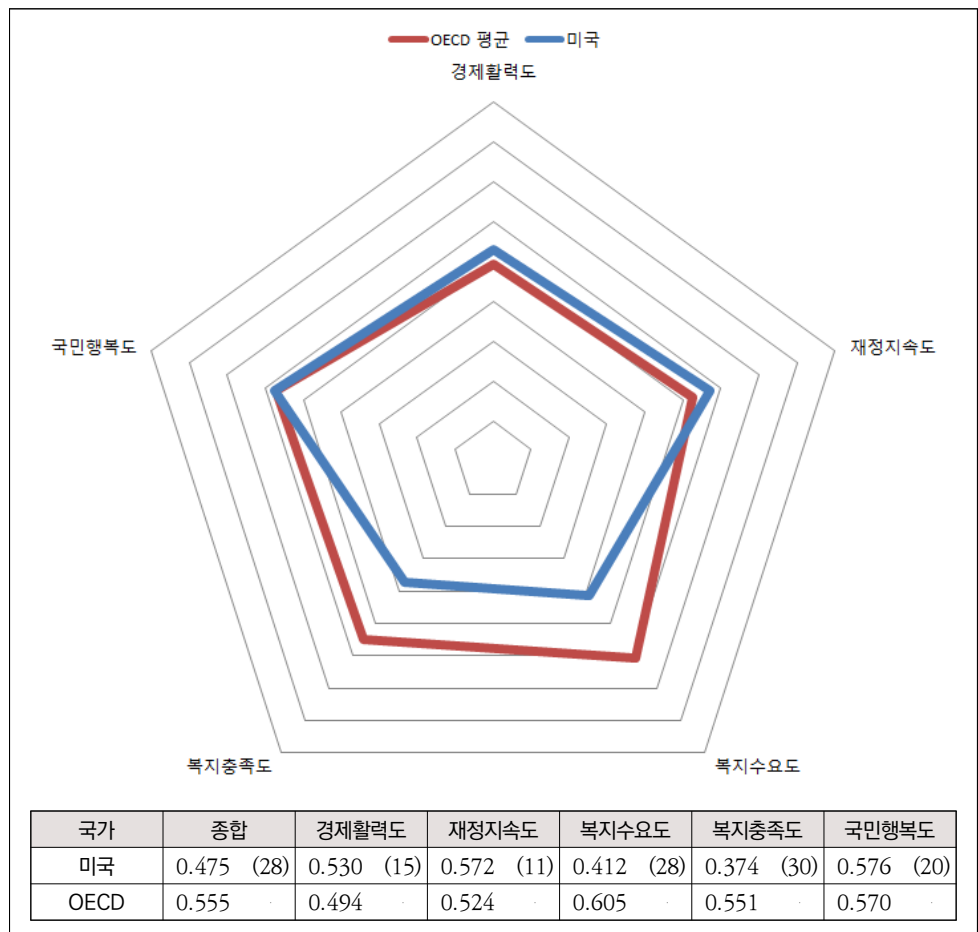
[그림 4-33] 영국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34. 미국

미국은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28위, 종합 평균은 0.475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15위), 재정지속도(11위)는 평균보다 약간 좋은 편이었다. 복지수요도(28위)와 복지충족도(30위)는 열악하였고, 국민행복도(20위)는 평균 수준이었다. 복지수요가 많은 이유는 0.394를 보인 지니계수, 17.5%의 상대빈곤율 등이 원인이며, 복지충족도가 낮은 이유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고, 건강보험 가입률이 낮으며, 보육 및 장애인연금 지출액이 적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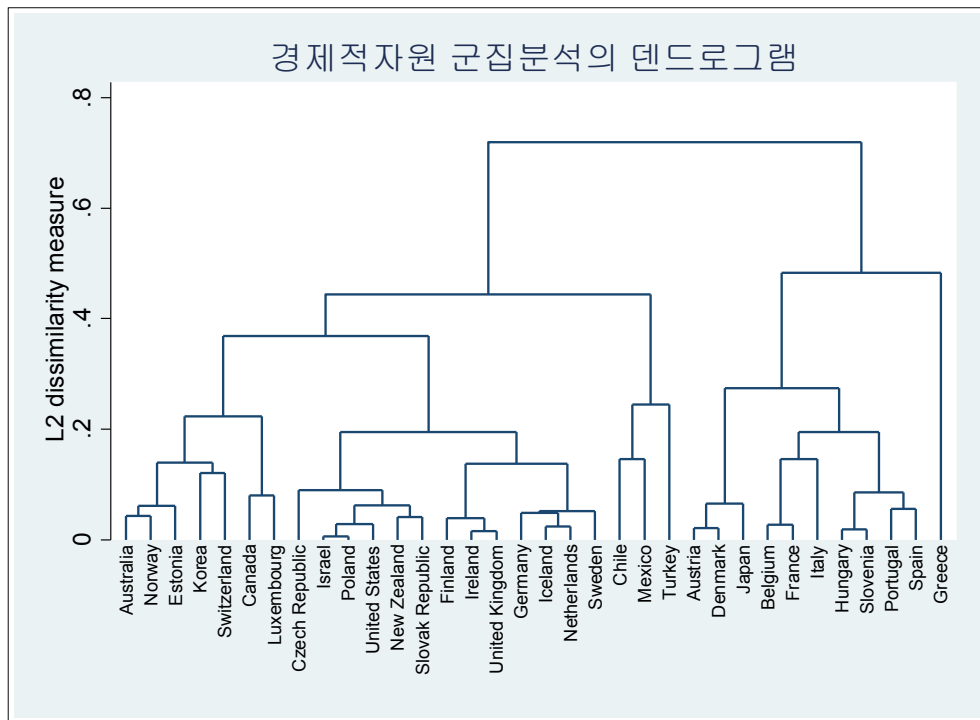
[그림 4-34] 미국의 복지 수준 종합 결과



제2절 복지 수준의 유형별 비교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복지 수준을 비교하면서, 동시에 한국이 어떤 형태의 복지 국가와 유사한 수준에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군집분석을 통해 복지국가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5개 영역의 측정치를 모두 투입하기에 앞서 경제활동지표와 재정지속지표의 2개 지표를 이용하여 먼저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경제적 자원’ 속성에 따른 분류라 명명하고자 한다.

[그림 4-35] 경제적 자원(경제활동, 재정지속)을 이용한 군집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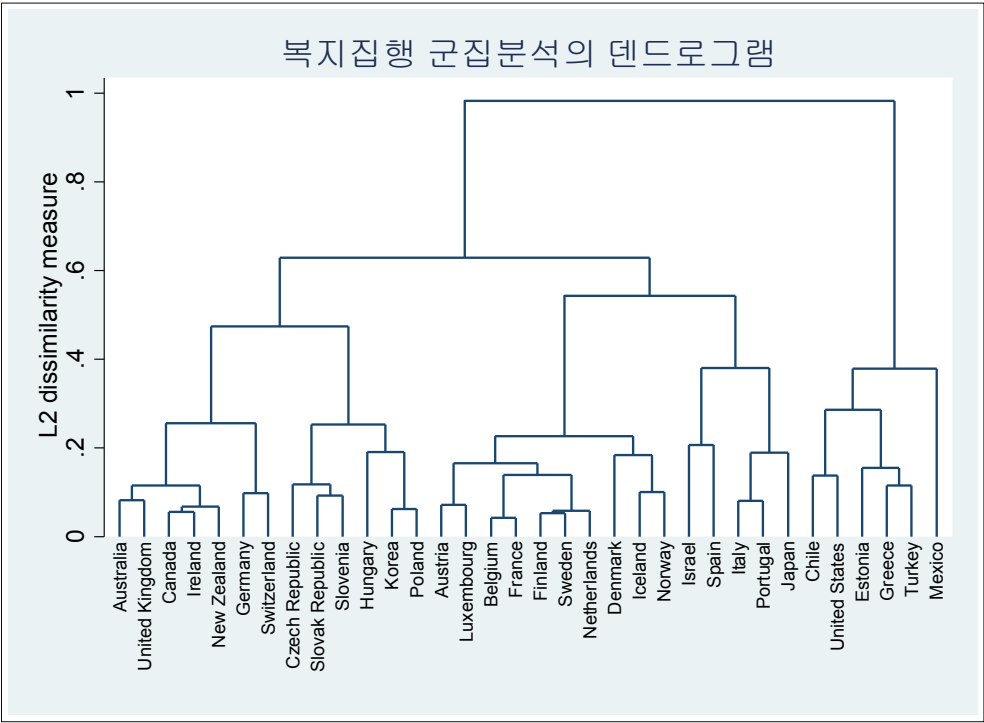
[그림 4-35]는 군집 구분의 덴드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이 중에서 1군집에 속하는 7개 국가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도는 0.593, 재정지속도는 0.778을 보이고 있는데, 1군집의 경제활동도는 0.627, 재정지속도는 0.663이다. 호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스위스, 캐나다, 룩셈부르크가 1군집에 해당하는 국가이다.

〈표 4-1〉 경제적 자원을 이용하여 분석한 군집의 특성

군집	사례 수	경제활력도				재정지속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	7	0.627	0.044	0.578	0.695	0.663	0.076	0.569	0.778
2	13	0.527	0.046	0.451	0.608	0.517	0.066	0.425	0.615
3	3	0.383	0.093	0.314	0.489	0.778	0.092	0.672	0.843
4	10	0.434	0.090	0.296	0.561	0.378	0.063	0.302	0.467
5	1	0.079	.	0.079	0.079	0.342	.	0.342	0.342
전체	34	0.494	0.124	0.079	0.695	0.524	0.147	0.302	0.843

두 번째로는 복지수요, 복지충족, 국민행복을 이용한 군집 구분이다. 여기서는 이를 ‘복지집행’의 속성에 따른 분류라고 명명한다. [그림 4-36]은 복지집행을 군집 구분의 지표로 활용한 분석 결과이다. 한국은 2군집 6개 국가 중 하나로, 복지수요도는 0.734, 복지충족도는 0.402, 국민행복도는 0.337을 보이고 있다. 2군집 국가들은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폴란드와 같은 ‘체제전환 국가’들로 복지수요는 평균보다 양호하지만, 복지충족은 쉽지 않은, 그리고 국민행복도는 가장 낮은 군집에 해당한다.

[그림 4-36] 복지집행(복지수요, 복지충족, 국민행복)을 이용한 군집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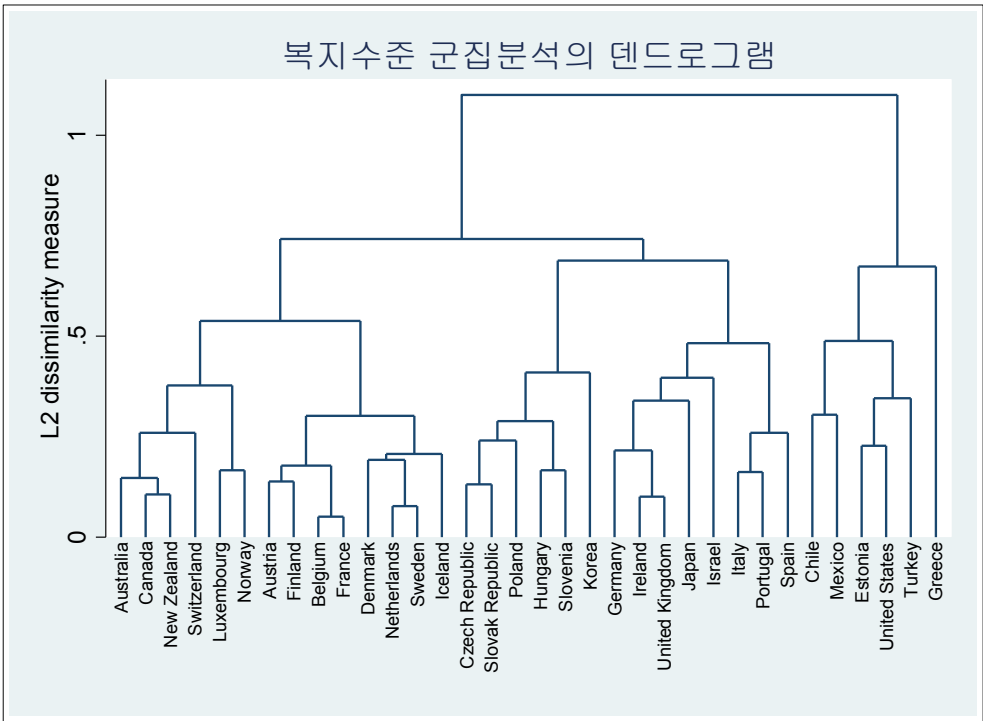


〈표 4-2〉 복지집행을 이용하여 분석한 군집의 특성

군집	사례수	복지수요도				복지충족도				국민행복도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1	7	0.637	0.073	0.566	0.765	0.485	0.049	0.418	0.545	0.683	0.035	0.645	0.738
2	6	0.753	0.043	0.715	0.830	0.470	0.077	0.357	0.553	0.383	0.073	0.271	0.484
3	10	0.737	0.069	0.631	0.852	0.749	0.047	0.688	0.856	0.696	0.060	0.603	0.770
4	5	0.410	0.078	0.317	0.487	0.628	0.086	0.513	0.719	0.543	0.129	0.398	0.734
5	6	0.364	0.066	0.304	0.471	0.317	0.128	0.091	0.435	0.440	0.103	0.342	0.576
전체	34	0.605	0.173	0.304	0.852	0.551	0.173	0.091	0.856	0.570	0.151	0.271	0.770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검토하였던 5개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4-37]과 <표 4-3>과 같다.

[그림 4-37] OECD 국가의 복지 수준 군집분석



〈표 4-3〉 복지 수준을 이용하여 분석한 군집의 특성

군집	사례수	경제활력			재정지속			복지수요			복지충족			국민행복		
		평균	최소값	최대값	평균	최소값	최대값	평균	최소값	최대값	평균	최소값	최대값	평균	최소값	최대값
1	10	0.60	0.53	0.70	0.56	0.37	0.71	0.72	0.57	0.85	0.65	0.43	0.86	0.72	0.632	0.77
2	12	0.46	0.30	0.60	0.41	0.30	0.56	0.56	0.32	0.74	0.62	0.42	0.75	0.61	0.398	0.734
3	6	0.48	0.41	0.59	0.57	0.44	0.78	0.75	0.72	0.83	0.47	0.36	0.55	0.38	0.271	0.484
4	5	0.45	0.31	0.58	0.72	0.57	0.84	0.38	0.32	0.47	0.31	0.09	0.44	0.44	0.342	0.576
5	1	0.08	0.08	0.08	0.34	0.34	0.34	0.30	0.30	0.30	0.37	0.37	0.37	0.44	0.437	0.437
전체	34	0.49	0.08	0.70	0.52	0.30	0.84	0.61	0.30	0.85	0.55	0.09	0.86	0.57	0.271	0.77

우리나라는 앞서 복지집행의 경우에서 확인되었던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슬로베니아와 같은 군집에 속한다. 이와 같은 군집의 속성은 복지집행에서 낮은 순위를 보였던 칠레, 에스토니아, 멕시코, 터키, 미국이 있는 군집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그러므로 복지 수준을 이용한 군집에서는 확연하게 특징적인 2개의 군집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한국과 체제전환국을 포함한 군집이며, 둘째는 칠레, 멕시코, 터키, 미국, 에스토니아와 같은 군집이다. 이들 두 번째 군집은 경제활력도는 그다지 높지 않고, 재정지속도는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인다.

제3절 한국의 복지 수준 변화 평가

한국의 복지 수준이 2011년¹⁴⁾에서 2016년¹⁵⁾까지의 기간에 어떤 수준으로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종합 복지 수준은 2011년 기준 23위에서 2016년 기준 21위로 두 계단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 영역으로 살펴보면 경제활력도는 6위에서 8위로 하락하였고, 재정지속도는 3위를 유지하였다. 복지수요도는 12위에서 10위로 두 계단 상승하였고, 복지충족도는 32위에서 28위로 4계단 상승하였다. 그러나 국민행복도는 2011년 30위에서 2016년에는 33위로 3계단 하락하였다.

14)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한 세부 지표값의 기준시점은 2008년, 기간평균 기준 기간은 2005~2008년이다.

15)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한 세부 지표값의 기준시점은 2014년, 기간평균 기준 기간은 2010~2014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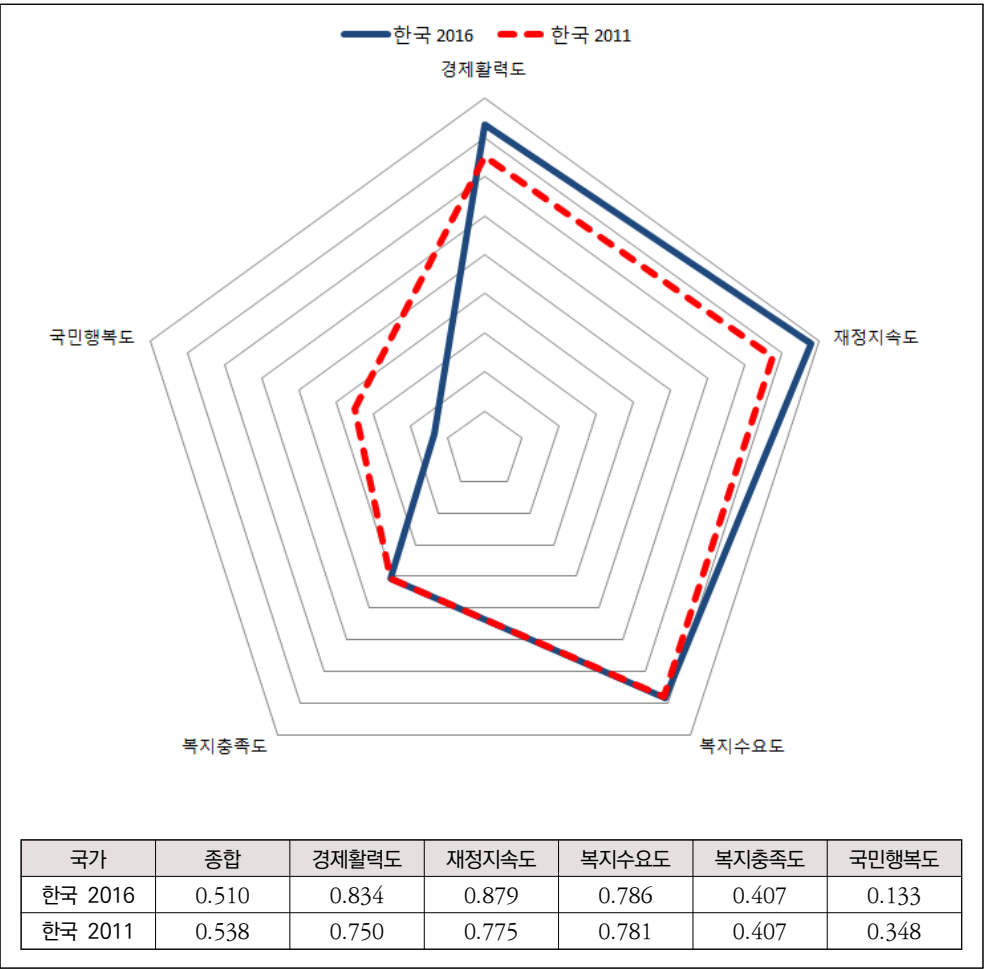
〈표 4-4〉 한국의 복지 수준 변화

국가		경제활력도	재정지속도	복지수요도	복지충족도	국민행복도	종합
2016	대한민국	0.593 (8)	0.778 (3)	0.734 (10)	0.402 (28)	0.337 (33)	0.529(21)
	OECD	0.494	0.524	0.605	0.551	0.570	0.555
	최소값	0.079	0.302	0.304	0.091	0.271	0.315
	중앙값	0.512	0.498	0.648	0.536	0.618	0.549
	최대값	0.695	0.843	0.852	0.856	0.770	0.729
2011	대한민국	0.499 (6)	0.588 (3)	0.710 (12)	0.328 (32)	0.332 (30)	0.464 (23)
	OECD	0.392	0.419	0.621	0.510	0.486	0.498
	최소값	0.210	0.224	0.225	0.011	0.164	0.227
	중앙값	0.387	0.420	0.664	0.530	0.545	0.499
	최대값	0.596	0.694	0.847	0.790	0.649	0.669

2011년 대비 2016년에 한국의 복지 수준이 어느 분야에서 발전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의 결과를 재구성하였다. 모든 영역의 측정치는 각 연도별로 다시 한번 최소값-최대값 정규화를 실시하였다. 즉, 2011년에 경제활력도가 가장 높은 나라를 1, 가장 낮은 나라를 0으로 하고 이때 한국의 값을 책정한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2016년의 경제활력도를 측정한다. 이를 통해서 각 연도별 우리나라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 [4-38]이 그 결과이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국민행복도는 상대적 수준에서 크게 하락하였다. 2011년에는 0.348점이었으나 2016년에는 0.133점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경제활력도는 0.750점에서 0.834점으로 상승하였고, 복지수요도도 0.781점에서 0.786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복지충족도는 0.407점으로 두 기간 동일하였다.

[그림 4-38] 한국의 복지 수준 변화



주: 두 시점을 비교하기 위해 종합지수 및 각 영역의 값을 각 연도별로 정규화함.

이상의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그간 종합 순위에서는 높아졌지만, 상대적 위치를 고려한 점수에서는 상위권 국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국민행복도가 그러하다. 연도별 구체적인 지수 분포는 <표 4-5>와 <표 4-6>과 같다.

〈표 4-5〉 KCWI 2016 지표체계 및 가중치로 측정한 2016년 부문 및 종합 지수

구분	종합		경제활력도		재정지속도		복지수요도		복지충족도		국민행복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노르웨이	0.729	1	0.628	3	0.643	8	0.789	5	0.739	6	0.770	1
덴마크	0.719	2	0.561	12	0.372	29	0.791	4	0.856	1	0.754	2
룩셈부르크	0.707	3	0.675	2	0.570	12	0.793	3	0.768	3	0.632	17
네덜란드	0.694	4	0.563	11	0.487	18	0.716	12	0.782	2	0.749	3
아이슬란드	0.682	5	0.573	10	0.465	20	0.852	1	0.688	11	0.705	9
스웨덴	0.678	6	0.608	5	0.461	21	0.665	17	0.749	4	0.745	4
스위스	0.677	7	0.695	1	0.714	4	0.765	7	0.543	17	0.738	5
핀란드	0.654	8	0.485	22	0.425	26	0.713	14	0.746	5	0.709	8
오스트리아	0.632	9	0.545	13	0.386	28	0.743	9	0.712	10	0.603	18
독일	0.608	10	0.595	6	0.508	17	0.705	15	0.545	16	0.661	12
프랑스	0.601	11	0.442	25	0.313	33	0.631	18	0.730	7	0.655	14
벨기에	0.597	12	0.415	27	0.314	32	0.674	16	0.715	9	0.637	16
호주	0.593	13	0.623	4	0.686	5	0.566	23	0.495	21	0.674	11
뉴질랜드	0.586	14	0.526	16	0.615	9	0.624	19	0.478	23	0.725	7
체코	0.572	15	0.451	24	0.566	14	0.830	2	0.530	18	0.484	23
캐나다	0.567	16	0.595	7	0.569	13	0.618	20	0.432	26	0.676	10
아일랜드	0.551	17	0.515	17	0.443	24	0.612	21	0.484	22	0.660	13
이스라엘	0.548	18	0.509	18	0.561	15	0.335	30	0.565	14	0.734	6
슬로바키아	0.532	19	0.485	23	0.610	10	0.768	6	0.463	24	0.405	27
슬로베니아	0.532	20	0.424	26	0.449	23	0.755	8	0.553	15	0.419	26
대한민국	0.529	21	0.593	8	0.778	3	0.734	10	0.402	28	0.337	33
스페인	0.522	22	0.340	31	0.467	19	0.317	32	0.719	8	0.597	19
영국	0.518	23	0.507	19	0.457	22	0.567	22	0.418	27	0.645	15
이탈리아	0.492	24	0.296	33	0.302	34	0.487	24	0.681	12	0.475	24
포르투갈	0.491	25	0.371	29	0.420	27	0.467	26	0.664	13	0.398	28
일본	0.483	26	0.538	14	0.321	31	0.444	27	0.513	19	0.511	22
폴란드	0.482	27	0.506	20	0.556	16	0.715	13	0.357	32	0.379	30
미국	0.475	28	0.530	15	0.572	11	0.412	28	0.374	30	0.576	20
헝가리	0.475	29	0.410	28	0.436	25	0.717	11	0.512	20	0.271	34
에스토니아	0.470	30	0.578	9	0.678	6	0.471	25	0.392	29	0.384	29
칠레	0.443	31	0.489	21	0.843	1	0.357	29	0.243	33	0.555	21
터키	0.400	32	0.314	32	0.672	7	0.322	31	0.435	25	0.348	31
그리스	0.320	33	0.079	34	0.342	30	0.304	34	0.369	31	0.437	25
멕시코	0.315	34	0.345	30	0.818	2	0.315	33	0.091	34	0.342	32
OECD	0.555		0.494		0.524		0.605		0.551		0.570	

〈표 4-6〉 KCWI 2016 지표체계 및 가중치로 측정한 2011년 부문 및 종합 지수

구분	종합		경제활력도		재정지속도		복지수요도		복지충족도		국민행복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노르웨이	0.669	1	0.411	15	0.647	2	0.766	6	0.764	2	0.649	1
룩셈부르크	0.643	2	0.555	2	0.503	8	0.733	8	0.745	3	0.550	15
덴마크	0.643	3	0.374	20	0.422	17	0.776	5	0.790	1	0.628	3
네덜란드	0.639	4	0.450	9	0.406	20	0.783	4	0.727	5	0.641	2
아이슬란드	0.608	5	0.596	1	0.419	18	0.652	19	0.702	6	0.537	19
스웨덴	0.607	6	0.415	14	0.379	22	0.688	15	0.727	4	0.620	4
스위스	0.579	7	0.525	4	0.498	10	0.742	7	0.553	14	0.543	18
핀란드	0.577	8	0.417	13	0.447	12	0.701	14	0.638	7	0.560	13
오스트리아	0.555	9	0.420	12	0.306	28	0.733	9	0.625	8	0.517	20
슬로베니아	0.544	10	0.509	5	0.416	19	0.812	2	0.533	17	0.400	24
아일랜드	0.527	11	0.449	10	0.479	11	0.720	11	0.420	27	0.578	10
프랑스	0.522	12	0.300	29	0.268	29	0.643	20	0.607	10	0.585	9
스페인	0.519	13	0.331	24	0.431	15	0.531	28	0.622	9	0.547	17
벨기에	0.517	14	0.310	27	0.264	30	0.658	18	0.592	11	0.565	12
호주	0.515	15	0.405	16	0.518	7	0.576	24	0.456	20	0.618	6
체코	0.507	16	0.492	7	0.423	16	0.847	1	0.446	21	0.333	29
캐나다	0.501	17	0.391	17	0.436	14	0.682	16	0.410	28	0.574	11
독일	0.497	18	0.369	21	0.374	23	0.670	17	0.459	19	0.548	16
뉴질랜드	0.497	19	0.332	23	0.522	6	0.615	21	0.431	23	0.589	7
슬로바키아	0.493	20	0.539	3	0.442	13	0.806	3	0.424	26	0.291	32
영국	0.484	21	0.378	19	0.367	25	0.594	22	0.434	22	0.586	8
이탈리아	0.471	22	0.210	34	0.224	34	0.579	23	0.575	12	0.550	14
대한민국	0.464	23	0.499	6	0.588	3	0.710	12	0.328	32	0.332	30
이스라엘	0.448	24	0.350	22	0.334	26	0.277	31	0.528	18	0.620	5
그리스	0.443	25	0.272	32	0.229	32	0.545	26	0.536	16	0.455	22
포르투갈	0.440	26	0.283	31	0.328	27	0.551	25	0.549	15	0.360	27
미국	0.435	27	0.425	11	0.393	21	0.471	30	0.373	30	0.510	21
폴란드	0.432	28	0.315	26	0.368	24	0.706	13	0.429	24	0.306	31
헝가리	0.431	29	0.292	30	0.254	31	0.726	10	0.571	13	0.164	34
에스토니아	0.418	30	0.483	8	0.540	5	0.544	27	0.383	29	0.236	33
일본	0.400	31	0.319	25	0.226	33	0.515	29	0.424	25	0.407	23
터키	0.346	32	0.303	28	0.499	9	0.261	33	0.339	31	0.382	25
칠레	0.336	33	0.383	18	0.694	1	0.272	32	0.186	33	0.378	26
멕시코	0.227	34	0.220	33	0.583	4	0.225	34	0.011	34	0.349	28
OECD	0.498		0.392		0.419		0.621		0.510		0.486	

제 5 장 시사점

2016년 측정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2016년의 복지 수준은 2011년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 경제활력도, 재정지속도, 복지수요도, 복지충족도, 국민행복도 모든 지표에서 2011년보다 절대적으로 평가점수가 상승하였다. 또한 OECD 34개 회원국에서의 순위 역시 재정지속도, 복지수요도, 복지충족도 지표에서 상승하였다. 그 결과 동 기간에 종합 점수는 물론 종합 순위 역시 23위에서 21위로 상승하였다(〈표 4-5〉와 〈표 4-6〉 참조).

이와 달리 국민행복도 지표는 2011년과 비교하여 2016년에 점수는 소폭 상승하였지만 순위는 30위에서 33위로 하락하였다. 특히 최소값-최대값 정규화를 통해 OECD 회원국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상대적 위치를 살펴보면 국민행복도 지표의 경우 2016년에 급격히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38〉 참조). 이상의 내용은 본 연구에서 복지 수준 측정 지표로 사용한 경제활력, 재정지속, 복지수요, 복지충족의 경우 그동안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국민행복도지표의 경우 점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순위는 물론 최소값-최대값을 통해 측정된 상대적 위치가 크게 낮아진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측정한 활력도와 재정지속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복지 수요와 복지 충족 역시 점수와 순위에서 개선되고 있다. 반면에 복지 수준을 협의로 정의할 경우에 더 적합한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는 국민행복도는 본 연구의 비교 기간 동안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이는 복지 수준을 측정하는 다른 지표와 달리 현실에서 쉽게 체감되는 국민행복도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로써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의 복지정책은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행복도 지표를 구성하는 개별 지표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민의 행복도가 저하되는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국민행복도를 측정하는 세부지표인 자살률, 합계출산율, 삶의 만족도, 여가시간, 기대수명이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복지정책은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기적으로 복지 수준 변화 추이를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복지 수준 측정 지표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하는 연구를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 김용하, 임성은, 윤강재, 우선희. (2011). OECD 국가의 복지지표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상훈, 김영미, 최영준. (2010). 새로운 복지지표체계 발굴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정해식. (2016). 행복도 추이와 설명요인: UN 세계행복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1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홍원, 강은나, 정해식, 최새은. (2013). 사회복지정책의 현안과 추진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OECD. (2009).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Social Indicators*. Paris: OECD Publications.
- OECD. (2013). *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 Well-being Research*.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4). *Society at a Glance 2014: OECD Social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5a). *Health at a Glance*.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5b). *Society at a Glance*.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6a). *OECD Factbook 2015-2016: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6b). *OECD Factbook, OECD Factbook Statistics (database)*. DOI: <http://dx.doi.org/10.1787/data-00590-en>. (Accessed on 12 August 2016)
- OECD. (2016c). *GDP per capita and productivity growth, OECD Productivity Statistics (database)*. DOI: <http://dx.doi.org/10.1787/data-00685-en>. (Accessed on 17 August 2016)
- OECD. (2016d). *"OECD Economic Outlook No. 99 (Edition 2016/1)", OECD Economic Outlook: Statistics and Projections (database)*. DOI: <http://dx.doi.org/10.1787/9572784d-en>. (Accessed on 18 August 2016)
- OECD. (2016e). *Revenue Statistics: Comparative tables, OECD Tax Statistics (database)*. DOI: <http://dx.doi.org/10.1787/data-00262-en>. (Accessed on 12 August 2016)

OECD. (2016f). *Population Dataset*.

OECD. (2016g).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set, Gini*.

OECD. (2016h). *LFS by sex and age-indicators, Unemployment rate*.

OECD. (2016i). *Social Protection and Well-being, primary private health insurance*.

OECD. (2016j). *Tax-Benefit Models, Net Replacement Rates for 67% AW single earner, previous earnings*.

OECD. (2016k). *Social Expenditure, Public Expenditure of Disability pensions*.

OECD. (2016l). *Suicide rates (indicator)*. doi:10.1787/a82f3459-en (data.oecd.org)

OECD (2016m), *Fertility rates (indicator)*. doi: 10.1787/8272fb01-en (data.oecd.org)

OECD (2016n), *Life expectancy at birth (indicator)*. doi: 10.1787/27e0fc9d-en
(Accessed on 11 November 2017)

OECD (2016o). *Better Life Index (indicator)*.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6)

(<http://www.transparency.org/research/cpi/overview>)

UNDP. (2015). *Human Development Report 2015*.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부 록 <<

부록 1. 가중치 산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표 133

부록 2. KCWI 2016 원자료 135

부록 3. KCWI 2011 지표체계 및 가중치를 활용한 복지 수준 평가 140

부록 1. 가중치 산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표

복지 수준 국제비교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국가들의 복지 수준을 비교하고자, 국가별 관련 지표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귀중한 의견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측정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소정의 사례를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월 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방법			
국가의 복지 수준 평가를 위해 세 번째 칸의 개별지표별 가중치의 합이 100%가 되도록 네 번째 칸의 지표 가중치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 부문 가중치는 개별 지표 가중치의 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률(10%), 경제성장률(5%), 생산성증가율(5%), 1인당 GDP(10%)인 경우 자동으로 입력되는 경제활동도의 부문 가중치는 30%입니다.			
부문	부문 가중치	개별지표	지표 가중치
1. 경제활동도	30%	1.1. 고용률(기간평균)	10%
		1.2. 실질경제성장률(기간평균)	5%
		1.3. 노동생산성 증가율(기간평균)	5%
		1.4. 1인당 GDP(PPPs)(기간평균)	10%
2. 재정지속도	%	2.1. 국가부채비율(기간평균)	%
		2.2. 재정적자율(기간평균)	%
		2.3. 국민부담률(기간평균)	%
3. 복지수요도	%	3.1. 인구부양비	%
		3.2. 지니계수	%
		3.3. 상대빈곤율	%
		3.4. 경제고통지수(실업률+소비자물가지수)	%
4. 복지충족도	%	4.1.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
		4.2. 건강보험 가입률	%
		4.3. 실업급여 대체율	%
		4.4. 영유아 1인당 보육 공공사회지출액	%
		4.5. 인구 1인당 장애연금 지출액	%
		4.6.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	%
5. 국민행복도	%	5.1.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
		5.2. 합계출산율	%
		5.3. 출생 시 기대수명	%
		5.4. 삶의 만족도	%
		5.5. 여가시간	%
		5.6. 국가투명도	%
합계	100%		100%

부록 2. KCWI 2016 원자료

〈부표 2-1〉 경제활력도

국가	경제활력도							
	고용률		실질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증가율		1인당 GDP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호주	72.2	9	2.6	10	1.6	8	44421.5	8
오스트리아	71.2	12	1.3	22	0.8	23	45388.6	7
벨기에	61.9	24	1.2	23	0.6	28	41938.2	13
캐나다	72.0	10	2.5	11	1.2	13	42617.0	12
칠레	61.4	25	4.6	2	2.0	7	20610.5	32
체코	66.8	16	1.0	26	1.1	18	29107.1	24
덴마크	72.9	6	0.7	27	1.0	19	44221.4	9
에스토니아	66.4	17	3.9	3	2.6	4	25221.5	29
핀란드	68.8	14	0.5	28	0.8	24	40129.3	15
프랑스	64.0	22	1.1	24	0.9	22	37881.4	16
독일	72.8	7	2.0	15	1.2	14	43662.3	11
그리스	52.6	33	-4.9	34	-0.6	34	27027.1	27
헝가리	57.4	30	1.3	21	2.6	5	23195.8	30
아이슬란드	80.1	1	1.1	25	-0.3	33	41032.7	14
아일랜드	59.9	27	2.0	16	2.4	6	46383.8	6
이스라엘	64.5	19	3.8	4	1.4	11	31723.6	23
이탈리아	56.3	32	-0.5	31	0.6	27	35233.4	19
일본	71.4	11	1.5	20	1.2	16	35407.7	18
대한민국	64.2	21	3.7	5	3.1	2	32019.4	22
룩셈부르크	65.6	18	3.2	7	1.0	21	91955.7	1
멕시코	60.4	26	3.4	6	0.2	32	16708.7	34
네덜란드	74.0	4	0.5	29	0.8	25	46771.0	5
뉴질랜드	72.8	8	2.2	13	0.4	30	34259.6	20
노르웨이	75.4	3	1.5	19	0.3	31	63893.1	2
폴란드	59.9	27	3.0	8	3.2	1	23067.6	31
포르투갈	62.8	23	-0.8	33	1.2	15	27538.1	26
슬로바키아	59.7	29	2.7	9	2.7	3	26270.3	28
슬로베니아	64.4	20	0.2	30	1.4	10	28822.8	25
스페인	56.7	31	-0.8	32	1.6	9	32731.3	21
스웨덴	73.8	5	2.4	12	1.1	17	44052.8	10
스위스	79.4	2	1.9	18	1.0	20	56359.8	3
터키	48.5	34	5.4	1	1.3	12	18181.6	33
영국	70.2	13	1.9	17	0.5	29	37875.5	17
미국	67.2	15	2.1	14	0.7	26	51265.0	4
평균	66.1	-	1.7	-	1.2	-	37852.2	-
최소값	48.5	-	-4.9	-	-0.6	-	16708.7	-
최대값	80.1	-	5.4	-	3.2	-	91955.7	-
부문 및 지표 순위 상관계수	0.8089	-	0.3461	-	0.0521	-	0.6850	-

주: 이탤릭체 및 밑줄 표시된 지표는 역기능 지표임.

〈부표 2-2〉 재정지속도

국가	재정지속도									
	국가채무 비율		재정수지 비율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험부담률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호주	35.1	5	-3.6	19	26.7	5	26.7	13	0.0	33
오스트리아	95.0	25	-2.6	14	41.8	28	27.5	9	14.3	4
벨기에	116.9	30	-3.7	21	43.7	32	29.8	8	14.0	6
캐나다	88.7	21	-2.0	12	30.6	12	25.8	14	4.8	28
칠레	18.7	2	0.1	6	20.4	2	19.0	28	1.4	31
체코	53.3	12	-2.9	16	33.5	19	18.8	29	14.7	3
덴마크	58.6	14	-1.6	10	47.1	34	47.0	1	0.1	32
에스토니아	12.2	1	0.3	4	32.4	16	20.8	23	11.6	14
핀란드	62.2	15	-2.3	13	42.6	29	30.2	6	12.4	10
프랑스	107.4	28	-4.9	26	43.8	33	27.2	10	16.5	1
독일	83.5	20	-1.0	9	35.9	22	22.1	20	13.9	7
그리스	151.8	33	-9.4	33	34.1	20	23.3	18	10.8	17
헝가리	94.8	24	-3.4	18	37.9	25	25.5	15	12.4	11
아이슬란드	92.9	23	-4.2	23	35.5	21	31.7	3	3.8	29
아일랜드	116.4	29	-12.5	34	28.3	8	23.2	19	5.1	27
이스라엘	78.5	19	-4.0	22	30.5	11	25.4	16	5.2	26
이탈리아	135.7	32	-3.3	17	43.0	31	30.0	7	13.0	8
일본	231.7	34	-7.9	30	29.0	9	17.0	32	12.0	12
대한민국	33.0	4	1.1	2	24.2	3	18.2	31	6.1	24
룩셈부르크	29.5	3	0.5	3	38.2	26	27.1	11	11.0	16
멕시코	46.2	10	-0.2	7	19.3	1	16.3	34	3.0	30
네덜란드	75.2	18	-3.6	20	36.2	23	22.0	21	14.2	5
뉴질랜드	40.0	7	-2.8	15	31.5	13	31.5	5	0.0	33
노르웨이	37.0	6	11.6	1	41.0	27	31.5	4	9.5	19
폴란드	62.3	16	-4.7	25	31.9	14	20.2	26	11.7	13
포르투갈	128.1	31	-7.2	27	32.8	17	24.0	17	8.8	20
슬로바키아	55.0	13	-4.3	24	29.3	10	16.7	33	12.6	9
슬로베니아	66.9	17	-7.3	28	36.7	24	22.0	22	14.7	2
스페인	91.6	22	-8.4	32	32.2	15	20.6	24	11.5	15
스웨덴	47.3	11	-0.8	8	42.8	30	32.6	2	10.2	18
스위스	43.8	8	0.2	5	26.8	6	20.2	27	6.6	22
터키	45.1	9	-1.9	11	27.9	7	20.3	25	7.6	21
영국	99.3	26	-7.4	29	33.0	18	26.8	12	6.2	23
미국	99.7	27	-8.3	31	24.4	4	18.6	30	5.9	25
평균	77.5		-3.3		33.7		24.7		9.0	
최소값	12.2		-12.5		19.3		16.3		0.0	
최대값	231.7		11.6		47.1		47.0		16.5	
부문 및 지표 순위 상관계수	0.4597		0.4970		0.0487					

주: 이탤릭체 및 밑줄 표시된 지표는 역기능 지표임.

〈부표 2-3〉 복지수요도

국가	복지수요도							
	총부양비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경제고통지수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호주	50.5	14	0.337	24	12.8	22	8.8	16
오스트리아	48.4	11	0.280	9	9.0	13	8.1	10
벨기에	53.7	26	0.268	7	10.0	17	10.6	24
캐나다	46.6	7	0.322	20	12.6	21	8.8	17
칠레	44.1	4	0.465	34	16.8	31	9.3	21
체코	48.6	12	0.262	6	6.0	3	6.8	6
덴마크	54.7	29	0.254	3	5.4	2	8.1	11
에스토니아	51.9	19	0.361	29	16.3	29	9.2	20
핀란드	57.1	30	0.257	5	6.8	4	11.5	27
프랑스	57.2	32	0.294	15	8.0	6	11.8	28
독일	52.7	21	0.292	14	9.1	14	6.2	5
그리스	52.8	22	0.343	26	15.1	26	26.6	34
헝가리	47.5	9	0.288	13	10.1	18	10.0	23
아이슬란드	51.1	16	0.244	1	4.6	1	8.3	12
아일랜드	53.3	25	0.309	19	8.9	12	10.8	26
이스라엘	63.3	34	0.365	30	18.6	34	7.3	7
이탈리아	54.4	28	0.325	21	13.3	23	13.9	30
일본	61.1	33	0.330	22	16.1	28	3.9	1
대한민국	36.9	1	0.302	18	14.4	25	6.1	3
룩셈부르크	44.8	5	0.281	10	8.4	7	8.8	19
멕시코	53.1	24	0.459	33	16.7	30	8.4	13
네덜란드	51.8	17	0.283	12	8.4	7	8.8	18
뉴질랜드	53.0	23	0.333	23	9.9	16	8.0	9
노르웨이	51.9	18	0.252	2	7.8	5	6.2	4
폴란드	42.8	3	0.300	17	10.5	20	9.9	22
포르투갈	52.2	20	0.342	25	13.6	24	14.5	31
슬로바키아	40.6	2	0.269	8	8.4	7	13.5	29
슬로베니아	45.6	6	0.255	4	9.5	15	10.7	25
스페인	50.4	13	0.346	27	15.9	27	23.9	33
스웨덴	57.1	31	0.281	10	8.8	11	8.5	14
스위스	48.1	10	0.295	16	8.6	10	4.7	2
터키	47.3	8	0.393	31	17.2	32	18.6	32
영국	54.0	27	0.358	28	10.4	19	8.6	15
미국	50.7	15	0.394	32	17.5	33	7.4	8
평균	50.9	·	0.3	·	11.3	·	10.2	·
최소값	36.9	·	0.2	·	4.6	·	3.9	·
최대값	63.3	·	0.5	·	18.6	·	26.6	·
부문 및 지표 순위 상관계수	0.3091	·	0.8992	·	0.8606	·	0.3186	·

주: 이탤릭체 및 밑줄 표시된 지표는 역기능 지표임.

〈부표 2-4〉 복지충족도

국가	복지충족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건강보험 가입률 (공공 및 민간)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영유아 1인당 보육 공공사회 지출액		인구 1인당 장애연금 지출액		공공사회 지출 비율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호주	44.5	21	100.0	2	31.3	32	4261.8	15	734.2	7	19.0	25
오스트리아	78.1	3	99.9	19	55.0	25	4715.5	13	599.0	9	28.4	6
벨기에	46.6	20	99.0	24	89.0	2	5460.8	11	741.9	6	30.7	3
캐나다	36.7	28	100.0	2	63.9	18	1714.8	29	154.9	28	17.0	27
칠레	32.8	32	92.6	30	55.5	24	1271.0	31	95.3	30	10.0	33
체코	49.0	19	100.2	1	65.0	17	2428.0	24	345.0	19	20.6	22
덴마크	67.8	9	100.0	2	84.2	4	10736.8	4	1027.3	2	30.1	4
에스토니아	50.5	17	94.3	28	54.7	26	1608.0	30	309.1	21	16.3	29
핀란드	55.8	15	100.0	2	70.7	12	7527.9	7	727.0	8	31.0	2
프랑스	55.4	16	99.9	19	69.2	14	8220.1	6	403.7	18	31.9	1
독일	37.5	27	99.8	21	58.8	22	5918.1	10	38.1	33	25.8	9
그리스	66.7	10	86.0	34	38.8	30	834.2	33	207.4	25	24.0	12
헝가리	58.7	13	95.0	27	67.2	16	2786.5	22	273.0	23	22.1	16
아이슬란드	69.2	8	100.0	2	75.7	7	9965.8	5	821.7	5	16.5	28
아일랜드	34.7	31	100.0	2	48.6	28	3001.8	20	514.1	12	21.0	19
이스라엘	61.0	12	100.0	2	89.6	1	2326.4	25	483.9	13	15.5	30
이탈리아	69.5	7	100.0	2	73.3	10	3926.7	17	205.5	26	28.6	5
일본	35.1	30	100.0	2	69.3	13	3348.8	18	149.2	29	23.1	15
대한민국	39.3	25	100.0	2	56.1	23	6097.5	8	41.2	32	10.4	32
룩셈부르크	76.8	4	95.9	26	82.9	5	12107.8	2	859.6	4	23.5	14
멕시코	25.5	33	92.3	31	0.0	34	921.2	32	2.2	34	7.9	34
네덜란드	90.5	1	99.8	21	74.1	9	5952.6	9	895.8	3	24.7	11
뉴질랜드	40.1	24	100.0	2	34.9	31	4951.7	12	312.3	20	20.8	20
노르웨이	49.8	18	100.0	2	67.4	15	11998.3	3	1325.5	1	22.0	17
폴란드	43.1	22	91.3	32	44.9	29	1890.6	28	221.5	24	20.6	21
포르투갈	73.8	6	100.0	2	75.0	8	2233.1	27	439.4	17	25.2	10
슬로바키아	62.1	11	94.2	29	62.1	19	2324.4	26	287.0	22	18.4	26
슬로베니아	38.4	26	100.0	2	85.6	3	2792.0	21	172.7	27	23.7	13
스페인	82.1	2	99.8	21	77.6	6	3344.7	19	468.5	14	26.8	8
스웨덴	56.0	14	100.0	2	60.9	21	13149.3	1	536.1	11	28.1	7
스위스	40.2	23	100.0	2	73.2	11	3987.7	16	584.9	10	19.4	23
터키	75.7	5	98.4	25	52.6	27	417.7	34	46.9	31	12.5	31
영국	21.6	34	100.0	2	19.8	33	4526.8	14	458.2	15	21.7	18
미국	35.2	29	90.9	33	61.3	20	2765.8	23	442.9	16	19.2	24
평균	52.9		97.9		61.4		4691.6		439.0		21.7	
최소값	21.6		86.0		0.0		417.7		2.2		7.9	
최대값	90.5		100.2		89.6		13149.3		1325.5		31.9	
부문 및 지표 순위 상관계수	0.6040		0.3750		0.7207		0.7506		0.7348		0.6788	

주: 이탤릭체 및 밑줄 표시된 지표는 역기능 지표임.

〈부표 2-5〉 국민행복도

국가	국민행복도											
	자살률		합계출산율		출생 시 기대수명		삶의 만족도		여가시간		국가투명도 (부패인식지수)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지표	순위
호주	12.2	19	1.8	11	82.4	7	7.3	8	14.4	30	79.0	12
오스트리아	13.9	25	1.5	25	81.6	14	7.1	11	14.6	26	76.0	15
벨기에	16.7	29	1.7	14	81.4	18	6.9	14	15.8	5	77.0	14
캐나다	10.5	11	1.6	18	81.5	16	7.4	5	14.4	29	83.0	8
칠레	10.3	10	1.8	12	79.0	26	6.5	19	14.9	16	70.0	19
체코	13.3	24	1.5	22	78.9	27	6.6	18	15.0	13	56.0	27
덴마크	11.3	16	1.7	17	80.8	25	7.5	3	15.9	4	91.0	1
에스토니아	17.3	30	1.5	20	77.2	31	5.6	30	14.9	17	70.0	19
핀란드	14.2	26	1.7	15	81.3	21	7.4	5	15.2	10	90.0	2
프랑스	14.4	27	2.0	4	82.8	6	6.4	21	16.4	1	70.0	19
독일	10.7	13	1.5	24	81.2	22	7.0	13	15.6	7	81.0	9
그리스	4.2	2	1.3	31	81.5	16	5.6	30	14.7	23	46.0	31
헝가리	18.0	31	1.4	27	75.9	33	5.3	33	15.0	12	51.0	29
아이슬란드	11.8	18	1.9	6	82.9	5	7.5	3	14.1	31	79.0	12
아일랜드	10.8	14	2.0	5	81.4	18	6.8	16	15.3	8	75.0	17
이스라엘	5.5	4	3.1	1	82.2	10	7.1	11	13.9	32	61.0	24
이탈리아	6.3	5	1.4	28	83.2	4	5.8	27	14.9	18	44.0	32
일본	18.7	33	1.4	26	83.7	1	5.9	26	14.9	21	75.0	17
대한민국	28.7	34	1.2	34	82.2	10	5.8	27	14.7	25	56.0	27
룩셈부르크	12.3	21	1.5	23	82.3	8	6.7	17	15.2	10	81.0	9
멕시코	5.2	3	2.2	2	74.8	34	6.2	23	12.8	33	35.0	34
네덜란드	10.5	11	1.7	15	81.8	13	7.3	8	15.9	3	87.0	5
뉴질랜드	12.4	22	1.9	7	81.6	14	7.4	5	14.9	19	88.0	4
노르웨이	10.9	15	1.8	13	82.2	10	7.6	1	15.6	6	87.0	5
폴란드	14.7	28	1.3	32	77.7	30	6.0	25	14.4	28	62.0	23
포르투갈	10.0	9	1.2	33	81.2	22	5.1	34	14.7	24	63.0	22
슬로바키아	9.6	8	1.4	29	76.9	32	6.2	23	14.9	15	51.0	29
슬로베니아	18.6	32	1.6	19	81.2	22	5.7	29	14.8	22	60.0	25
스페인	7.5	6	1.3	30	83.3	2	6.4	21	15.9	2	58.0	26
스웨덴	11.4	17	1.9	8	82.3	8	7.3	8	15.2	9	89.0	3
스위스	12.2	19	1.5	20	83.3	2	7.6	1	15.0	14	86.0	7
터키	2.6	1	2.2	3	78.0	29	5.5	32	12.2	34	42.0	33
영국	7.5	6	1.8	10	81.4	18	6.5	19	14.9	19	81.0	9
미국	13.1	23	1.9	9	78.8	28	6.9	14	14.5	27	76.0	15
평균	12.0		1.7		80.8		6.6		14.9		69.9	
최소값	2.6		1.2		74.8		5.1		12.2		35.0	
최대값	28.7		3.1		83.7		7.6		16.4		91.0	
부문 및 지표 순위 상관계수	0.1132		0.4480		0.5049		0.9083		0.3867		0.8408	

주: 이탤릭체 및 밑줄 표시된 지표는 역기능 지표임.

부록 3. KCWI 2011 지표체계 및 가중치를 활용한 복지 수준 평가

본 연구는 KCWI 2016을 이용하여 현재의 복지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2011년 기준과 비교하고 있다. KCWI 2016은 지표수, 지표의 내용 및 가중치에서 2016년 현재 요구되는 복지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가장 크게는 경제활동도 및 재정지속도 분야에 대한 가중치가 낮아졌다.

본 연구는 KCWI 2011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2011년의 기준을 이용하여 2016년의 상황을 평가하고자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부록 3〉에서 KCWI 2011의 지표체계 및 가중치를 이용하여 2016년의 상황을 평가한 결과를 별도로 제시하였다.

〈부록 3〉은 2011년과 동일하게 OECD 30개국의 복지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복지 수요도의 장애출현율, 산재발생률과, 복지충족도의 보육지원율, 장애급여 보장률은 2016년 현재 시점에서 국제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2011년 값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지표를 제외한 수준에서 복지 수준의 발전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가중치 및 지표체계가 KCWI 2016과 다르기 때문에 두 결과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힌다.

〈부표 3-1〉 KCWI 2011 지표체계 및 가중치로 측정한 2011년 부문 및 종합 지수

구분	종합		경제활력도		재정지속도		복지수요도		복지충족도		국민행복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노르웨이	0.734	1	0.658	3	0.696	7	0.785	3	0.734	4	0.811	1
룩셈부르크	0.705	2	0.654	4	0.680	9	0.736	8	0.796	1	0.605	18
네덜란드	0.675	3	0.661	2	0.554	21	0.761	5	0.642	14	0.793	2
덴마크	0.674	4	0.538	17	0.562	20	0.792	2	0.710	7	0.780	3
스웨덴	0.668	5	0.543	16	0.550	22	0.728	9	0.741	3	0.775	4
스위스	0.661	6	0.711	1	0.714	6	0.751	6	0.537	21	0.635	16
오스트리아	0.641	7	0.607	6	0.520	24	0.746	7	0.717	5	0.581	21
핀란드	0.633	8	0.549	15	0.578	17	0.649	12	0.701	10	0.668	11
호주	0.628	9	0.600	7	0.791	3	0.651	11	0.444	26	0.751	5
프랑스	0.627	10	0.514	20	0.448	29	0.659	10	0.761	2	0.721	8
UK	0.613	11	0.585	10	0.588	16	0.630	14	0.562	18	0.742	6
뉴질랜드	0.612	12	0.509	23	0.725	5	0.606	16	0.538	20	0.741	7
캐나다	0.606	13	0.584	11	0.652	12	0.578	19	0.557	19	0.690	10
아이슬란드	0.603	14	0.550	14	0.498	27	0.800	1	0.516	22	0.713	9
독일	0.592	15	0.590	9	0.570	18	0.514	23	0.664	13	0.588	20
벨기에	0.588	16	0.447	25	0.458	28	0.638	13	0.711	6	0.660	12
스페인	0.588	17	0.511	22	0.615	13	0.411	28	0.706	8	0.657	13
Czech	0.588	18	0.506	24	0.594	15	0.770	4	0.593	15	0.464	24
그리스	0.549	19	0.524	18	0.524	23	0.513	24	0.580	16	0.598	19
포르투갈	0.544	20	0.518	19	0.567	19	0.404	29	0.703	9	0.439	25
Slovak	0.543	21	0.625	5	0.686	8	0.627	15	0.472	23	0.289	28
아일랜드	0.541	22	0.443	26	0.664	10	0.553	21	0.455	25	0.651	15
일본	0.540	23	0.565	13	0.516	25	0.558	20	0.564	17	0.469	23
미국	0.533	24	0.593	8	0.659	11	0.460	27	0.372	27	0.656	14
이탈리아	0.521	25	0.406	27	0.432	30	0.517	22	0.670	12	0.527	22
대한민국	0.499	26	0.575	12	0.775	4	0.593	17	0.363	28	0.190	29
헝가리	0.493	27	0.402	28	0.508	26	0.590	18	0.676	11	0.174	30
폴란드	0.486	28	0.513	21	0.600	14	0.480	25	0.464	24	0.353	27
멕시코	0.443	29	0.379	29	0.845	1	0.473	26	0.080	30	0.618	17
터키	0.389	30	0.190	30	0.802	2	0.253	30	0.311	29	0.437	26
OECD	0.584		0.535		0.612		0.608		0.578		0.593	

자료: 김용하 등(2011). pp.39-61.

〈부표 3-2〉 KCWI 2011 지표체계 및 가중치로 측정한 2016년 부문 및 종합 지수

구분	종합		경제활력도		재정지속도		복지수요도		복지충족도		국민행복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아이슬란드	0.690	1	0.615	2	0.614	10	0.884	1	0.639	14	0.737	6
노르웨이	0.690	2	0.535	12	0.631	9	0.780	3	0.725	9	0.792	1
덴마크	0.687	3	0.508	16	0.568	15	0.766	4	0.817	1	0.746	5
스웨덴	0.668	4	0.563	9	0.520	19	0.675	15	0.796	3	0.757	3
뉴질랜드	0.657	5	0.584	5	0.734	4	0.632	17	0.606	15	0.769	2
네덜란드	0.653	6	0.516	14	0.507	21	0.708	7	0.764	7	0.754	4
호주	0.648	7	0.583	6	0.752	3	0.625	19	0.585	18	0.733	7
스위스	0.646	8	0.565	8	0.716	5	0.744	6	0.538	22	0.730	8
아일랜드	0.632	9	0.604	3	0.609	11	0.687	11	0.582	19	0.716	10
룩셈부르크	0.625	10	0.446	23	0.593	13	0.747	5	0.675	12	0.664	13
핀란드	0.620	11	0.411	25	0.463	24	0.694	10	0.793	4	0.699	11
독일	0.611	12	0.532	13	0.533	18	0.674	16	0.663	13	0.644	16
오스트리아	0.605	13	0.467	20	0.432	26	0.704	9	0.769	6	0.597	19
벨기에	0.602	14	0.422	24	0.387	28	0.685	12	0.801	2	0.661	15
캐나다	0.599	15	0.617	1	0.653	7	0.603	21	0.495	23	0.680	12
Czech	0.598	16	0.545	10	0.557	17	0.789	2	0.586	17	0.514	21
프랑스	0.595	17	0.403	26	0.366	30	0.676	14	0.770	5	0.722	9
UK	0.591	18	0.573	7	0.566	16	0.611	20	0.562	21	0.663	14
Slovak	0.546	19	0.514	15	0.599	12	0.705	8	0.492	24	0.430	25
스페인	0.544	20	0.369	28	0.518	20	0.379	29	0.749	8	0.643	17
대한민국	0.519	21	0.506	17	0.754	2	0.602	22	0.417	25	0.332	29
미국	0.518	22	0.496	18	0.649	8	0.480	26	0.410	27	0.612	18
폴란드	0.509	23	0.538	11	0.582	14	0.676	13	0.413	26	0.355	28
일본	0.507	24	0.494	19	0.407	27	0.549	23	0.564	20	0.496	23
헝가리	0.506	25	0.464	21	0.494	22	0.629	18	0.598	16	0.274	30
포르투갈	0.505	26	0.392	27	0.480	23	0.447	27	0.720	10	0.385	27
이탈리아	0.497	27	0.290	30	0.377	29	0.528	24	0.684	11	0.553	20
멕시코	0.483	28	0.601	4	0.801	1	0.502	25	0.143	30	0.496	24
터키	0.463	29	0.451	22	0.684	6	0.393	28	0.385	29	0.424	26
그리스	0.412	30	0.345	29	0.462	25	0.367	30	0.407	28	0.496	22
OECD	0.581		0.498		0.567		0.631		0.605		0.602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